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

국민권익위원회

들어가며

지난 '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청렴과 공정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반부패 개혁에서부터 조직 내부의 혁신, 대민 서비스 투명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4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발굴된, 각급 기관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였던 100건의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었던 우수사례들을 기관 유형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니, 많은 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기관에는 필요한 순간 언제든 펼쳐들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국민께는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부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관의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공유·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반부패 노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책을 공유하여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NTENTS

제1편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개요 및 지난 4년간 운영성과 01

제2편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우수사례 07

제1장 중앙행정기관

1. 고위직의 솔선수범
- 장·차관이 주도하는 청렴 활동 – 고용노동부 11
-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 운영 – 보건복지부 14
-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 추진 체계 마련 – 법무부 16
- 고위직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멘토링」 운영 – 인사혁신처 19

2.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퇴직자 이해충돌 통제를 위한 종합적 시책 추진 – 특허청 21
- 갑질 유발요소가 있는 법령제도 자체 발굴·정비 – 환경부 24
-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 – 고용노동부 26

3. 내부 조직문화 개선
- 부서단위 청렴자율실천프로그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29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개선 – 법무부 32

4. 민간 참여
-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도입·운영 – 국가보훈처 34
- 민간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국세청 36
-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38
-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 법무부 41
-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42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 청탁·유착 우려사건 심사 강화 – 경찰청 45
-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 예방대책 마련 – 국가보훈처 48
- 국방 시설공사 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구축 – 국방부 51
- 문화재수리 정보공개 및 자격 대여 · 알선 행위 제재 강화 – 문화재청 53
- 근로감독 업무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 고용노동부 56
- 병무감사시스템 및 부패경보시스템 구축 – 병무청 59

제2장 지방자치단체

1. 계약분야 비리예방

- 공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65
- 공사분야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 전라남도 68
-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70
-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 개선 – 서울특별시 강동구 73
- 부패 차단 청렴기동감찰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75

2. 내부조직문화 개선

- 갑질근절을 위한 「갑질거부권 제도」 도입 및 「갑질영향심사」 실시 – 대구광역시 77
- 구청장 선도의 「청렴 확대간부회의 및 청렴정책 추진」 – 서울특별시 은평구 80

3. 민간참여

- 예산 바로쓰기 주민 감시단 운영– 충청남도 83
-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고용감찰관제 운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85

4.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 부산광역시 88

5.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 경기도 90
- 공공기관 통합채용으로 공정성 강화 및 균등한 기회 보장 – 경기도 94

제3장 교육청

1. 계약분야 비리예방

- 시설사업 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마련 – 강원도교육청 99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단계별 관리 강화 – 대전광역시교육청 101
- 물품 계약 투명성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 부산광역시교육청 104

2. 민간참여

-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 경기도교육청 106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형 종합감사 – 경상남도교육청 109

3. 소통 및 협업

- 교육감 주도 현장 소통·공감 강화 – 경상북도교육청 112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구현 – 부산광역시교육청 114

4. 청렴교육

-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체험교실 – 강원도교육청 117

5.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공익제보센터 전담팀 운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 경기도교육청 119

제4장 공직유관단체

1. 갑질문화 개선

- 익명신고 활성화를 통한 갑질 근절 체계 구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25
- 「60계 지킴이북」 등 갑질 근절 콘텐츠 대국민 공유 - 한국서부발전 127
- 고질적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 이행체계 구축 - 한국지역난방공사 132

2. 계약분야 비리예방

- 신사옥 건립공사 청렴이행 점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4
- 지하철상가·광고관리 업무 부패유발요인 개선 - 서울교통공사 136
-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도입 플랫폼, 「道公기술마켓」 - 한국도로공사 138
- ICT를 활용한 투명한 구매 프로세스 구축 - 한국수력원자력 141
-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 예방 - 한국전력공사 144
- 시공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 한국전력공사 146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 근로복지공단 148
-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50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수급 및 가짜정보를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 통제 - 한국에너지공단 153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대행의 투명성 제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6
- 예산 부당집행 예방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9

4. 기관 간 협업

- 정보공유, 협업을 통한 사기수출 방지 - 한국무역보험공사 162
- 국제사회와의 반부패협력 강화 - 한국수출입은행 165
-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유통 불공정 거래 개선 – 국민건강보험공단 169

5.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관리자

- 기관장 솔선수범 청렴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강원랜드 170
- 관리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한국거래소 173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패트롤」 및 「다가치 HiFive」 운영 – 근로복지공단 176
- 새내기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 「청렴루키」 운영 - 부산항만공사 178
- 전 직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 한국남부발전 180
- 전 직원 의견수렴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2
- 감사실의 소통기능 강화, 「행복문화상담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84
- 경영진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 참여기반 청렴시책 추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187
- 노사합동 청렴목민관 제도 운영 – 한국수력원자력 189

7. 민간 참여

-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2

•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94
• 명예시민감사관 협업 사규 부패영향평가 도입 – 한국동서발전 197

8. 청렴문화 확산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실천 및 확산 – 근로복지공단 200
• 전체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행 – 한국전력기술 203
• 국민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205

9. 부패사건 제재 강화
• 부패행위 협력업체 강력 제재로 안전한 철도 제공 – 국가철도공단 207
• 주차비 횡령사건 끈질긴 추격전, '철퇴' 맞고 방출 – 국립공원공단 210
• 부정부패 수출기업 무역보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한국무역보험공사 213

10. 연구개발 분야 부패방지 시책
•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신고보상제도 활성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5
• 국내 최초 온라인 메타기획·평가시스템 적용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18
• 국가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한국연구재단 221
•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 한국연구재단 223

1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서울교통공사 225
• 임직원의 주식 등 거래 자가점검제도 시행 – 한국수출입은행 229
•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선제적 구축 – 한국지역난방공사 230
• 퇴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접촉 제한제도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2

12. 자가진단 등 자율적 개선제도 운영
• 감사이전 자체 치유 프로세스 도입·운영, 「비위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및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 인천도시공사 234
• POSA 청렴문화지수 개발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37
• 적극적 의미의 '청렴' 재정립 및 청렴성 진단 도구 개발 – 국민건강보험공단 241

13. 채용비리 근절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신뢰받는 채용시스템 – 국립공원공단 243
• 인공지능을 활용한 「Full 블라인드 채용」 도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6

14. 청탁금지제도 운영 내실화
• 실제 금품수수 반환 및 신고를 이끌어낸 모의신고 훈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9
• 외부 지원 공무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및 관리체계 강화 – 한국마사회 252
• 외부강의등 신고 실태 전수조사 및 신고시스템 도입 – 한국수출입은행 255

제5장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1. 계약분야 비리예방

- 의약품 입찰 방식의 공정성·투명성 개선 – 한국원자력의학원 261

2.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기관장 주도의 청렴교육 강화 – 국립암센터 264

3. 민간협력 강화

- 민간 계약위탁업체와의 청렴파트너쉽 강화 – 서울대학교병원 266
-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업체와 청렴동행 교육 시행 – 충북대학교병원 268

4.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 연구비 및 연구과제 관리 강화 – 인천대학교 270
-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한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전남대학교병원 273
- 학사관리 및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 대책 – 부경대학교 276

5. 청렴교육

- 예비 사회인 단계의 재학생 대상 정규 교양 교과목에 청렴특강 편성·추진 – 서울대학교 279

부록 : 색인 (기관별 가나다순) 283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

제1편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개요 및 지난 4년간 운영성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개요 및 지난 4년간 운영성과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1.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개요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실적을 외부·내부전문가단의 서면평가,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을 거쳐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유형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발표한다.
-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 등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대규모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청렴도를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제도와는 구별되는 시책평가만의 특징이다.
-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그 해의 주요 반부패 정책 기조와 부패 현안 이슈 등 반부패 개혁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취약 분야를 집중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체계(총 19개) 〉

계 획(1개)	실 행(9개)	성과·확산(7개)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등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등

※ 감점 : 신고자보호규정 미준수 등(2개)

- 현재('21.8월) 국민권익위에서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청렴수준 종합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모형은 '22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평가 체계 개편, 지표 보완·개선, 평가대상 기관 확대 및 특화 모형 적용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2. 문재인 정부 반부패·청렴 정책방향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부정부패 척결 및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대표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및 사회각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청렴정책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생활적폐 9대 과제(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행위 근절, 불법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근절)에 따라 소관부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 반부패 개혁,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의 정책기조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반영되었다.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청탁금지 제도에 대한 교육 강화, 신고체계 구축, 우수 변화사례 등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에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부패 국정과제[1]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 추진 노력 및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의 발굴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지표가 반영되었다.

- 2019년부터는 국민 체감,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행 중심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결과의 실효성 등 효과성 평가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우수한 청렴시책을 공공부문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보완하였다.

---

1) 국정과제 1번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번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등
2)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18.4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50대 과제로 구성

- 2021년에는 연초에 발생한 LH 사태에 대응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지표를 보완하였으며, 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 지표도 강화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의 변화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부패 이슈를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조직차원에서도 반부패·청렴시책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조직 내 관행이나 인식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지난 4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 성과

- 문재인 정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주요 성과는 공공기관의 청렴기반 및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및 청렴역량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 상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률이 2017년도 99.1%에서 2020년도 99.6%로 상승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연초에 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고려하면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률의 증가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기관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은 2017년도 79.7%에서 2020년도 95.2%로 대폭 상승하여 청렴리더십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등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률도 2017년도 63.8%에서 2020년도 79.0%로 상승하였다.

-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인의 시각에서 기관의 업무관행이나 절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이 2017년 246개 기관에서 2020년 256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및 감사 권고를 수용하는 기관이 확대되는 등 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2019년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평가대상 기관 중 97.4%가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에도 청렴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선 노력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청렴사회협약에 대상 공공기관 중 94.2%가 청렴사회협약을 이행하는 등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민간부문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국 공공기관이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관장 및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같은 청렴 리더십, 구성원의 업무활동 및 조직생활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청렴문화, 개방성과 투명성 향상을 통한 내·외부 통제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렴거버넌스,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부패취약업무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역량 및 구성원의 청렴인식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련 요인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주요 요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통합 개편이후로도 반부패 정책방향을 충분히 반영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보완을 통해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

제2편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우수사례

제1장 중앙행정기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청

제4장 공직유관단체

제5장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01

중앙행정기관

1. 고위직의 솔선수범
2.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3. 내부 조직문화 개선
4. 민간 참여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1. 고위직의 솔선수범

장·차관이 주도하는 청렴 활동

고용노동부

추진배경

-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 의지 전파 및 실천이 매우 중요
  - 장관 주재 청렴정책 점검회의 등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조직 내 반부패 문화 확산
-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척결을 위해 공정채용 관련 제도와 관행 정착을 추진해왔으나, 민간 영역의 불합리한 채용은 여전하여 장관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민간 확산 필요

추진내용

1 대내적 활동 "조직 내 청렴의식 내재화"

- 장관이 주재하는 청렴정책점검회의*를 운영하여 청렴정책 심의·의결 및 추진 단계별 이행 상황 점검, 부패방지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및 청렴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실시

  *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 참석('19년 4회, '20년 5회)

- 공공기관 청렴실천 결의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관 주재 산하 공공기관장(11개 기관) 회의를 개최,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결의
  - 장관은 이후에도 산하기관장 회의 시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 채택 사실을 언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
- **(제도개선 노력)** 갑질 및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실시('19.4월, '20.5월)
  - 갑질 행위 절차, 예방대책 등을 담은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19.6월), 조직 내부의 상호 존중·배려 문화 조성

  * ①하급자, ②민원인·직무관련자, ③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를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제시(각 유형별 '실제사례' 포함)

● **(현장 소통)** 「본부-지방관서 간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여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업무행태·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현장중심의 청렴정책 추진

- '19년 총100회(장관3회, 차관11회), 건의사항 총846건 중 502건 수용 · 추진
- '20년 총73회(장관1회, 차관6회), 건의사항 총563건 중 357건 수용 · 추진

* 조치사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원격훈련기관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수사관 수사기법 교육과정 신설

● 취약분야 부패 차단을 위해 주요 계약 상대에게 장관 명의 서신 '부패행위 신고 협조문' 발송(2천만원 이상 계약상대 101개소)

2 대외적 활동 "공정사회 선봉 역할"

● **(청렴정책 주도)** VIP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확산 방안」을 고용부 장관이 발표('19.11월), 후속조치 보고('20.6월)

* 공공부문 채용비리 방지장치(면접관 제척·기피 등) 강화, 블라인드 채용 등 능력중심채용 안착 지원,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공정채용기법 공유 등

● **(민간 협력 강화)** 장관과 6대 금융협회* 간 「청렴사회를 위한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20.2월), 공공부문 공정채용 방식을 민간에 최초 적용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민간 공정채용 노력)** 채용절차법 개정*('19.7월), 우수사례 14점 선정·시상**, 집중 캠페인 실시 등 추진

* 채용 관련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수수 등 금지(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직무 수행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 행위 금지(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민간·공공의 우수사례 14점 시상(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 **(청렴 특별강연)** 차관은 국민일보가 주관한 「반부패·청렴교육과정」에서 지자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상임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18.12.5.)

* 주요내용: '합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정책 추진 강조, 원·하청 관계에서의 평등·공정·정의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추진성과

- 장·차관의 주도적인 청렴활동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조직 내 반부패 문화 확산
  - 현장소통을 통한 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 쇄신
  - 기관장의 의지와 고위직의 노력으로 직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사건 발생률은 감소 추세

〈 비위 사건 징계 현황(발생일 기준)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원(명)	6,110	6,847	7,354	7,567
비위(징계)건수	33	32	33	28
발생률(%)	0.54	0.47	0.44	0.37

-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청렴의식 내재화에 기여

1. 고위직의 솔선수범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 운영

보건복지부

추진배경

- 침체되어있는 조직 내부 청렴도 향상(3년 연속 4등급)을 위해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으로 갈등 해소 필요

- 직원들의 개인고충 해결 등을 위한 "공감소통관"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 고충 해소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선정 및 위촉

- 직원들의 자율적 투표로 남녀 국장 각 1명을 공감소통관으로 선정하고, 장관님이 직접 위촉장 수여

* 직원과의 대화('19.7.22) 등을 통해 직원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 후 국장급을 (가칭)옴부즈만으로 구성하여 상시 직원 애로사항 조치 필요 (장관 지시사항 '19.8.5)

추진내용

- **(운영경과)** 공감소통관 임명·운영('19.9월)*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및 직원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

* 현직 국장급 대상자 중 본인 의사 확인 후 전 직원 투표 결과 다득표자를 추천

** 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혁신행정·양성평등담당관 등 관련과로 구성, 정기회의를 통해 고충민원 및 인사, 갑질, 성폭력 등 연계민원 해결 노력

- **(운영절차)** ① 상담(고충직원→공감소통관) → ② 조치지시(공감소통관→협의체) → ③ 조치상황 보고(협의체→공감소통관) → ④ 조치상황 안내(공감소통관→고충직원)

세부 운영절차

① 고충직원이 문자, 메일 등으로 공감소통관과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상담
  * 상담은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문자, 메일상담 병행
② 공감소통관이 협의체(소관부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조치 지시
③ 협의체(소관부서) 등에서 공감소통관에게 조치상황 보고(1주일 이내)
④ 공감소통관이 고충직원에게 조치상황 안내

추진성과

- **(소통창구)** 직원개인고충 상담·해결 및 직원 소통의 구심적 역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 **(운영개선)** 개인고충 외에도 야간당직 근무방법 개선, 파견공무원 주거지원비 지급 등 조직 운영의 합리화 도모
- **(청렴도향상)** 내부소통의 획기적 개선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 2등급 상승,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도입 초기 운영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직원 공감대는 있었으나, 이용 실적이 미비(주2~3회 상담실적)
  -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감소통관의 전 직원 안내 메일 발송, 재실여부 실시간 확인 조치 등을 시행('19년 하~)
- 국장급 공감소통관 외에 8~10인의 '다정소통관(무보직서기관, 고참 사무관)'을 추가 위촉, 접근성 제고 및 조직의 소통능력 향상('20년~)

1. 고위직의 솔선수범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 추진 체계 마련

법무부

추진배경

- ’19년 청렴도평가 하락(2등급→3등급)과 부패방지시책평가의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부문의 낮은 평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장관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 “고위직이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책이거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리더십 제고 과제이므로, 고위직 대상의 시책이나 청렴리더십 제도 시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권장함(’19년 법무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보고서 中)”

추진내용

부패위험성진단평가 개선 (’20. 4. 28.)		반부패 · 청렴추진위원회 발족 (’20. 5. 15.)		부서장 대상 청렴워크숍 (’20. 10. 28.)
간부들 스스로 청렴수준진단, 자기주도적 변화 유도	+	장관 주축으로 반부패컨트롤타워 구축(분기별 1회 회의 개최)	+	갑질 주요 계층(부서장) 대상 갑질 감수성 제고 워크숍 실시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 반부패 추진 동력 강화

- 소속기관 부서장 이상 부패위험성진단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불신 증가, 평가결과 환류 체계 미흡으로 기존 진단체계의 개편 검토 필요성 제기

    ※ 진단결과 총점만 제공하여 해결방안 제시가 없고, 고위직 청렴도 점수의 해당기관 청렴마일리지 연계로 소속기관 직원들의 불만 가중 및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발생
  - 피평가자의 자가진단을 병행 실시하여 평가자의 결과와 비교, 차이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게 하여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평가참여율을 청렴마일리지에 연계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

    ※ 단순히 청렴수준 비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있도록 개선

평가자 평가결과와 자가진단과의 Gap이 큰 간부 등 부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실시, 직원이 선정한 최고의 청렴한 상사 공개 등으로 청렴리더십 제고

● 장관 주재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위원회 발족 · 운영

- 반부패 · 청렴 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구성원간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리자급이 참여하는 청렴 협의체 구성

법무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13명) : 장관(위원장), 차관 및 실 · 국 · 본부장
- 추 진 단(10명) : 감찰관(단장), 실 · 국 · 본부 주무 부서장

반부패 · 청렴추진단	반부패 · 청렴추진위원회	부서 및 소속기관(전 직원)
· 단 장 : 감찰관 · 위 원 : 실 · 국 · 본부 주무과장	· 위원장 : 법무부장관 · 위 원 : 차관 및 실 · 국 · 본부장	· 부 서 : 반부패 · 청렴정책 이행 · 전 직원 : 교육수료, 행동강령 준수 등

총괄지원팀
- 구성 : 감사담당관실 반부패청렴팀
- 추진위원회 운영 · 관리 및 시책추진

※ '20년 총 4회 개최 : 추진위원회 2회('20.6.9.), 추진단 2회('20.6.10.)

- 장관이 주기적으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구성원의 관심 제고

장관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청렴협의체를 운영, 추진 지연 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반부패 시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실무자의 애로 사항 해소

● 청렴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 갑질실태 조사 토대로 갑질 자가진단 테스트를 제작, 장 · 차관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진단 참여로 관심 제고

소속기관 갑질실태 조사

- **(추진배경)** 매년 청렴도평가에서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신고자 보호 실효성' 항목이 전체 기관 평균점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평가로 실태 조사 필요성 인식
- **(실시기간)** '20. 8. 11. ~ 8. 21. (11일간)
- **(조사대상)** 법무부 소속기관 전 직원 (검찰청 제외) ※ 총 6,014명 응답
- **(조사내용)** 갑질의 경험, 심각성, 주요 갑질 계층 등 총 20문항
- **(후속조치)** 전 직원 갑질 자가진단 레벨 테스트, 조직문화 개선 공모전 실시 등
  ※ 갑질 자가진단 레벨 테스트에 각 기관장 · 부서장 387명 참여

- 조사 결과 갑질 행위 계층으로 지목된 부서장 그룹 대상 갑질 및 신고자 보호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렴워크숍' 개최('20. 10. 28., 109명 참석)

신고자 보호제도(청렴연수원 전문강사)와 갑질근절 소양교육(청렴시민감사관 강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신고자 보호 제도 인식 제고 및 구성원 간 소통 강화

추진성과

●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의 신뢰도 및 환류 체계 강화

Before	After
(청렴수준의 단순한 서열화) • 일방적인 평가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 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리더들의 자기주도적 변화 유도)** • 평가대상자의 자가진단 병행으로 청렴수준 양방향 측정하여 객관성 · 수용성 제고
(기관장 점수 기관 BSC 연계) • 직원들의 불만 증가, 평가 관대화 경향으로 평가의 신뢰도 저하	**(설문 참여율 기관 BSC 연계)** • 참여율 증가로(87.4% 참여, 전년대비 16.7% 증)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 고위직의 청렴 솔선수범으로 추진 동력 및 구성원 관심 제고

Before	After
(실무자 중심의 청렴 추진) • (정책) 실무자 간 협의 · 추진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에 애로사항 빈발, 관심도 down ↳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12건 중 8건 추진곤란**	**(고위직이 리드하는 청렴)** • (정책) 장관 및 감찰관 주재 각 회의체 운영으로 추진동력 강화, 관심도 up ↳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12건 모두 정상추진**
• (교육)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73.0%	• (교육)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91.5%
• (참여) '청렴의 날' 부서장 이상 참여 56명	• (참여) '청렴의 날' 부서장 이상 참여 497명

● 원인 분석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및 고위직 인식 개선

Before	After
(청렴도 제고 노력 다소 부족) • '20년 청렴워크숍 실시 전, 참여자(부서장)의 갑질 이해도 7.93점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20년 청렴워크숍 실시 후, 참여자(부서장)의 갑질 이해도 8.60점
• 매년 '업무지시의 공정성'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항목 전체 평균에 미달	• '20년 청렴도 평가 결과, '업무지시의 공정성'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항목 전체 기관 평균점 상회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고위직의 솔선수범으로 구성원의 관심 제고되었으나 청렴 정책의 현장성 다소 부족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1. 고위직의 솔선수범

고위직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멘토링」 운영

인사혁신처

추진배경

- 세대 및 직급 차이를 넘는 수평적, 역동적, 협업지향적인 조직문화 조성 필요
  - 특히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등장과 이들의 공직 유입으로 공직 사회도 이들의 특성을 인지하고 세대 간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 증가
- 민간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하여 조직문화 개선 추진

추진내용

- 서로 이해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 직원이 멘토가 되어 간부들에게 젊은 감각 및 가치관 공유
  - **(멘토)** 최근 5년 내 임용된 밀레니얼 세대 직원(80~90년대생)
  - **(멘티)** 국과장급 간부
  - **(방식)** 3(멘토):1(멘티)의 그룹 멘토링, 멘티별 월 1회 이상 멘토링
  - **(주제)** 정시 퇴근·회의 및 보고 방식 등에 대한 가치관 및 최신트렌드 공유
- 공직사회 내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홍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 리버스 멘토링 진행
  - **(멘토)** 최근 3년 내 임용된 밀레니얼 세대 직원(80~90년대생)
  - **(멘티)** 인사혁신처장
  - **(방식)** 대본 없이 주제에 맞춰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진행하는 미니 토크쇼 영상 제작
  - **(주제)** 눈치야근, 회식, 팀원들 간 관계의 거리 등에 대한 가치관

추진성과

- 세대 간 이해도 증진 및 조직문화 개선
  - 서로 간의 차이 뿐 아니라 공통점을 발견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신규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제공하여 인지하지 못하던 불합리한 관행 인지·개선 효과

- 조직 내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 몰입도 증가
  - 신규 직원 및 인사처 간부 간의 업무 외적 친근한 관계 형성을 통한 수평적 소통 활성화
  - 신규 직원을 이해하려는 간부들의 노력을 보고 신규 직원들의 조직 몰입도 증가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멘토들에게 가외적 업무로 인식되거나 간부 대상 솔직한 의견 전달에 부담감을 줄 경우 적극적 참여가 미진할 우려
  - 표준 멘토링 계획안 제공, 회차별 주요 논의 주제 및 내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 멘토 지원을 통해 부담 경감
  - 솔직한 의견전달이 어려운 주제 등은 멘토링前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 후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 활용

- 리버스 멘토링에 익숙하지 않아 상·하급자간 기존 멘토링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
  - 멘토링 시간의 80% 이상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등 멘티들이 지켜야 할 내부규칙 안내 등을 통해 효과적인 리버스멘토링 진행 유도

2.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퇴직자 이해충돌 통제를 위한 종합적 시책 추진

특허청

추진배경

- 청 외부 정책 고객들은 청 출신 변리사가 특허 등 심사·심판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

  * 특허청 청렴도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19년)

- 이에 따라,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심사(심판)관은 청 출신 변리사와의 접촉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인 반면,
  - 청 외부 정책 고객들은 퇴직자에 대한 특혜가능성을 의심하는 등 상호간 인식의 온도차가 다소 존재

- 지식재산권 심사·심판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및 퇴직자로 인한 특혜가능성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책 추진

추진내용

- 특정 변리사의 소개를 금지토록 하는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현황)** 민원인,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인 소개 요청을 받은 경우 퇴직자 등 특정 변리사를 추천·소개할 가능성이 존재
  - **(개선)**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특허청 공직자가 특정 변리사 등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20.10월)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5조의7(변리사 또는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사회피제도 확대를 통한 퇴직자의 이권 개입 차단

- **(현황)** 청 출신 변리사가 대리하는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에 대하여 해당 변리사와 친분이 있는 심사관이 회피할 수 있는 규정 미비
- **(개선)**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퇴직 전 동일한 팀에서 업무를 같이한 청 출신 변리사가 대리한 출원에 대해 2년간 회피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회피제도' 확대 ('20.8월)

〈특허·실용실안 심사기준 개정 내용〉

현행(심사기준 제5부제1장제2.2절)	개 정
(5)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심사관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관 임용 직전 3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로부터의 출원을 심사하게 된 재직기간 2년 이하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심사로부터 배제되어 지정 변경된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관은 심사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5)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심사관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관 임용 직전 3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로부터의 출원을 심사하게 된 재직기간 2년 이하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심사로부터 배제되어 지정 변경된다. 심사관은 위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 특허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허청 퇴직자가 대리하는 출원을 심사하게 된 경우에는 심사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퇴직자 참여 제한 등 「특허청 동호회 운영규정」 마련

- **(현황)** 청 각종 동호회에 퇴직 공무원도 정식회원으로 남아 참여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이 함께 활동
- **(개선)** 가입자격을 현직으로 제한, 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는 「특허청 동호회 운영규정」 제정('20.7월)

● 심사·심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 정보 노출 최소화

- **(현황)** 심사(심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화면 등에 대리인 성명정보가 노출되어 사적 이해관계, 편견 등에 영향을 받을 우려존재
- **(개선)** 심사(심판)화면, 합의서 등 서면자료에서 대리인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도록 대리인 성명을 블라인드 처리('20.9월)

추진성과

- 퇴직자 등 특정 변리사 추천·소개를 금지함으로써 청 출신 변리사에 대한 특혜 부여 가능성 차단
- 심사관이 출원 건의 대리인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퇴직자인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고관계의 연결고리를 억제하고,
  -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리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제고
- 청 내 동호회 구성원으로 퇴직자를 배제하도록 하여 동호회를 통한 지속적인 연고 연결고리 근절

2.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갑질 유발요소가 있는 법령제도 자체 발굴·정비

환경부

추진배경

-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 · 불합리한 규제, 포괄적인 재량권 등 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 · 제도를 발굴 · 정비하여 갑질 요인 제거 필요

추진내용

- 갑질 유발 또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법령 · 제도 전수조사('18.7월)
  - 69개 소관 법률 및 1,200여 개의 고시 · 훈령 · 예규, 그 밖의 지침 · 가이드라인 등 내부규정을 대상으로 조사
  - 소관 실 · 국 및 소속 · 산하기관 外 외부 정책고객(시민환경감사관, 민간단체) 등도 조사에 참여하고, 감사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굴*

    * 재량권 남용 5건, 처리지연 3건, 포괄적 위임 및 부당지시 등 총 10건

- 정비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18.8월~)
  - 총 26건의 발굴과제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4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하고, 정비과제 소관 실·국(기관)별로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 조치

〈 정비과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발 굴	수용 (정비과제)	불수용
계	26	24	2
감사관실	10	9	1
실·국, 소속·산하기관	13	13	-
시민감사관	3	2	1

추진성과

- **(재량권 남용 개선)** 개발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전문적으로 심의토록 하는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18.11월)

  * (개선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검토·협의기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존재

- **(민원처리 지연 개선)**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인증과 관련한 시험·검사기관의 기간 준수 의무 및 지연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 '19.11월)

  * (개선 전) 시험 및 검사기간 지연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민원인이 불편

- **(부당 지시 개선)**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맡길 경우 측정값 조작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대기환경보전법 개정, '19.11월)

  * (개선 전)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지시로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저하

- **(불공정한 입찰 가점제 폐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 선정 시 이전에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전차용역 가점(+0.5점)'을 폐지*하여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시 공정한 기회를 부여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19.1월)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선정된 정비과제는 주요 정책현안 업무에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밀려 초기 제도개선의 추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인 협조·홍보와 이행관리(매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성과를 창출

2.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

고용노동부

추진 배경

- 갑질 관행이 공공 · 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

  * (공공)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공관병에 대한 갑질 등

  * (민간)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가맹·대리점 강매 등

공공분야 갑질 실태

- 민간분야 종사자의 41%가 공공분야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 42.5%는 공공분야 갑질을 경험
- 공공분야의 재량 판단권, 영향력 등을 매개로, 상대방(乙)에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행사

  * 자료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국무조정실('18.7.5.)

- 이에,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 관련 규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

추진 내용

1 갑질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내·외부 갑질조사)** 고용부 조직 내 갑질 실태(내부) 및 고용부의 산하기관·직능단체에 대한 갑질 실태(외부) 조사(~'19.9월)

  * 내부: 고용부 관리자 470명 중 갑질 관리자 없음

  * 외부: 산하기관·직능단체에 대한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8%
    갑질발생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39.6%)'가 가장 많음

- **(법령 점검)** 갑질 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소관 법령(제·개정안 포함) 및 국민신문고 제안 내용 실태 조사

  * 법령조사(205건) 및 국민신문고 조사 결과 갑질 유인 요인 미발견

2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고용노동부 자체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시행('19.6월)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유형별 가이드라인)** ①하급자, ②민원인·직무관련자, ③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를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제시
  * ①법령 등 위반, ②사적이익 요구, ③부당한 인사, ④비인격적 대우, ⑤기관 이기주의, ⑥업무 불이익, ⑦부당한 민원응대, ⑧기타 유형
- **(갑질 발생 시 처리) 신고**(피해자, 사건관계인이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제보) → 사실관계 조사(전담직원) → 조치(징계, 수사의뢰 등 조치)
- **(피해자 보호·사후관리)** ①불이익 처우 금지, ②심리치료·법률상담, ②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등 지원, ③조사결과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 **(예방대책)** ①예방교육(연 1회), ②「관리자 역량평가」 결과 '갑질' 항목 점수 6점 이하인 관리자 대상 '갑질 자가진단*' 실시(7월, 12월), ③갑질 실태조사 실시 등

3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규정·제도 개선

- **(피해자 지원 강화)**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 전담직원(1명) 지정 및 온·오프라인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18.8월~)
  * 다우리(내부) 및 홈페이지(외부)에 '갑질 · 성비위 및 비리신고센터(익명)'
  - 고용부 직원이 갑질 피해 등 직장생활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무료 심리치료 지원
    * 〈'18년〉 108명, 457회(직장생활 19.4%), 〈'19년〉 92명, 412회(직장생활 20.4%), 〈'20년〉 166명, 600회(직장생활 26.5%)
-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침 등 개정)** ①갑질 금지, ②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등 금지 규정 신설(「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19.4.5.)
  *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 갑질의 개념, 갑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
  *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 ①갑질, ②갑질·성비위 은폐행위 등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신설(「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 사건 조치기준」, '19.7.25.)

4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별 청렴교육, 일선 기관장·부서장 대상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전국 8개 권역)」 등을 통해 갑질 예방 교육 실시

  * **(본부직원)** ①행동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권익위 담당자 특강('19.5.17.), ②고용부·복지부·산업부 합동 「청렴樂콘서트」 실시('19.7.3)

  *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갑질 퀴즈 등

5 민간분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확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발생 시 조치사항 등('19.7.16.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19.7.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20.1.16. 시행)

- **(제도 정착 지원)** 관련 교육 자료 및 업무 매뉴얼 배포(취업규칙 표준안 반영), 사업장 설명회(157회) · 간담회(172회) · 교육(34회) 추진

- **(사건처리 강화 및 상시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하고, 지역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 '19년 2개소에서 '20년 8개소로 확대 운영

추진 성과

-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정비, 신고센터 운영, 예방교육 등을 통해 내부 구성원 인식 개선 등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민간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 위한 신속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상호 존중 및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

  * **('19.10.22. MBC,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다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직장인 39% 갑질 줄었다" 제하,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직장인 1천명 대상) 결과를 인용하여 갑질지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도

3. 내부 조직문화 개선

부서단위 청렴자율실천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배경

- 중기부에서는 GE의 준법·정책준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부서장 자율과 책임 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는 프로그램인 "과 단위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을 '16년부터 운영

  * 과별 부패 취약분야(과제)를 과장주도하에 직원 간 토의를 거쳐 청렴실천과제로 선정, 이행을 위한 실천 활동을 매년 전개(소관부서, 지방청, 국립공고, 산하기관 등 전부서)

-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을 반영한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을 우리 부 중장기 로드맵으로 업그레이드 실시

  * 청렴·반부패 제도개선 활동을 일회성이 아닌 조직문화로 체화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과제 마련

추진방향

-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회성이 아닌 규정 반영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추진 마련 및 실행
- 프로그램 활동을 가이드라인 제시부터 부서 자율적인 청렴실천활동 전개를 통해 청렴의식 내재화,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 제고

추진내용

- 청렴자율실천프그램은 일선부서·실무자가 청렴현안 과제에 대한이해도가 높아 과장 주도하에 직원 간 토의를 거쳐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
- **(활동과제)** 과장이 직원과 토의를 거쳐 청렴자율실천과제 선정
  - 소관부서의 부패 취약분야(과제)를 청렴실천과제로 선정,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활동을 전개
  - 일회성 과제는 지양하고 2~5년간의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과별 1개 이상 선정·추진

    * 예시 : 제3자 부당개입 참여제한 반영(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마련(인사 규정) 등

- 공직활동과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규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소속기관의 경우 실천과제 중 1개를 중점 실천과제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통계 및 계량화를 통해 효과성 분석 · 확산

● **(부서활동단위)** 과(직제상 과 기준)

* 우리 부 산하기관 33개 기관 포함 · 운영(산하기관 평가에 반영 등)

● 추진절차

실천과제선정		실천계획		실천활동		과제점검
팀장주재 토의·선정	⇒	실천계획 수립	⇒	부서원 실천활동	⇒	성과평가

- **(활동가이드라인)** 과장이 규정 · 지침이 애매모호한 사례 취합 → 직원토의 →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 장기과제 마련 · 실행

* 가이드라인 설정이 어려울 경우 감사실에 제출하면 가이드라인 설정 지원

추진성과

● 세부 운영 기준 강화*,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제도화('19.4.4)

* (기존) 단기 과제 → (강화) 중장기 과제, 제출과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중점실천과제로 별도 관리

** 실적평가를 통해 4급 이상 성과계약에 반영, 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수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전체 산하기관(33개)에 대해 '19년도 신규 도입 · 운영 및 제도화

* 중기부 자체 산하기관 반부패시책평가에 "청렴자율실천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평가

● 부서별 청렴자율실천프로그램 제출과제 실적이 최근 3년간 42% 상승*, 산하기관의 경우 '19년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은 신규로 약 300여건 실시

* ('17년) 본부 75건, 소속기관 135 등 210건 → ('18년) 본부 126, 소속기관 151 등 277건 → ('19년) 본부 137, 소속기관 162 등 299건

● "중점실천과제"를 중기부(소속기관 포함)는 14개 과제, 산하기관은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법령 제정 등 부패취약 분야 개선

※ 대기업 등의 갑질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피해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제·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9.7.16)
-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제정('18.7.23)
- 수탁·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신규 제정('19.7.23)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18.12.13)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정('18.12.13)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과별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누적실적을 피드백하여 과제별 업그레이드 실시
- 성과계약반영 및 산하기관 자체 "반부패 시책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 인센티브 제공

〈 4급 성과계약 지표 및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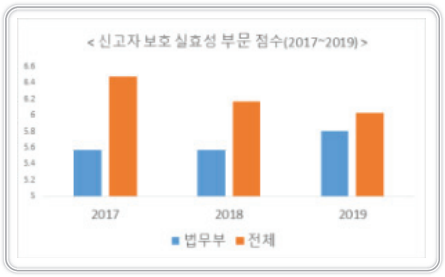
구분	세부지표	결과
청렴자율실천 프로그램 이행(0.5점)	이행 실적 제출 : 0.5점 * 제출 내용이 미흡할 경우 0.2점 감점	0.3점 : OO지방청 1개(서울) 0.5점 : OO지방청을 제외하고 부여

3. 내부 조직문화 개선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개선

법무부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부문 저조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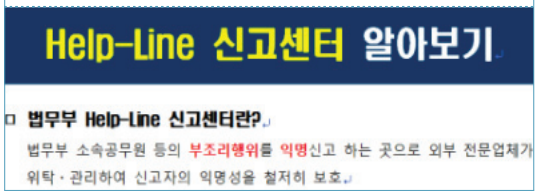
  ※ 매년 전체 기관 평균점에 미달하는 저조한 평가

- 소속기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20. 8. 11. ~ 8. 21., 6,014명 참여),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경우(1,318명)' 중 큰 이유로 '불이익 등 2차 피해'로 응답(288명)하였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응답(402명)

추진내용

- 부패행위 전담조사팀 신설
  - 기존에는 반부패·청렴팀에서 신고 사건의 일부를 처리하였으나 인력의 제한으로 감사부서의 직접 조사건수가 적어 신고자 불만 가중
  - 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부패행위 조사 전담팀을 발족('20. 5. 22.), 비위사건 직접 처리 비율 확대하여 부패통제력 강화

- 신고제도 홍보 확대
  - 직원들이 청렴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렴의 날'을 활용, 신고창구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퀴즈 이벤트 실시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2월 청렴의 날’(’20.2.3.~2.7.)	‘11월 청렴의 날’(’20.11.16.~11.27.)
추진 내용	• 법무부 익명신고게시판 퀴즈 이벤트 및 신고자 보호 문구 응모 실시 (총 263명 참여, 최우수 문구 2개 선정, 공문서 하단 홍보 문구로 활용)  	• 신고자보호제도 퀴즈 이벤트 실시 (총 1,192명 참여)

-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대책 강화
  -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신고 창구’ 개설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렴상황판을 통해 신고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홍보
  - 조사 시 ‘신고자 보호규정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하여, 신고자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신고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강화
  - 소속기관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여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집중 교육 실시(’20. 10. 28., 109명)
  - 법무부 Justice Supporters (법질서 홍보 대학생 자원봉사자) 참여로 ‘신고자 보호제도’ 카드뉴스 및 화면보호기 제작 · 배포하여 신고자 보호제도 이해도 제고

추진성과

주요비위 직접 조사 증가		비위신고 증가		2020년 청렴도평가 제고
’19년 대비 ’20년 166.7% 증가	+	’19년 대비 ’20년 47.6% 증가	▶	‘신고자보호 실효성’ 부문 전체기관 평균점 상회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하므로 교육과 홍보 계속 추진

4. 민간 참여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도입·운영

국가보훈처

추진배경

-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료·법률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과 상이등급 구분 심사
- 국민 눈높이 보훈심사 구현을 위해 전문가 이외에 일반 국민이 보훈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도입·운영

추진내용

- **('17.11월)**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운영방안 마련
- **('18년)**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시범운영(월1회, 총 12회)
- **('19~'20년)**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 제정(처 훈령)·운영
  - **(참여단 구성)**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홈페이지, KTV 등), 120명 이내 Pool 구성
  - **(참여단 운영)** 월1회 개최(원칙), 회의 시마다 지역별, 연령, 성별, 직업 등 균형 감안, 국민참여단 9명 선정·참여
  - **(참여단 역할)** 보훈심사회의 참관 후 심사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의견 서면제출

    * 그 외 참여소감 및 제시된 의견은 보훈심사 제도개선에 활용
  - **(보훈심사위원회)** 참여단 의견을 참고(기속되지는 않음)하여 심의·의결

보 훈 심 사				
국 민 참 여				정 부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팀장 등이 안건 설명, 질의응답	▸	보훈심사회의 참관 •심사위원 의견, 대상자 진술 등 경청	▸	토의 및 서면의견 제출(별도 회의실) •토의, 안건검토 의견서 작성·제출(개별)	▸	심의 · 의결 •시민참여인 개별의견을 심의에 참고·반영

- ('20년) '시민참여인 참석수당' 예산반영
  - '20년 : 14백만 원(13만원/1인), '21년 : 16백만 원(15만원/1인)
- ('21년)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6.8.),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제74조의19, '21.12.9. 시행)

    * 법제화 과정에서 '시민참여제도'가 '국민참여제도'로 명칭 변경
  - 국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21.11월 국민참여인을 공개모집하여 '22년도부터 본격 시행 예정

추진성과

- **(국민 참여)** 보훈심사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참여시킴으로써 보훈심사의 투명성·신뢰성을 보다 더 제고
- **(국민 체감)** 일반국민의 정책 참여에 대한 자부심 부여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 필요성에 공감

  * '20년 참여단의 보훈심사 만족도 조사결과 : 92.3%

국가보훈 및 보훈심사 소개

심사할 안건 설명

참여인 안건검토

4. 민간 참여

민간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국세청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요청한 안건 등을 심의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및 중지함
  -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일부 심의에서 과세관청에 유리한 판단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적인 우려 제기

추진내용

- 국정과제인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이행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추진
  - **(국세청 위원회 신설)** '18.4월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에 대한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납세자가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
  - **(민간위원 위주 구성)** '18.4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세무서·지방국세청 위원회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외의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강화

〈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 구성 비교 〉

※ '18.4월 「국세기본법」 개정 (내부 : 민간)

구 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신설〉	기존	개정	기존	개정
위원구성	16명 (1:15)	18명 (8:10)	18명 (1:17)	14명 (6:8)	14명 (1:13)
회의구성	9명 (1:8)	9명 (4:5)	9명 (1:8)	7명 (3:4)	7명 (1:6)

추진성과

- **(권익보호 재심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21년 6월 30일까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252건을 재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총 82건을 시정

- **(민간위원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리보호에 균형된 시각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교수)를 위촉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제도개선 권고)** '20.1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고,

  - 이를 통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권익침해 발생 전 선제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

  * '20.1월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21년 6월 30일까지 총 6건의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권고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민간위원 확대,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 안건 상정 권한은 법령 개정사안에 해당하여 소관부처(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 및 의견을 전달하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반영

4. 민간 참여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추진배경

- ’19.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 계기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및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체육 분야는 수직적 권력 관계로 피해자의 고발 자체가 어렵고, 현재 엘리트 선수 중심 육성시스템은 선수 인권보호에 한계
- ’19.1.25 관계부처 합동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시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포함

추진내용

-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19.2.~'20.1.)
  -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과 근본적인 구조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출신 민간위원(15명)과 문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 기재부, 여가부 등 부처 차관(5명)으로 구성
  - 논의 주제에 따라, 총 3개 분과위원회(①스포츠인권, ②학교스포츠정상화, ③스포츠선진화·문화) 운영
  - 개혁과제 도출을 위해 총 100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 각계의 의견수렴* 등 진행, 7차례 권고안 발표(’19. 2.~’19. 8.)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세부내용

경력단절 사례자 의견수렴(4.4), 체육인 간담회(4.10), 국가대표 코치 의견수렴(4.12), 장애인체육 전문가 의견수렴(4.16), 시도 체육장학사 간담회(4.17),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4.24), 오산 스포츠클럽 방문(4.24), 미국 NCAA관계자 면담(4.26), 캐나다 Sandra Kirby 교수 간담회(4.26), 경기단체 간담회(5.8), 국가대표 지도자협의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5.10), 대한체육회 관계자 의견수렴(5.16),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5.23), 대한체육회 관계자 의견수렴(5.30), 대한체육회 관계자 의견수렴(7.10) 등

  - 권고안에 대해 52개 이행과제 도출 및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19. 9.~’20. 1.)

〈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 내용(이행과제 수) 〉

1차 ('19.5.7.)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1개) ▴ 스포츠인권기구 설립
2차 ('19.6.4.)	학교스포츠 정상화(33개) ▴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고입)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가이드라인 마련(대입) 등
3차 ('19.6.26.)	모두를 위한 스포츠(1개) ▴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 실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등 스포츠정책 수립
4차 ('19.6.26.)	'스포츠기본법' 제정(1개) ▴ '스포츠' 및 '스포츠권' 정립, 범정부적 (가칭) '스포츠정책위원회' 신설 등
5차 ('19.7.17.)	스포츠클럽 활성화(7개) ▴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등
6차 ('19.8.22.)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편(8개) ▴ 진천선수촌 개선(인권, 학습권, 지도자 처우, 스포츠과학 지원 등) ▴ 연금제도 개편(일시금 전환) ▴ 체육요원제도 개편 등
7차 ('19.8.22.)	체육단체 선진화(1개)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종료('20.1.) 후, 유관기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이행과제별 추진현황 점검**('20.2.~)

* 문체부 2차관(단장), 문체부·교육부 담당 과장, 혁신위 활동 전문가(3명), 체육회 등 유관기관

** 이행점검단 전체회의 총 6회(분기별 1회), 점검반별 회의(월별 1회, 필요시)

- 성과주의 엘리트체육 개편에 핵심적인 10대 과제*를 선정, 중점 점검

* ▴ 학기 중 주중 대회 개최 및 참가 금지 ▴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실효성 제고 ▴ 스포츠클럽활성화 ▴ 스포츠기본법 제정 ▴ 선수등록제도 개선 ▴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체육회 분리(문체부) 등

추진성과

● 토론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스포츠 혁신 과제 도출,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수용성 제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권고(7차례)
- 권고안 총 52개 이행 과제 중 48개 과제 이행*(완료 28, 시행 중 20)

* 체육단체 선진화 등 4개 과제는 체육현장의 공감이 필요한 과제로 현재 의견수렴 및 기준 마련 중

붙임 1 권고사항 이행현황

과제명 : 10대 핵심과제
: 문체부 : 교육부 : 부처 공통

	시 행 (일부시행 포함) (48개)				시행 예정(4개)
	완 료 (28개)		(20개)		
1차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 1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 33개)	학교운동부 계획 학교교육계획 포함	학교운동부 운영비 공개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규정 제정	특정학교 특기자 집중시 선발기준 개선	고입체육특기자 진학가이드라인 마련
	훈련 정규수업 후 실시, 주중훈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최저학력 미달선수 특기자선발 제외**	내신성적 등이 실질 반영되는 기준 마련	
	주말대회 참가시 휴식 보장	학교운동부 지도자 필수직무교육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처우개선	스포츠클럽 기록 진로평가자료 활용	
	합숙소 전면폐지 기숙사 제한허용	학교스포츠클럽 참가목표설정·공표	**학기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학부모 비공식 비용 갹출금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개최 지원			
	최저학력 도달학생만 대회참가 허용	경력전환 학생선수 학습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외 학생프로그램 제공	혹한·혹서기 대회·훈련 최소화, 선수보호	**체육특기자 객관적 지표 개발·활용**	지도자 고용불안정 해소 지원	**통합학생스포츠 축전으로 확대개편**
	주말대회 전환 재정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찬조금 수령 금지	**체육특기자 대입 가이드라인 마련**		
	스포츠클럽-운동부 통합대회 추진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방안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개발·제공		**학기중 대회 주말대회 전환**	**선수등록제도 개선**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1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 수립		
4차 (스포츠기본법제정, 1개)	**스포츠기본법 제정**				
5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7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				
	대회 및 예산 지원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플랫폼 구축	스포츠클럽 등록제 운영
	스포츠클럽 법제화		스포츠클럽 시설사용		
6차 (엘리트스포츠 시스템개선, 8개)	체육요원제도 개편				
	진천선수촌 인권보장 강화	진천선수촌 스포츠 과학지원 강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제도 개편**	**선수등록제도 개편**	
	국가대표 하위육성 체계 개편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생활-엘리트대회 개편**	
7차 (체육단체 선진화, 1개)					**체육단체선진화**

4. 민간 참여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법무부

개요

- 법무부 익명신고게시판(Help-Line)에 교정공무원 피복류 저급품 지급에 관한 비리 의심 제보 접수('19. 2.)

  '18. 12월 교정공무원에게 지급한 피복류(활동성 근무화)가 당초 직원들에게 공지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가로 보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의심되어 조사 필요

-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해 현장감사 실시 등 해결방안 마련

추진내용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19. 3. 28.)	현장감사 실시 ('19. 4. 3.)	조사결과 보고 및 제도개선 마련 ('19. 4. 8.)
교정공무원 피복류 민원 관련 감사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해당 물품 계약담당 기관 대상 감사 실시	계약과정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해당 계약은 계약 업무 전반을 조달청에서 수행하였고, 수요기관의 부패 개입 가능성 발견 안됨 • 다만, 총액입찰방식에 의해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되면서 낙찰 차액이 다소 크게 발생		• 가격 外 품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방법 변경 제안 •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 공지할 것을 권고

추진결과

- '19년 교정공무원 피복류(활동성 근무화) 입찰 방법 변경 · 공고('19. 5.)
  -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입찰 참가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입찰 방법을 변경하여 품질 제고
- 교정공무원 활동성 근무화 입찰 과정 청렴시민감사관 참관('19. 7.~현재)
  - 제안서 평가 시, 청렴시민감사관과 감사부서 공무원 참관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주요 입찰과정 법무샘(내부통신망)에 공지('19. 9.~현재)
  -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 계약상대자 선정결과 및 공급 일정 등 공지

추진성과

- 계약과정 공개 및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로 투명성 · 신뢰도 제고

4. 민간 참여

중소기업 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배경

- '18.4.18.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청렴사회는 공직사회 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 필요 강조
- 우리 부, 공공부문인 산하기관, 민간영역인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 중소기업계가 힘을 합쳐 한 차원 높은 청렴활동 전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 문화를 확산

추진내용

- 중소기업 분야 청렴사회 실천 협의회 구성
  - 일 시 : 9. 28(금) 14:10~15: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 협의회 참여기관 : 38개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33개, 중소기업 직능단체 5개 기관 등

〈 협약식 행사 사진 〉

추진성과

- 중앙행정기관 최초 청렴사회 협약 체결
  - 중기부,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의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분야 청렴 실천협약」을 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도입 ·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협약 업무 매뉴얼」에 우수사례로 등록('19.1)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수혁신사례로 인사혁신처에 유공자 추천(인사혁신처, '19.10)

- 또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 민관협의체」를 별도로 운영(전국 10개)

  * 20회 이상 회의 개최, 청렴UP행사 등 전국적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다수 추진

-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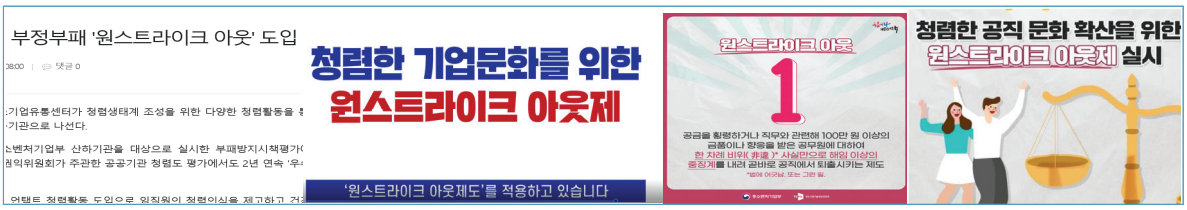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금품 수수 징계양정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중기부 행동강령 금품수수 양정기준(100만 원 이상 수수 시 파면)을 중기부 및 산하기관 모두에 적용·확대

* 권익위 :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비위 유형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 처분

  -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 양정기준을 산하기관에도 적용
  - '20년 10월 기준 산하기관 34개 중 27개 기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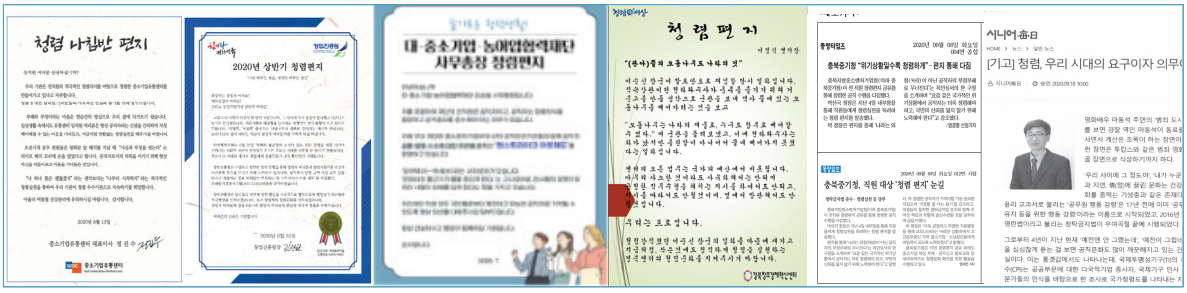
    * 적용률 79.4%로 전년 적용률 54.5% 대비 45.7% 상승↑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 자료 〉



- 장관이 먼저하고 중소기업界로 확대하는 「청렴 릴레이 편지」 실시
  - 작성 순서 : 장관 → 차관 → 실장 → 소속기관장 → 청렴사회협의회 참여기관장
  - 방식 : 최초 장관이 직접 작성 · 서명하고 릴레이로 '청렴편지' 작성
  - 편지 내용 : 사자성어, 우화,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청렴자료를 반영하여 재미있고 자연스런 청렴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내용
  - 성과 : 장·차관, 청렴사회협의회 참여기관 등 총 41회 작성

    * 그동안 중기부만 한정하였던 것을 청렴사회협의회 참여기관(24명 참여)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된 사례, '19년 6회 작성 대비 약 7배 증가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우리 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년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등 최근 5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
- 우리 부의 청렴 노력이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독보적인 중기부 청렴 문화를 중소기업 등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관, 소속 및 산하기관장 등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유착 우려사건 심사 강화

경찰청

추진배경

- 최근, 국가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고조된 중요한 시기
- 아울러,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종결 사건에 대한 내부 심사체제 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 증가
  - 특히, 청탁·유착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능 자체 심사 제도를 통한 점검·교육 강화와 구성원에 대한 청렴성 강화 방안 필요

심사체계 개요 및 도입경과

- **(개요)** 경찰 종결사건 관련,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책임 수사를 구현하기 위해 수사심사관(683명) → 책임수사지도관(101명)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 구축 추진 중
- **(도입경과)** '19. 7. 수사심사관 시범운영(수사심사관 6명) → '20. 2.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 계획」 시행(수사심사관 319명, 책임수사지도관 70명) → '21. 2. 「2021 경찰수사 심사체계 고도화 계획」 확대 시행(수사심사관 683명, 책임수사지도관 101명)

추진내용

- **(제도적 점검 강화)** 대표적 유착 우려 사건인 '주요 풍속사건' 및 '전·현직 경찰관 관련 사건'을 3중 심사체계에 따라 사건심사

※ '2021 경찰수사 심사체계 고도화 계획' 상 심사범위에 반영 완료

- **(상시교육 및 환류)** 경찰서 수사과장 주재 「사건 심사 · 분석회의」(월 1회), 수사팀장 주관 일일 회의에서 주요사례* 등 교육 · 환류

  * 전·현직 경찰관 관련 사건 사례 공유 등 각종 주요사례 교육추진

- **(사적 접촉 통제제도 운영)** 주요 유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적 접촉 통제 제도 도입, 현재까지 3가지 형태 제도 운영 중

〈 사적 접촉 통제(금지+신고) 제도 개요 〉

구분	접촉 금지 제도		접촉 신고 제도
	사건관계인 사적접촉금지	불법업소 사적접촉금지	퇴직경찰관 사적접촉 신고
대상자	**(접촉 금지 대상자)** 수사 · 단속 사건의 △ 당사자 △ 변호인 △ 이해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대상자)** ①성매매 ②불법유흥업소 ③사행성게임장 ④도박장 ⑤불법대부업소 종사자	**(접촉 신고 대상자)** 유착가능성 높은 업체*에 근무 중인 퇴직경찰관 * ① 변호사·사무장·로펌 관계자 ② 유흥·단란주점 ③ 노래연습장 ④ 안마시술소·마사지 ⑤ 카지노·게임장 ⑥ 장례식장 ⑦ 함바식당 ⑧ 재개발·재건축 조합 ⑨ 분양 대행 업체 ⑩ 다단계 업체
금지행위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접촉(전화·면담 등) 행위**		금지대상 아님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 접촉이 금지되므로 신고대상 아님 **본인 의사에 반한 접촉 시 ⇨ 사후 신고**(폴넷 사적접촉 신고센터)		원칙 사전신고(사적접촉 신고센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

- **(수사부서장 등 자격제)** 경찰서장 및 수사·단속요원 등 각종 직책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적격 심사 제도 운영, 청렴성 등을 엄격히 검증

수사경과 기준 강화	▶ 수사경과 선발 · 해제 심사 시 '부정청탁·유착비리 전력자' 등에 대한 심사 절차 · 요건을 강화하여 적격여부 엄격 관리 – **(선발)** 수사경과 선발심사 절차를 '해제심사위원회' 수준으로 실질화, 부패비리 전력자의 수사부서 근무를 원칙적으로 차단 – **(해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수사경과 강제 해제사유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신설하여 비위행위자 배제 ※ 〈현행 강제 해제사유〉 △ 직무 관련 금품수수, △ 중대한 인권침해, △ 비수사부서 연속 근무(5년), △ 수사경과 미갱신
수사부서장 자격제	▶ 경찰청 및 시·도청 수사부서장(경무관 · 총경급) 배치 시 청렴도 평가, 주요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배치
풍속단속 요원 적격성 심사	▶ 풍속 단속 부서 전입자에 대해 금품 비위 등 부적절 사유 확인 및 청렴성에 대한 동료평가와 전근무지 관서장 추천 등 검증·배치

- **(수사분야 감찰제도 구축·운영)** 수사경찰의 비위 등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사감찰 기능 신설

추진성과

-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구성원 모두 각종 반부패 제도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자정 분위기 확립 중
-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부패 근절에 기여
- 장기간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구성원의 청렴의식 내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홍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 예방대책 마련

국가보훈처

추진배경

- **(법령 미비)** 보훈단체 수익사업 규제는 유사 법령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사업 추진 유인이 높은 상황
  - 불법적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이 수익사업 승인취소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위법 형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한계
  - 회장 등 불법적 운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임원진 등의 위반 유인 억제 효과 미비
  - 재무·회계에 대한 내부통제 규정 미비로 방만한 수익사업 운영 요인 상존

추진내용

- **(추진 경과)** 총 17개 단체 중 16개 단체를 포섭하는 단체법 개정 완료

  * 재향군인회법 국회 계류 중

5·18민주유공자 단체법 공포[1]	⇨	5·18민주유공자 단체법 시행 및 하위 법령 마련	⇨	4개 단체법 공포[2]	⇨	4개 단체법 시행 및 하위 법령 마련
'21.1월		'21.4월		'21.6월		'21.

* 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익사업투명성 강화 방안 및 재무회계규칙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 최초 통과(3개 단체 포섭)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개 단체 포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개 단체 포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개 단체 포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개 단체 포섭

- **(주요 내용)**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 **(유효기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으로 수익사업 적정 운영에 대한 정기적 조사 권한 확보
  - **(제재)** 명의대여,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과태료, 벌칙 등의 다양한 제재 수단 마련

  * 양벌 규정 도입으로 책임자에 대한 벌칙 부과 가능

- **(승인취소)**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1년간 재승인 제한
- **(재무·회계규칙)**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규칙 마련
- **(정보공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회원의 정보접근 편의성 확보

〈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

기 존		개 선
한번 승인받은 수익사업은 취소나 폐지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운영 가능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으로, 유효기간 종료 시마다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 갱신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승인취소만 가능하고 제재수단 부재	⇨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벌칙(벌금, 징역) 등 제재 가능
승인 취소된 사업도 재승인 제한 없음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 불가
보훈단체의 예산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규칙 부재		보훈단체가 예산 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 시 준수해야할 규칙 도입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 비공개		운영현황·실적을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추진성과

- 감독 시스템 체계화로 사전 감독 강화 + 제재처분 실효성 확보로 사후적 감독 강화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관리·감독 시스템	①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 ②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 도입, ③ 국·공유재산 매각 시 보고의무 신설 등
제재 수단	① 수입사업 승인 취소 시 1년간 재승인 제한 ② 벌칙·과태료 신설 등

- 보훈단체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마련으로 보훈단체 내부 체질 개선 도모
- 회원의 정보이용 편의성 확대로 건전한 감시 기능 확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강화된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 순응성 강화를 위해 교육 시행

  * ’21.1월 5·18민주유공자 단체 관계자에게 개정 법률 설명회 개최

    ’21.6월 13개 보훈단체 대상으로 개정 법률 설명회 개최

    ’21.9월 수익사업운영/미운영 단체를 구분하여 단체별 설명회 예정

- 보훈단체의 자율적 개선 유도, 제재 처분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시행전 개선 가능한 사항을 점검·조치할 수 있는 계도기간 시행

  * ’21.7월~8월 보훈단체 수익사업 건전성 자체 점검 기간 시행

  ** ’21.9월~법시행일(12.9.) 치유 가능한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 완료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국방 시설공사 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구축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추진배경

- 군 시설공사 관련 부패위험 예방시스템 부재로 인해 반복적으로 부패위험 요소(설계부실로 인한 국고금 낭비 등) 발생
- 공사계약 실무자들의 경험과 지식부족으로 계약 및 설계오류에 대한 대처 미흡

추진내용

- 시설공사 유형별 부패발생 가능사례를 작성하여 예방시스템 구축
  - 시설공사, 설계용역 등 자주 발생하는 21개 오류사례 작성 및 교육

    * ex) 설계부실이 부패(국고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

오류사례 1) 00부대 긴급재발진 시설공사 설계변경('17. 7월)

최초 설계내역에 일부공종이 누락되어 설계변경 수정계약을 진행한 결과 추가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협의율(93.88%)로 처리하게 되어, 기존 낙찰율(87.76%) 대비 약 1.9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함.
→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감독관의 철저한 내역검토 필요

  - 부패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업무 유형별(9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 ex) 부패방지(예방) 체크리스트

구 분	확 인 요 소	확 인(특이사항)		
공문접수	• 공문 상 금액과 총괄원가계산서(엑셀), XML(통합원가계산시스템)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내역검토	• 손해배상 공제세부 요율은 각 조합의 요율과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 물량증감/기존계약품목 단가적용 오류 여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검토단계	• 제비율(법정경비율)은 도급내역서와 비교하여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 국방시설본부 등 주요 발주/감독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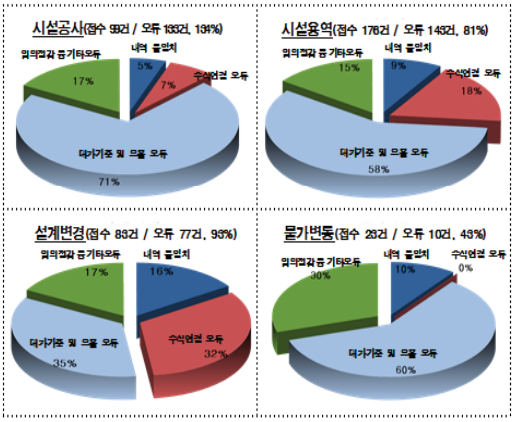
- 시설본부, 지역시설단 등 찾아가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14회)

● 시설공사 설계내역 분석결과를 발주부대와 공유하여 공감대 형성 및 동일 오류사례 재발 방지 추진

○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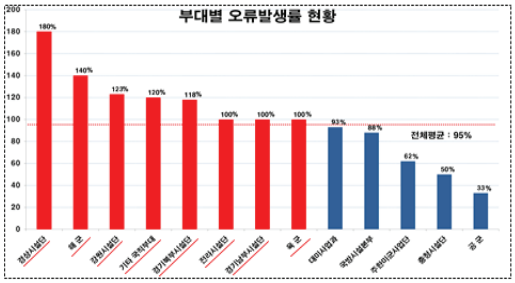
단위 : 건수 / 기준일 : '17.3.31.

유 형	접수	오류 총계	발생률	내역 불일치	계산식 오류	대가기준 및 요율 오류	기타오류
시설용역	176	143	81%	11	32	84	16
시설공사	99	133	134%	7	9	95	22
설계변경	83	77	93%	12	25	27	13
물가변동	23	10	43%	1	0	6	3
계	381	363	95%	31	66	212	54



- 4가지 유형 중 시설공사(신규)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오류형태 중 「대가기준 및 요율 오류」가 9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
  - '17년 최신화된 지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내역을 작성한 것이 원인
  - '17년 공사원가계산 표준요율을 각 부대에 안내공문('16.12.23) 발송했으나 관심 부족
- 설계변경의 경우도 「대가기준 및 요율 오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정계약 귀책사유에 따른 협의율/낙찰률 오적용 등이 원인

○ 부대별 현황 ('별지' 참조)



- 부대별로는 경상시설단, 해군과 강원시설단에서 발주한 사업의 오류발생률이 타부대에 비해 다소 높음
  - 해군의 경우, 자체 설계한 공사계약 내역서에서 「대가기준 및 요율 오류」가 많이 발생
- 시설본부에서는 전체발주량(381건)의 65%인 248건을 발주하였으며, 오류율은 88%로 평균률보다 낮으나 단순 오류가 다수 발생
  - 공운상 금액과 첨부된 엑셀 내역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 **대 책**

○ 시설본부 및 지역시설단, 각군 대상 오류분석 결과를 분기별 지속 통보 및 교육
  - '17년 전반기 공사원가 오류 최소화를 위한 지역시설단 등 순회교육 7회 실시(3월)
  - 재정단 홈페이지 내 「재정지식샘 - '16년 공사원가계산 시 유형별 오류사례」 적극 활용 강조

○ 적산업체(국내 6개사) 대상 군시설공사 원가산정방식 및 제비율 적용 관련 간담회/교육실시
  - 설계도면을 보고 물량 및 단가산출을 수행하는 적산업체들이 재정단 원가산정방식 대신 과거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오류 지속발생

○ 시설본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오류 최소화를 위한 협업 강화
  - 「공사원가계산 오류발생 최소화 교육 및 업무협조」 예정 : 4. 21.(금)

○ 전문가 초청 원가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속 실시

□ **결 언**

매 분기 오류분석을 통해 반복적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성과

● 시설공사 관련 유형별 부패발생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오류 대폭 감소

- '17년도 1분기(95%) → 2분기(87%) → 3분기(71%) → 4분기(58%)

● '17년도 업무추진 결과 계약 요구액 대비 58.5억 원의 예산 절감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문화재수리 정보공개 및 자격 대여 · 알선 행위 제재 강화

문화재청

추진배경

-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수리 특성 상, 사업진행 시 부족한 문화재수리 감시 기능 보완 필요
- 자격증은 특정 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나, 현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만 규정됨

추진내용

- 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문화재수리보고서 인터넷 공개
  - 문화재수리 참여 인력, 수리 내용 등 세부사항 기재를 의무화한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에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써 접근성 및 투명성 제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알선행위 금지 및 자격증 대여 및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 수리기술(능)자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 규정 정비
- 문화재청에서 연간 3~4회 실시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시 자격증 관련 사항 확인 및 청렴교육 실시

추진성과

● 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2018년) 및 수리보고서 공개(2019년)

〈 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년도	구축 내용
2017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진행
2018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 대행사업자 : □□□□□□□ - 사업기간 : '18.2.~'18.12. - 사업내용 : 문화재수리 경력·실적·보고서 관리 등
2019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대행사업자 : □□□□□□□□(수리업체 경력·실적관리) ○○○○○○○○○○○○○○○○(보고서 공개 및 관리) - 사업기간 : '19.1.~계속

〈 수리보고서 공개 실적 〉

년도	보고서 공개 건수	비고
2019	170	
2020	638	
2021	363	'21.7.30. 기준
계	1,17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2020년 12월)

-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재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행위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현행과 같음)
〈신 설〉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금지
〈신 설〉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제5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관련 벌칙	
자격증을 **대여한 자**	(현행과 같음)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신 설〉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14회 실시(2018년~2021년 7월)

〈 현장점검 실적 〉

구 분	'18년 (4회)	'19년 (4회)	'20년 (2회)	'21년 (2회)	계
대 상	168	199	229	187	783
시정조치	495	409	162	92	1,158

기술지도 회의 모습

문화재수리 현장 점검(성곽)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재수리 현장점검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검자·민간 전문가·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등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점검 진행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근로감독 업무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고용노동부

추진 배경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감독 업무수행이 중요
  - 이에 근로감독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 필요

    * 근로감독관 정원(명): ('17) 1,898 → ('18) 2,472 → ('19) 2,894 → ('20) 2,995 → ('21) 3,122

추진 내용

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

추진과제(안) 마련 및 의견수렴('19.5.2.~5.9.) → 근로감독행정 개선 TF 구성·운영(1차: 5.22.~5.23., 2차: 5.31.~5.31.) → 권역별 현장 간담회(6.11.~6.14.) →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7.10.) → 지방관서 종합 간담회(7.11.)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19.9.1.) 및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시행(9.10.)

-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근로감독 대상 선정
  - 최근 3년간의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DB를 지역·규모·업종·위반사항별로 분석 → 이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
  - 언론기사, 인터넷 포털, SNS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로감독의 파급력이 큰 새로운 업종·분야 발굴

    * 지방관서 자체 정기감독 업종 · 분야, 기획형 수시감독 업종 · 분야 발굴에 활용
  -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대상 사업장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노사누리 시스템에 반영

- 근로감독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 **(감독 목적·결과 공개)**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의 목적과 결과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절차 개선('19.8월)

* 감독 실시 전에는 감독 목적을 설명, 감독 후에는 감독 결과에 대해 강평

- **(투명한 사건 처리)** 신고사건 처리 시,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제도 신설('19.8월)

* 회피제도: 신고인 · 피신고인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 가능
* 기피제도: 신고인 · 피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명확한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기피 가능

- **(독립성 보장)** 근로감독관에게 상사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관련 규정 신설

- **(청렴 안내문 배포)** 사업장 지도·감독 시, 사업장 안내 문서에 "청렴 안내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발송하도록 절차 개선('20.3월)

●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 **(채용)** '18년부터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행정직렬 내 "고용노동직류" 신설('18년~)

* 채용 시, 시험과목에 「노동법」(7급 필수), 「노동법개론」(9급 선택) 포함

- **(교육)** 근로감독관으로서 전문성과 업무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근로감독관(신규자 및 업무전환자) 대상 교육과정 개편('20년~)

① 실무 배치 前, 충분한 이론·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 교육기간 확대 (집체교육 및 현장OJT 교육기간 확대 등)

* 연도별 교육기간: ('19) 8주 → ('20) 12주 → ('21) 20주 → ('22) 24주 [예정]

② 감독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온 · 오프라인 청렴교육 실시

③ 사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민원인 응대 심화교육 실시

* 전문강사(경찰,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등)를 통한 상담기법, 감수성 등 교육

추진 성과

● **(공정성·신뢰성 제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처리의 공정성·신뢰성 상승

- 전국 48개 지방관서 민원 신청자('20.3월~10월, 18,896건)

* 민원처리 결과의 공정성: 〈'18년〉 84.0점 → 〈'20년〉 86.8점(+2.8점)
* 민원처리 담당자 신뢰성: 〈'18년〉 84.0점 → 〈'20년〉 86.7점(+2.7점)

- **(청렴도 상승)** 근로감독 관련 사건처리에 관한 청렴도 측정 결과, 「청렴도 지수」 상승
  - 고용노동부의 민원 업무를 경험한 국민 610명 대상 조사
    * (외부청렴도) 근로감독 관련 사건처리: 〈'18년〉 8.61점 → 〈'20년〉 9.08점(+0.47점)

- **(업무역량 강화)**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권리구제율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 성과 달성
    * 신고사건 1건당 처리일수: 〈'18년〉 50.72일 → 〈'20년〉 43.93일(-6.79일)
    * 권리구제율(체불근로자 청산 비율): 〈'18년〉 74.5% → 〈'20년〉 75.0% (+0.5%p)
    * 고객만족도(근로기준분야): 〈'18년〉 83.8점 → 〈'20년〉 85.3점(+1.5점)

추진 시 애로사항 극복방안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참여하는 「본부-지방관서 TF」를 운영,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 도출

- 매월 민원인의 불만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전 직원에게 피드백

- 지방관서 민원접수 창구에 업무처리 매뉴얼, 민원서식 작성사례 등을 비치하여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사전 이해도 제고

5.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병무감사시스템 및 부패경보시스템 구축

병무청

추진배경

- 자체감사 시 단순 반복 결함사항 지속적 발생하여, 업무담당자가 오류를 사전에 알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민원처리,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 요구 행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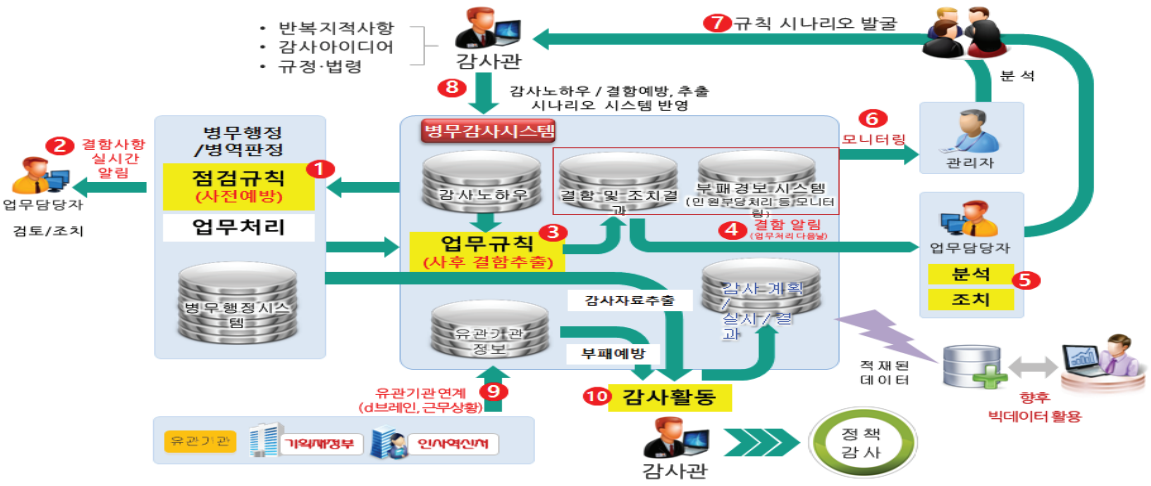
추진내용

- 병무감사시스템 구축·운영('17. 12. 7.)

업무처리 과정에서 착오·과실 등 결함 여부를 일일 점검하여 확인된 결함을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

- **(업무처리 전)** 병역판정검사, 현역, 사회복무 등 업무처리 시 정해진 규칙에 위배될 경우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경보 발령, 실수 방지
- **(업무처리 후)** 결함자료 추출, 업무처리 다음 날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 신속한 시정 조치
- **(시스템 관리)** 처리현황 모니터링, 신규 규칙 발굴 등 시스템 지속 개선

< 병무감사시스템 체계도 >



● 부패경보시스템 구축·운영('16. 11. 30.)

민원 처리 및 실태조사 완료 다음 날 민원인 등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업무처리 시 소극행정 여부 모니터링(해피콜)을 하고 금품등 요구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등을 하는 시스템

- **(배경)** 2008년부터 운영한「청렴지킴-e」제도는 e-메일 설문에 따라 다수가 미확인으로 응답률이 매우 저조, 응답률 향상을 위해 설문 대상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개선)** 업무처리 후 민원인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소극행정 여부, 금품·향응 요구 등 설문조사*

  * 업무처리 만족 여부(예/아니오), 적극행정 또는 소극행정(서술식 답변), 직원 등 부패 관련 신고 안내

- **(결과 조치)** 본청 및 전 소속기관 조사 결과 업무처리
  - 분기별 결과분석, 전 소속기관 공유로 발전방안 강구
  - 불친절, 소극행정 등 부정적 응답 발생 및 금품·향응 요구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시, 신속 확인·조치

  * '21. 2월 2개 민원 추가, 7개 업무(5개 민원, 2개 실태조사 업무) 실시

〈 시스템 프로세스 〉

설문 대상자 추출(자동)	설문 내용 등 발송(자동)	설문 결과 취합(자동)
○ **민원 출원자** * (추출) 민원처리 완료 시 * (대상 민원) 생계감면원, 병역처분 변경원,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19세 수검자 중 3급자, 복무기관재지정자 ○ **실태조사** * (추출) 실태조사 결과 등록 시 *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복무관리 담당자, 지정업체 담당자	○ **발송 시기(알림톡)** - 민원 등 처리 다음 날 ○ **설문 내용** - 소극행정 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 ○ **기타 홍보** - 부조리신고제도, 신고사이트 - 주요 병무 제도 등	○ **시스템 내 실시간 D/B 자동 구축** - 설문 대상별 업무처리 직원, 민원인별 응답 결과 및 응답 내용 등

추진성과

● 업무결함 신속한 정비로 오류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최소화, 병무행정 신뢰성 제고

● 민원처리 시 금품·향응 요구 및 소극행정 여부 설문조사, 직원들의 부패인식, 업무해태 등 원천적 차단으로 청렴한 병무행정 구현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오류 현황, 설문 결과 매일 점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예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과 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 잘못 처리에 따른 병무행정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 적극 설명으로 직원들의 인식 전환*

  * 2020년 소속기관 자체감사 시 설문 결과, 98.0%가 유용한 시스템으로 평가

02

지방자치단체

1. 계약분야 비리예방
2. 내부조직문화 개선
3. 민간참여
4.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5.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1. 계약분야 비리예방

공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추진배경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건설공사 현장이 많은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공사분야에 대한 특별관리 추진
- 또한, 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19) 공사 관리·감독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추진내용

1 청렴책임관제 운영

- 실국장·부서장 중심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 단계별로 점검·관리하는 청렴책임관제 운영
  - **(계약단계)** 공사·용역 착공(착수), 보조금 교부, 민원접수 시 청렴+클린민원안내문,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부서장 명의)
  - **(진행단계)** 공사(용역) 현장방문(또는 영상·유선) 실시(1억 원 이상, 실국장)
    - 업무추진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애로사항 청취 등
    - 대상지를 무작위 추출하여 부패행위 점검 실시(청렴윤리담당)
  - **(완료단계)** 준공 등 사업종료 시 부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갑질·부패행위 파악 및 신고방법 안내

※ '20년 52개 부서 청렴관리대상 2,260명 중 2,154명(95.3%) 청렴문자(안내문, 서한문) 발송

2 주민참여 감독관제

- 건설공사 지역에 살고 있는 해당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위촉, 공사 설계부터 준공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부패·부당행위 감시

※ **(대상사업)** 3천만 원 이상 마을 진입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

(실적) '20년 57개 사업, 감독관 61명
'21년 95개 사업, 감독관 95명

2021년 01월 22일 (금)
한국일보 충청/강원 13A면

세종시 공사현장 '주민 참여 감독관제' 읍면동 사업까지 확대

세종시는 지난해 첫 도입해 57개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올해 95개 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모든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에 건의해 적극 반영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대상을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사업비 3,000만원 이상(관급자재비 포함) 공사로 조정해 읍·면·동 사업까지 확대하고, 감독 참여 횟수도 5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최두선 기자

3 명예감독관제

-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시공 사전 방지와 주민 감독관을 통한 확인, 점검을 통한 부패 사전 방지

※ (대상사업) 시 발주 공사 중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공사
(실적) '18년 1명, '19년~'20년 48명 위촉

4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찾아가는 부패취약현장 점검 및 청렴홍보 활동
  - 부패유발요인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부패행위 점검 및 청탁금지법·공익신고제도 등 홍보

※ '20년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23개소, '21년 산하기관 3개소

건설현장관계자 청렴점검 홍보

산하기관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 그 밖의 공사 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
  - **(부패취약분야 부서 맞춤형 청렴교육)** 공사·용역·인허가 등 부패 환경에 취약한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의무화)** 공사 등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 및 온나라 전자결재 자동 연계된 청렴서약서 양식 반영
  - **(안전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반부패 협의회 운영)** 14개 기관·단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감찰, 안전무시 관행개선 등

  ※ '18.10월 출범 / 개선요구 19건, 시정통보 14건

추진성과

- 공사 계약부터 준공 시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패행위 점검, 관리를 통한 부패행위의 철저한 사전 차단
- 시민들과 함께 공사 분야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시정구현
- 부패 취약 부서 직원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서약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에 기여

1. 계약분야 비리예방

공사분야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전라남도

추진배경

-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금품수수 사례 발생으로 외부청렴도가 민원인, 현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음
- 건설공사의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금품수수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추진내용

-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추진('19~'21년 현재)
  - 감사관을 포함한 직원들이 도 발주사업장을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관리
  - 공사·용역 분야에서 '20년 이후부터 보조금 분야까지 확대하여 추진
    * ('19년) 공사·용역 240개 사업장 → ('20년) 공사·용역·보조금 290개 사업장
  - 과거 단속·적발위주 감사에서 현장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청탁금지법 및 감사 지적사례 홍보 등 사전 예방차원의 컨설팅으로 전환
  - '21년에도 청렴컨설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부패예방 활동 전개

추진성과

-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시공과정에서의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새로운 감사방향을 제시
  - 감사관 등 감사관실 직원의 건설현장 방문 자체가 공무원의 부패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 발생
- 현장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 감동 유도

- 컨설팅 이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관리

  * ('20년) 94% 이상 긍정 답변

● 현장 애로사항 조치(또는 해결) 사례

- ○○지구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사급레미콘 다량 출하로 인한 관급자재 레미콘 적기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관급자재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발주부서에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급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 협조 조치

- 공사장 주변에 젖소농장(150두)이 위치하여 공사 소음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감독부서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감독부서인 ○○과에 통보하여 시공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파공법 변경 검토 등 조치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추진 시

- 발주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이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발주부서가 애로사항을 해결 조치토록 통보하는 매개자 역할에 머문다는 한계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발주부서와 현장관계자 간의 소통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역할의 한계 극복

1. 계약분야 비리예방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추진배경

- 기술능력 등 검증 없이 수의계약 시행으로 질 낮은 성과물 도출 및 기관 이미지 훼손
-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정보 강화 필요
- 발주계획 공개 및 제안서 접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
- 실력있는 여러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기회 제공

추진 내용

수의계약 발주계획 강남구 홈페이지 공개	○ 수의계약 발주계획(사업내용, 계약금액 등) 공개 ○ 수의계약 시 요구사항, 제안조건 등 공개
⬇	
업체 제안서 강남구 홈페이지 접수(3일간)	○ 관심있는 업체의 견적서, 과업실적, 회사소개서 등 제안서 접수
⬇	
업체선정 후 현장방문 및 업체정보 등록 (내부 새올행정시스템)	○ 수의계약업체 기본정보(주소, 자본금 등) 및 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DB 구축 및 현장확인 ○ 과업이행후 만족도 평가결과 내부공개 ○ 업체DB 공유 및 수의계약 시 활용
⬇	
수의계약 체결의 투명성 제고 및 실력있는 업체 POOL 구축	○ 수의계약건 공개 및 업체에 참여기회 확대 ○ 과업이행이 확실한 실력있는 업체 선정

- 사전 발주계획 및 업체선정 '강남구 홈페이지' 내 공개
  - **(대상)** 추정가격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 **(공개내용)** 사업내용, 계약금액 등 수의계약 현황
- **(절차)** 공개 후 업체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업체선정

발주계획 공개 (홈페이지)	➡	업체 제안서 접수 (3일)	➡	제안서 평가	➡	업체선정 및 공개

● 업체 현장 점검

- 점검방법 : 수의계약 발주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 후 출장 복명
- 점검대상 : 신규 수의계약 업체, 기존 등록업체 중 현장 점검 미 실시 업체(향후 재발주 시 점검)
- 점검사항
  - 수의계약 업체 기본정보(소재지, 규모, 재무상태, 상근 직원 수 등)
  - 과업실적, 기술자 및 장비(시설)보유 현황 등 과업 이행 가능여부
  - 변경된 수의계약 방법 홍보

● 선정업체 DB 공개

- 업체 기본정보(소재지, 대표자, 업체규모, 재무상태 등)
- 과업실적 및 기술능역 정보(과업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 선정사유(제안서 내용, 제안금액, 기술자 보유 등)
- 만족도 평가(부서 만족도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업무절차 흐름도)

사전 발주계획 입력(새올행정시스템) → 홈페이지 연계	➡	(업체) 제안서 홈페이지 제출 (부서) 평가, 선정	➡	업체 현장점검, 선정사유 시스템 입력 (※ 신규업체 선정 시 기본 정보 시스템 입력)	➡	계약 요청
해당부서		**업체 및 해당부서**		**해당부서**		**부서 → 재무과**

추진성과

● 투명·공정한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 발주계획 공개 전, 재무과 검토 및 승인을 통해 형식적 발주계획 공개 금지
- 무입찰, 단독입찰을 할 경우 공개 기간 3일 연장으로 업체 참여기회 확대
- 발주계획 공개 생략 가능한 탄력적 가이드라인 마련
-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1,498개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올바른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 후 평가 기준에 딸라 업체 선정하여 공정성 제고
  - 다년간 특정업체와의 관행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여 기회 균등 보장, 다양한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 보장

향후계획

- 수의시담 최소화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
- 명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운영.

1. 계약분야 비리예방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 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진배경

-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효율성의 장점은 있으나 특정업체의 계약 독점 및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저하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심사 필요

추진내용

-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 하향 조정
  - 수의계약 하향 조정 전 2016년~2018년 3개년 평균 1인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계약의 86%이상을 차지
  -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 유착 의혹과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으로 경쟁계약을 촉진하고 낙찰률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 희망기업은 현행 법령대로 수의계약 적용
- 특정업체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 다양한 기업에게 기회배분을 위해 희망기업을 포함 부서별 연 3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시 부서별 사전 검열 도입
- 유사 동일 공정의 3개월 이내 수의계약 분할 발주 금지
  - 동일시기에 유사한 공정의 공사, 용역, 물품을 분할 발주하는 건에 대한 점검 강화

추진성과

- 2020년 1인 수의계약은 규정 전(2016년~2018년)대비 평균 85건 감소, 경쟁계약은 105건 증가

(단위: 건수, 백만 원, %)

구 분			계 약 방 법			소액 1인 수의 건수 비율
			소액 1인 수의	기타 수의	경쟁계약	
2020년	건수	1,894	1,208	371	315	63.8
	금액	139,281	14,098	15,568	109,615	10.1
2019년	건수	1,738	1,189	241	308	68.4
	금액	112,526	11,766	17,750	83,010	10.5
2016년~2018년 (연평균)	건수	1,536	1,293	33	210	84.2
	금액	89,169	15,299	8,037	65,833	17.2

- 희망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희망기업은 현행 법령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0만 원 이하 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기술 경쟁력 제고
- 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분기별 수의계약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하여 연간 3회 이상 동일 업체 계약 및 분할 발주 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에 따라 부서의 업무부담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다양한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여 극복

1. 계약분야 비리예방

부패 차단 청렴기동감찰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배경

- 공사 계약·시행 업체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 시 부패 경험 응답 및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자 지속 발생

추진내용

- 부패 취약 분야「청렴기동감찰반(ᄃᆞᆫ딱 골아줍서*)」운영

  *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의 제주도 사투리

  - **(목적)** 업무 특성상 사업자와의 잦은 접촉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점검함으로써 부패 사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 **(대상)** 부패 경험 응답 지속 발생 분야 및 일정 금액 이상 계약 건, 공직 비리 발생 행정 분야
  - **(내용)** 사업장 또는 현장 방문 → 사업자·공사 관계자 등 면담

  - 금품·향응·편의 요구 등 청렴의무 위반 공직자 부패행위 여부 확인
  - 비위 공직자 신고 안내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따른 고객 불편 사항 접수
  -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여부 파악
  - 인허가 신청 관련 행정기관 방문 시 불친절 응대 여부
  - 전례 답습 불합리한 업무처리 및 갑질관행 등 파악
  - 그 외 애로·건의사항 수렴

추진성과

- 부패 발생 원천 차단 의지 홍보 및 공직 내부 경각심 고취를 통한 종합청렴도, 내·외부 청렴도 수직상승
  - 종합청렴도 5→2등급(외부 5→2등급, 내부 4→2등급)
  -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 경험 응답 대폭 감소('19년 13건 → '20년 3건)
- 사업 추진 부서의 외부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도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
- 공직자의 내재적 행위 기준 강화, '작은 선물도 받지 않기' 등 사업 부서의 청렴 실천 참여 견인

2. 내부조직문화 개선

갑질근절을 위한 「갑질거부권 제도」 도입 및 「갑질영향심사」 실시

대구광역시

추진배경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갑질)’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추진내용

1 갑질거부권 제도 도입(전국 최초)

-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에 대한 이행거부 조항 신설
  -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 거부 가능
  - 거부에도 불구,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 징계 등 조치

대구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2020. 7.10

제21조의3(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에 대한 거부) ①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직무관련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 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갑질 피해 신고 · 지원센터 운영

※ 제규정 갑질영향 심사 지원 : 일상감사팀

2 갑질영향 심사 실시(전국 최초)

- 일상감사 대상에 “조례·규칙 등 제·개정 시 갑질영향 심사” 항목 신설

  ※ 2019. 2. 28.「대구광역시 일상감사 규정」개정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안에 포함된 권위적이고,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는 용어가 있을 경우 순화

-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규정 삭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갑질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

  ※ 절차 : 일상감사 의뢰(입법예고 전) → 일상감사 결과 통보(7일 이내) →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결과 제출(14일 이내)

대구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2019. 2. 28.)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함
- 대구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대상업무 등)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일상감사 범위
  -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제 · 개정 시 갑질영향심사 (2019. 2. 28. 신설)

※ 처리현황

구 분	처리건수	처리결과	조치결과
2019 ~ 2020년	96건	개선의견 43건	반영 43건
2021. 1 ~ 7월	47건	개선의견 16건	반영 16건

추진성과

- 업무 요소별 갑질 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하고, 갑질 발생 시 다양한 신고창구 마련 및 갑질을 거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부패취약점(갑질)을 사전에 파악하고 및 개선함으로써 부패행위 근절 가능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갑질거부권 제도)** 간부공무원의 갑질은 직장분위기를 파괴하고, 대구시 업무관련 민원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간부와 직원간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직원이 생각하는 우리시 갑질사례를 조사·배포하고 홍보함으로써 먼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 전 직원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렴교육 홍보 등을 적극 활용

- **(갑질영향심사)** 갑질영향 심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사 누락 사례가 있어 법제 담당부서에 입안 시 심사 이행여부 확인토록 하고, 일상감사 업무편람,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심사 미이행 방지
  - 입법예고 시 행정절차* 복잡화로 입안부서의 부담 가중 등 불편요인은 있으나 제 규정 입안 시 갑질영향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 인식을 통해 갑질요인 사전 차단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일상감사(갑질영향심사)

2. 내부조직문화 개선

구청장 선도의 「청렴 확대간부회의」 및 청렴정책 추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진배경

- 구민평가 청렴도 영역 점수는 상승하였지만 내부공무원 평가 및 부패사건 영역 점수의 하락으로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 필요
-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적 리더십 발휘로 조직문화 혁신
  - 간부공무원이 앞장서고 전 직원이 공감하는 청렴정책 추진

추진내용

- 구청장 주재 청렴확대 간부회의 개최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 의지 표명
  ⇨ 청렴 1등구 도약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구청장 지시사항 제16호(2020.6.1.)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 서비스 개선
  ⇨ 실시간 계약정보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구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 개선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6급 이상 중간관리자까지 확대 시행, 관리자 스스로 솔선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 간부청렴도 확대 시행(6급 이상), 청렴홍보영상 자체 제작(구청장, 직원), 온라인 청렴 토크 콘서트 개최(구청장, 거버넌스, 직원, 주민 등)

-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강화(2020.9.8. 구청장방침)
  - 실시간 「계약정보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총량제 시스템화
  - 구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방법 개선 → 주민이 알기 쉬운 콘텐츠 구축
  -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구 전체 10회 이내, 기준 추가)
  - 가격대비표 작성하여 객관적 가격검증(권익위, 행안부 권장사항)
  - 수의계약 적용사유, 분할계약 통제 →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 요청 시 감사담당관 사전 협의
  - 계약심사 대상 기준 강화(공사 2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1천만 원 이상)

● 청렴 홍보영상 '슬기로운 청렴생활' 참여 (2020.6.~8.)

- **(추진방향)** 직원 스스로 기획·출연하여 청렴홍보영상 자체 제작 (비예산)
- **(주요내용)** 구청장 청렴메시지, 드라마패러디, 댄스커버, 직원청렴 다짐
- **(영상활용)** 은평구 SNS 및 청사 미디어보드 등 온라인 홍보, 행사시 상영

구청장 청렴 메시지 (1분30초)

은평구 청렴리더로써 내부직원과 은평구민을 향해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 및 청렴실천의지를 담은 메시지 전달

● **(Live)** 온라인 청렴 토크콘서트 '패널 참여'(2020.8.14.)

- **(행사내용)** 청탁금지법, 직장 내 갑질·을질 등 재연드라마 시청 후 자유토크
- **(참석패널)** 구청장, 한국투명성기구, 거버넌스 2명, 직원대표 2명
- **(온라인참여)** 청렴은평거버넌스 단체 회원, 구·동 전 직원, 주민 등 3,120명이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참여, 의견 교환

●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중간관리자' 확대 실시(2020.5.25. 구청장방침)

- **(추진방향)**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대상 확대 및 설문 간소화
- **(주요내용)** '19년 5급 이상 → '20년 6급 이상 중간관리자 포함, 계량지표 간소화
- **(결과활용)** 자기관리를 통한 청렴성 개선 유도, 내부청렴도 향상 기여

추진성과

- 기관장 주도, 중간관리자, 실무자와 실효성 있는 청렴대책 추진
  - 청렴 확대간부회의(구청장, 6월), 실무대책반 1차(팀장, 5월), 2차(담당자, 7월), 구민감사관 회의(8월, 10월) 등을 통해 제안사항 검토·실행
  - 1인 수의계약 운영 강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

- 위로부터 솔선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청렴대책 추진
  - 온라인 청렴토크콘서트,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대국민 공개 확대

- 간부 공무원의 청렴인식 반부패 의지 강화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9.) 5급 이상 → ('20.) 6급 이상 중간관리자 포함

- 조직 내·외부(직원, 주민) 청렴문화 확산
  - 기관장 외 직원 참여 '청렴홍보영상 제작·배포', '은평 청렴BI' 제작

	청렴맛집 은평로 195	맛집, 핫플레이스를 검색하고 찾아가는 트렌드 착안 은평구의 다양한 청렴양식 경험, 공직자의 청렴의지를 담음
청렴홍보영상(부패의 세계) 제작·배포	은평 청렴BI 제작	

3. 민간참여

예산 바로쓰기 주민 감시단 운영

충청남도

추진배경

-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지만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필요
-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도민참여의 확대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충남 재정 운영

추진내용

- 주민자율형 예산 감시체계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용
  - **(지방보조금 감시관 위촉)** 도민참여예산위원(85명)을 지방보조금 감시관으로 위촉('20.8.),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사업자 감시 역할 부여
  - **(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공모 및 시군 추천으로 도민감시단(49명) 위촉('20.9.), 사이버 교육('20.9.)을 통한 역량강화 및 영상회의를 통한 토론회('20.12.)로 도민의 의견 청취 기회 마련
  - **(충남도 청소년 예산지킴이 위촉)** 시군별 고등학생 1명 선발(15명), 미래세대의 예산절감 의식 제고 토대 마련
  - **(시군 주민감시단 신설 및 운영)** 4개 시·군(아산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자체 주민감시단 구성 및 예산 교육, 현장방문 등으로 풀뿌리 감시체계 구축, 예산낭비 사전 예방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 배포)** 보조사업자 대상 모바일·소책자 홍보, 만화로 보는 지방 보조사업 안내서 발간, 부정수급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

- **(보조금 신청 사업자의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의무화)** 민간보조사업자인 개인,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 보조사업 공모자 신청 시 사전교육 의무화(홍성, 아산 / 1,318명 이수)

추진성과

●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로 도민 관심 확대

- **(예산낭비신고제도 적극 홍보)** 온라인(카드뉴스) 및 오프라인(도정신문, 사례집 및 재정정보 리플릿 등)을 통한 제도 홍보로 도민 관심 증가
- **(간편 예산낭비신고제 도입)**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신고(금산군), 네이버 밴드를 통한 신고(홍성군) 등으로 예산낭비신고 접근성 강화

⇨ **2020년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110건으로 전년도 87건 대비 26% 증가**

● 주민 건의 적극 수용으로 지방재정 절감

- **(보령시)** 빗물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위치 변경, 8억 원 절감
-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 공급방식 전환, 38억 원 절감
- **(서천군)** 국민제안 공모로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도입, 5천만 원 절감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95.1%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7억 4천만 원('17년 이후 환수결정 건부터) 중 환수 7억 1천만원 추진
- 전국 유일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시행 및 도·시·군 합동 점검으로 시·군 우수사례 및 문제사업 29건(44개 사례) 발굴

3. 민간참여

공정한 인사채용을 위한 고용감찰관제 운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추진배경

-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공공분야의 채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및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동등한 채용기회 부여 및 실력에 따른 경쟁 등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국최초 고용감찰관제 도입

추진내용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일상감사 실시 : 채용계획의 적정성 확보
  - 고용감찰관제 시행 : 채용절차의 적정성 확보

채용계획 수립	⇒	**① 채용계획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	**채용절차 진행 (② 고용감찰관 참관)**	⇒	채용확정
(채용부서)		**(신규)**		**(신규)**		(채용부서)

구 분	채 용 대 상
도 봉 구	• 구(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 시 (정원 외 상근인력)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산하기관	•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채용의 경우 ※ 산하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 추진시기 : 2020. 1. 1. 채용 건부터

●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채용계획에 대하여도 일상감사 실시

기 존		변 경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계약업무 · 예산관리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계약업무 · 예산관리 업무 · 기타 구청장 및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 채용계획에 대한 일상감사(신규)**

- **(일상감사 의뢰시기)** 채용 공고 예정일로부터 10일 전
- **(일상감사 의뢰방법)** 일상감사 신청서, 채용계획서, 공고(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 채용관련 서류 전반을 첨부하여 의뢰
- **(감사사항)** 채용 필요성, 응시자격, 관련규정 준수여부, 기타 종합적인 공정성 등

● 고용감찰관제 운영

- **(구성·임기)** 위촉 5명, 임기 2년
- **(직무·역할)** 도봉구, 산하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 전 과정(서류, 면접 등) 참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 9. 5. 제정)

■ **채용과정 참관**(조례 제8조제2항)

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4. 평가 기준 · 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 **개선제안 및 감사요구**(조례 제11조)

고용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추진경과

● 고용감찰관제 추진계획 수립 : 2019. 3. 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9. 5.

- 고용감찰관 공개 모집 및 위촉 : 2019. 11. 1.
- 일상감사 확대 및 고용감찰관제 운영 : 2020. 1. 1.
- 2020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기관 수상(서울시 주관) : 2020. 11. 4.
- 일상감사 및 고용감찰관제 운영 현황(2021. 7월 기준)

구 분	총 실적	2020년		2021년	
		실 적	채용인원	실 적	채용인원
일 상 감 사	49건	33건	-	16건	-
고용감찰관 참관	101건 (채용인원: 95명)	56건	39명	45건	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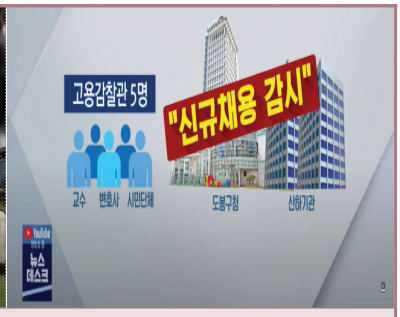
추진성과

- 일상감사 실시 및 고용감찰관제 운영 효과
  - 채용의 계획 및 절차, 관련 규정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 통일된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서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제3자인 고용감찰관의 참관 및 감시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 청탁, 부당 지시, 관행적 비위 등 채용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성 확보
  - 일상감사와 고용감찰관제도의 연계를 통해 채용 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 완료까지 전 과정을 감찰하므로 평등한 기회 부여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

〈 참고: 신문 및 방송 자료 〉

헤럴드경제
도봉구 전국 최초 공공기관 '고용감찰관제' 도입
2019.09.10 09:53
공개모집 통해 교수, 법률가, 회계사 등 5명 위촉 예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인사채용을 위한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봉구 전국 최초 공공기관 '고용감찰관제' 도입
[헤럴드경제, 2019. 9. 10.]



채용 논란부터 원천 차단 "도봉구 고용감찰관제"
[MBC경남 뉴스데스크, 2020.7.30.]

4.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부산광역시

추진배경

- 공익신고, 부패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 보완
  - ‘공익신고’와 ‘부패행위신고’의 신고창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가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동 야기
  - 지방자치단체 일선에 접수되는 신고의 경우 적용에 있어 양 법*간의 경합으로 소관부서에 신고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리신고 필요
  - 내부 신고로 인한 신고자 2차 피해(신분노출, 각종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
  - 신고자 대부분은 신고서식 작성, 증거 확보·제출, 법률 적용 등에 비전문가인 관계로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 발생

- 신고자 보상 근거 부족 및 보상범위 확대 필요
  - 신고자에 대한 보·포상금 및 구조금 등 지급 근거 부족
  - 사건 중요도, 규모, 신고자의 부담 등에 비례한 보상 근거 부재

추진내용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11월)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포괄할 수 있는 ‘공익제보’ 개념 도입
  - 신고대상 행위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자의 부조리 추가

- 부산시 자체 공익제보 대리 변호사단 제도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도로 부산시 자체 대리 변호사단*을 운영하여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반부패, 환경, 복지 등 분야별 배정, 부산시 관내 변호사 9명 구성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서 작성 등 공익제보와 관련한 포괄적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비용은 부산시에서 지급)

- 신고자 보상범위 확대 및 실질적 보상제도 마련
  -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자 보호·보상기준을 마련
  - 조례 상 사건 중요도, 규모, 신고자의 부담 등에 비례한 보상 근거 마련

    * 보상금(30억 원~20만 원), 포상금(최대 2억 원), 구조금(3개월 임금, 기타비용)

-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 전담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효율성 향상
  - 감사부서 내 업무전담 변호사 임용(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19.3월~)
  - 공익제보 적용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공익제보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 **(처리절차)** 신고(직접/대리) → 접수 → 조사(60일) → 회신 → 보상 등

①직접신고 (시 홈페이지) / **②대리신고** (변호사단)	➡	**접수/대상검토** (감사부서)	➡	**조사/처분** (소관부서 or 감사부서)	60일 + (30일) ➡	**결과회신/완료** (감사부서)	➡	**보상금/포상금 지급** (감사부서)

추진성과

- 조례 제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부산시 공익제보 제도 확산
  - 구·군, 산하기관, 공직유관기관 등으로 부산시 공익제보 제도 전파
- 유명무실하던 신고자 보·포상금 실제 지급 → ('20년) 3건, 6백만 원
- 공익제보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 '20년 공익제보 중 20% → '21년 30%, 수당지급(35만원/건)
  - 사전 검토된 내용의 신고접수로 사건조사 용이 및 내부 종결 비율 감소

5.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경기도

추진배경

-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와 불공정 관행은 도정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전반의 공정·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
- 정책의 성과창출 및 청렴 선도국가 도약을 도모하고 공정·청렴의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道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수준 진단·개선을 실시(전국 최초)

추진내용

1 제도적 기반 마련

- 전국최초,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0. 1월)

- 공정·청렴의 경영환경 구축 및 내실있는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해 목적 정비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대상을 정부 반부패 정책방향에 맞추어 확대

  * (종전) 공공기관(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변경) 모든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근거 강화

  * (종전) 평가결과 공개근거 없음 → (변경) 평가결과 공개, 인센티브 및 청렴 · 반부패 정책에 활용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개요)

- (제　　명)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전부개정·시행일 : 2020. 1. 7.)
- (목　　적) 道의 모든 정책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향하게 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전국 최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로 격상 : (종전) 지원조례 → **(변경) 기본조례**
  - 청렴·반부패 정책 대상 확대 : (종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변경) 공직유관단체**
  - 부패방지 정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 내실 있는 청렴·부패진단을 위한 道 청렴도 평가체계 마련

2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실시(매년)

●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공정·청렴」의 「경영혁신 지원」

  ※ 반부패 경영혁신 노력, 경영진 의지 등 평가강화

- 도민의 높은 청렴기준에 따라 청렴도 평가체계 고도화

  ※ 이해충돌, 소극행정, 갑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촘촘한 평가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후관리 방안개선

  ※ 부진 기관장 면담, 청렴멘토링, 경영평가 반영, 포상 등 컨설팅·인센티브 강화

● 평가개요

- **(기간·예산)** 2021.2월~12월, 200백만 원(외부전문평가기관 대행 사업비)
- **(평가대상)** 道 소속 모든 공직유관단체
- **(평가체계)** 기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반부패 역량진단' 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실시
- **(평가결과)** 인센티브(경영평가, 기관표창 등)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

구 분	종합 청렴도 평가(Ⅰ·Ⅱ·Ⅲ 그룹)					반부패 역량진단(Ⅳ그룹)
선정기준	공직유관단체 *(Ⅰ그룹) 현원50인이상 / (Ⅱ그룹) 현원50인미만 / (Ⅲ그룹) 권익위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기관 *설립한지 1년미만, 현원10인미만 등
평가영역	외부청렴도 (51%)	내부청렴도 (27%)	부패방지시책 (22%)	부패사건현황 (감점)	신뢰도저해행위 (감점)	부패방지기반(50%), 반부패교육(30%), 부패영향평가(20%)
평가시기	'21. 3 ~ 12월					'21. 3 ~ 12월
평가지원	「청렴멘토링」 *우수기관과 부진(희망)기관간 청렴그룹 구성 및 멘토링을 통한 청렴도 진단·개선					

〈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업무처리 흐름 〉

경기도	2021년 道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권익위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계획 통보 시 평가지표확정
⇩	
공직유관단체	외·내부 청렴도 명부, 실적보고서* 제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역량진단
⇩	
용역사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 평가완료 후 최종 보고서 제출
⇩	
경기도	평가결과 검증, 결과발표 및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 후속조치

● 평가 세부내용

-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별 청렴 · 반부패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외부청렴도)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내부청렴도) 소속 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진 정도를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정청렴의 기관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부패방지 관련 종합평가

〈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분야별 측정항목 〉

외부청렴도 (13지표, 설문평가)		
부패 인식	공정성	4지표
	투명성	2지표
	책임성	1지표
부패 경험	부패직접경험	5지표
	부패간접경험	1지표

내부청렴도 (35지표, 설문평가)		
청렴문화 지수	조직문화	8지표
	부패방지제도	3지표
	경영진 반부패 경영혁신	2지표
업무청렴 지수	인사업무	7지표
	예산집행	10지표
	업무지시 공정성	5지표

부패방지 시책평가 (16지표, 실적보고)		
계획	반부패 계획 수립	1지표
실행	반부패기반조성	3지표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4지표
성과,확산	반부패 정책성과·확산	3지표
가감점	부패방지 제도운영	5지표

- **(반부패 역량진단)** 종합청렴도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부패방지 역량진단

  * (진단대상) 현원10인 미만인 기관, 설립된지 1년 미만인 기관, 감사(감찰)제외 기관

  * (진단기준) ①부패방지 기반조성(행동강령 마련·운영실적,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실적, 전담 조직·인력 확보 여부) ②반부패교육 ③부패영향평가 ④도정청렴시책참여

추진성과

● 道 청렴도 평가가 공정·청렴의 도정가치를 경영전반에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

※ 청렴도 평가결과를 기관장 · 기관 경영평가(청렴도 +1.5점)에 반영하여 실질적 혁신으로 연계

● 반부패 역량진단 등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 구축으로 부패사각지대 최소화

● 부패방지를 위한 자발적 개선노력으로 종합청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

〈 2020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비교 〉

평가주관	측정항목			비고
	종합청렴도[1]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8.53(▲0.07)	8.84(▲0.09)	7.61(▼0.12)	전국 202개 기관
경기도	8.50(▲0.01)	9.42(▲0.10)	7.81(▼0.33)	도내 24개 기관

1) **(경기도) 외 · 내부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 (권익위) 외 · 내부청렴도

5.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공공기관 통합채용으로 공정성 강화 및 균등한 기회 보장

경기도

추진배경

- 기관별 수시채용 시 시험관리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 우려
-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워 우수인재 선발에 한계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실개입 가능성이 있고, 필기시험 합격자 과다 결정 후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여 채용 신뢰도 저하 우려

추진내용

- 2015년부터 道에서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취합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공개경쟁 채용 시행(2회/년)
- 응시자 모두에게 필기시험 기회 부여(필기시험 후 서류전형)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필기시험을 통해 면접대상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축소, 직무중심의 Blind면접, 외부면접관 2/3이상 확대, 면접관 사전 교육
- 필기시험 공통과목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평가와 기관별 수요에 맞는 전공과목 평가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 〉

(기존) **개별 채용**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계획수립	⇨	채용 공고	⇨	서류 심사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개선) **통합 채용**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계획수립	⇨	채용 공고	⇨	**필기 시험**	⇨	서류 심사	⇨	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추진성과

- 부패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인재 채용 조화
  -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은 경기도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선발 예정기관이 주관
  - 최근 연도별 통합채용인원 : '18년도 17개 기관 96명, '19년도 22개 기관 252명, '20년도 25개 기관 263명
-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를 우선 실시하던 기존의 채용절차를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도록 변경
- 도 우수정책 시·군 도입 확산에 기여 등 나비효과
  - 수원시('20년 도입), 고양시('19년 도입), 화성시('19년 도입), 부천시('17년 도입), 성남시('21년 도입 예정)
- 정부의 반부패 시책 사회적 홍보 효과
  - 각종 공공기관 취업준비자 카페, 취업포털 등에 통합채용 공고내용 안내로 통합채용의 취지 및 공정성 강화 등 긍정적 홍보 효과

03

교 육 청

1. 계약분야 비리예방
2. 민간참여
3. 소통 및 협업
4. 청렴교육
5.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1. 계약분야 비리예방

시설사업 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마련

강원도교육청

추진배경

- 시설담당 공무원(공사감독자)과 시설사업 참여자 간의 만남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유착관계 발생 우려
-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한 사적(외부) 만남에서 금품수수 등의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접촉가이드라인 필요
-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 참여자 간 업무협의는 교육지원청과 현장사무실로 만남을 제한하여 투명한 시설사업 집행

추진내용

-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 참여자 간 사적(외부) 만남 금지
  - 공사감독자는 사업기간 동안 공식업무* 외의 사유로 해당 사업 시설사업 참여자와의 접촉을 금지
  - 접촉 장소는 공사감독자 근무처 및 사업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장소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출장명령(사유 및 장소 명시) 등을 이행

    * 공식업무
    - 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독, 검수·검사 및 협의 업무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감독자 근무처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참여자와 접촉(관련 문서 수발, 협의, 회의 등) 업무
  - 사업기간 동안 공식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 시설사업 참여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문서(사업추진계획서, 출장명령서 등)에 근거하여 접촉

    * 접촉(직·간접 접촉)
    - 직접 접촉 : 시설사업 참여자와 대면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 간접 접촉 : 시설사업 참여자와 전자메일 또는 유무선 통화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 접촉 장소는 공사감독자 근무처 및 사업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장소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출장명령(사유 및 장소 명시) 등을 이행

● 사적 만남 금지 가이드라인 홍보 및 운영

- 착공 시 청렴문자메시지 와 청렴서한문을 통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사전 예방
- 공사감독자에게 청렴의지를 약화할 수 있는 근무시간외 접촉 금지를 홍보

추진성과

● 사적 만남 금지를 통한 부패행위 제공 기회 사전 근절

● 투명한 공사 집행을 통한 교육시설공사 업무의 대민 신뢰도 향상 및 우수한 교육시설 확보 기여

● 부패에 취약한 시설공사 현장에 적용하므로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

● 시설사업 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통해 공사감독자와 사업 참여자는 업무를 제외한 사적 만남은 안 된다는 인식 제고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지역 업체 참여가 많은 현실에서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사적인 모임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도 있었지만, 교육시설의 투명한 공사와 집행을 통해 우수한 교육시설 확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적극 동참을 이끌어 냄

1. 계약분야 비리예방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단계별 관리 강화

대전광역시교육청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학교급식운영 분야 청렴도 하락*에 따른 학교급식 청렴도 개선 요구 증대
- 학교급식 부패 유발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식재료 구매단계별 관리 강화 필요

추진내용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단계별 관리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단계별 부패 관리 방안 〉

공고 전	• 공동시장조사 기반 적정 기초가격 산정 • 현품설명서 모니터링 : 특정제품 지정 현황 관리
공고 및 계약	• eaT를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 • 특수조건 모니터링 : 부당한 계약조항 삭제
납품 및 검수	• 식재료 납품업체 실명제 및 축산물 이력정보공개 • 학교관리자 참여한 '복수 대면 검수' 실시

- 공고 전
  - 식재료 시장가격 공동조사 결과 공유로 적정 기초가격 산출
  - '특정 제품 지정 금지'를 위한 식재료 현품설명서 모니터링* 실시('20. 5월)
    * '20년 3월 공고문의 현품설명서 1,360건 모니터링 결과, 위반한 75교 100건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지도
- 공고 및 계약
  - '부당한 계약 조항 삭제'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 모니터링*실시('20. 10월)
    * '20년 10월 공고문 육류 현품설명서 283건 모니터링 결과, 특수조건 누락, 제재 범위에 대한 기준 부재, 부당한 계약 조항 등 119교, 128건에 대한 개선 조치 지도
  - 284개 조리교 전체 eaT를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 100% 체결

● 납품 및 검수

- 식재료 납품업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납품업체 실명제 운영’ 및 ‘축산물 이력 정보 공개’(이행율 100%)

식재료 납품업체 실명제 [위치: 검수대]	축산물 이력 정보 공개 [위치: 급식게시판]

- 검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가 참여한 ‘복수 대면 검수’ 추진(최소 주1회)

2. 청렴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자정활동 및 부패인식 개선

● 학교급식 관계자 업무협의회(’20.8월)

- 초·중·고 영양(교)사 대표 대상으로 식재료 시장가격 조사, 청렴도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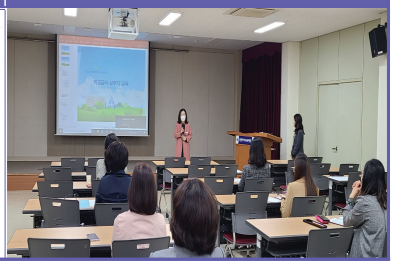
● 부패 취약 대상자 맞춤형 컨설팅(’20.10월)

- 신규 및 기간제 영양(교)사 대상 식재료 구매과정 단계별 관리방안 등 4개 영역 컨설팅

● 「We feeling-학교급식 청렴 플렛폼*」 운영(’20.10월)

- 영양(교)사 22개 분임대표 대상 사례로 알아보는 식재료 구매 단계별 관리방안 공유

  * 전체 영양(교)사로 구성된 22개 분임활동을 통한 청렴도 개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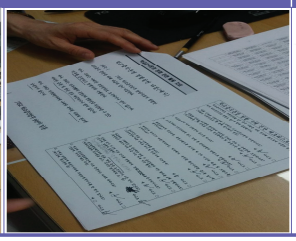
학교급식 관계자 업무협의회	부패 취약 대상자 맞춤형 컨설팅	We feeling-학교급식 청렴 플렛폼
		

● 청렴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분위기 확산 노력

- 영양(교)사의 구매단계별 준수사항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을 통한 자정 활동

  ※ (교육청)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및 운영평가 시 확인 · 점검

- '청렴다짐문 작성 및 선서'로 청렴 실천 의지 표명

식재료 구매 단계 자체 진단	청렴실천 선서(충청신문 2020.8.25.)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청렴연수 전략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김용주 기자 | 승인 2020.08.25 13:32 | 댓글 0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청렴연수 방식 전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시대의 청렴 연수 방식을 집합에서 포트폴리오 식 분산 연수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진성과

- 시장가격조사 결과 공유로 기초가격 산정의 공정성 확보*

  * '21년 영양(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동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73.8%가 기초가격 산정에 반영한다는 응답

- 특정 제품의 규격·모델·상표 등 지정 금지* 및 부당한 계약 특수조건 삭제로 불공정**한 계약 행위 근절

  * '21년 모니터링 결과, 농·공산품과 냉동·수산물의 특정제품 지정 비율이 전년도 대비 67% 감소(94건→31건)

  ** '21년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5%가 학교급식 계약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응답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특정 제품 지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한 결과, 일부 식재료 품질기준 제시의 한계 및 납품 식재료 품질 저하에 따른 단위학교 불만

  - 소비자인 학교와 공급자인 업체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검수 과정에 마찰이 빈번히 발생

- 식재료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2개 이상의 브랜드 또는 상품명 표기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여 품질기준 제시 및 납품 식재료 질 저하 문제 해소

2021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2021.1.) p.48

식재료 특성상 품질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식재료는 주요 식품설명과 2개 이상의 브랜드명 제시

1. 계약분야 비리예방

물품 계약 투명성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부산광역시교육청

추진배경

- 전체 계약 건수의 30%를 차지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체결과정에 특정업체와 유착 가능성 상존
- 2018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 학교장터(S2B)를 이용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받는 방식을 탈피하는 방안 마련 요구
-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 「물품계약」 영역의 청렴도 매우 저조
  - 2019년 교육감 주재 청렴추진기획단에서 수의계약 제도개선 요구

추진내용

1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상한제' 등 수의계약 제도 대폭 개선

- '횟수상한제' 도입
  - 추정가격 건당 5백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연 3회 초과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3인 이상' 다수 견적 의무화
  -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물품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3인 이상' 비교견적 의무화
- '수의계약요청서' 작성
  -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1인 견적 요청 시 '수의계약요청서' 제출
  - 사업부서가 '긴급', '특허' 등의 사유로 1인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부서에 계약 진행의 입증책임을 부여, 사업부서의 책임성 확보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확대

-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1인 견적 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을 원칙으로 함

2 제도 개선 부작용 사전 차단을 위한 의견수렴

● 내부직원 대상

- 설문조사 실시: 각급 학교 등 680개 기관 직원(2019.2.11.~2.15.)
- 수의계약제도 개선 업무협의회 실시: 각급학교 행정실장(2019.2.21.), 공무원 노조(2019.3.25.)
- 청렴 계약컨설팅단(14교) 운영 ⇨ 의견 수렴 결과 제도개선에 반영
- 방과후학교 운영(교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 적용의 예외 인정
-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감사 시 적발보다는 시정 계도하는 감사 지향 등

● 외부업체 대상

- 계약업체 관계자와 소통으로 계약의 공정성 강화
- 물품 영역별*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 : 6회, 137명 참여

  * 졸업앨범, 학습준비물, 기자재, 도서, 가구, 교복 등

- 공급업체 건의사항* 간담회 결과 환류

  * 제출서류 규격화, 규격 명확화, 기초금액 현실화 등

- 각급학교(기관)에 업체 주요 건의사항 및 계약 유의사항 안내

추진성과

●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따라 특정 계약업체와의 편법계약 근절

● 1인 견적 건수를 축소하여 경쟁계약 원칙 확산과 공정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청렴도 향상

2. 민간참여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경기도교육청

추진배경

-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의 민원(국무조정실, 2015.09.07.)에 따른 감사 실시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계부정’ 등의 심각성 등을 고려, 사립유치원전체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 ’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6명)을 구성하고, 시민감사관과 함께 경기 사립유치원 전체 1,069개원에 대한 특감 추진
- ’19년부터 전담기구인 공공감사단(4개 팀, 총 37명)을 신설하여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
- ’21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센터)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감사 권한을 이관하여 감사 추진

추진내용

- 시민감사관과 함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추진
  - ’15. 6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후 시민감사관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참여
    *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민원조사, 종합감사, 감사처분심의회 등 참여로 감사행정의 투명성 및 경기교육 청렴성 향상에 기여
  -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참여일수 [기준: 2021.7.30]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일수	1,203일	145일	913일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지감사 연기로 감사 참여 축소

●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 현황

(단위: 년, 개원, 2021.7.30.기준)

감사 대상	진행현황						잔여 물량
	2015~2018	2019	2020	2021	폐(휴)원	계	
1,069	124	264	21	491	144	1,044	25
비율	11.6%	24.7%	2.0%	45.9%	13.5%	97.7%	2.3%

● 감사실시 결과 처분 현황

(기준: 2021.3.31., 단위 : 건수, 천원)

유치원수	지적건수					재정상처분				국세청통보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합계	보전	회수	환급	합계	
388	100	283	2,706	482	3,571	35,088,035	3,430,993	6,804,061	45,323,089	105,249,008

● 주요 징계 사례

건 명	지적내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사적사용)	• 특성화활동 수익자부담경비는 본인(설립자 겸 원장) 개인 계좌로 수납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수익자부담경비로 집행해야 할 특성화 활동경비를 유치원회계 운영비(예산과목)에서 집행
	• 유치원회계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원장의 지인에게 대여하고 반환받음 • 원장 개인 주택구입대금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출금한 후 상환함
	• 설립자 개인소유 토지매입비 및 건물취득세, 무단증축물 취득세, 설립자 부담 도로점용료 등 지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부정당 채주에게 지급)	• 설립자, 원장 및 교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업체에 선지급하고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교직원 계좌로 집행
수익자부담경비 등 운영 부적정	• 교재교구 거래에 대해 구입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
급여 등 지급 부적정	• 설립자와 원장에게 급여대장상 명기된 보수액보다 과다인출하여 추가로 지급
	• 실제 근로하였다는 근거(근로계약서 등)없이 급여 및 상여금 지급 •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 • 근로계약서보다 초과하여 급여 지급
별도계좌 운용	• 특성화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되지 않은 별도계좌로 수납 후 유치원회계로 일부만 세입처리하거나 세입처리 없이 해당계좌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설립자 개인계좌로 이체
	• 입학금 및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되지 않은 별도계좌로 수납하여 유치원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해당계좌에서 납품대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

건 명	지적내용
	• 학부모부담경비 수납금액을 설립자 개인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유치원 회계로 일부만 세입처리하는 등 부적정 운영
증축시설비 집행 부적정	• 미인가 시설(증축)에 대하여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등 집행
	• 기존 건물 2개동 외에 추가 1개동 증축 시설비를 설립자가 부담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공사계약 및 집행부적정	• 계약금액 660,000천원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물량이 계약서 내역 대비 부족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준공정산 없이 499,694천원을 과다하게 집행
유치원과 사업체를 함께 영위하면서 유치원 회계와 자금 혼용	• 설립자와 원장이 각각 사업체 대표를 겸직하며 유치원회계와 사업체간 자금 입출금을 수시로 혼용처리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방만하게 운용
원장 명의 업체와 교구 구입 및 관리 부적정	• 원장이 개발·특허 등록한 교구를 개원 시부터 현재까지 원장 명의로 설립된 업체를 통하여 물품구매 계약체결 없이 구입 - 또한 제조사는 폐업한 상태로 폐업이전 생산이 된 교구를 납품받아 원아들의 교육에 활용
숲체험 위탁운영 계약 및 집행 부적정	• 계약체결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와 "숲체험 위탁관리유치 및 교육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숲교육비를 지급

추진성과

-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 전체 1,069개원 중 1,044개원 감사완료(97.7%)
- 시민감사관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실시
- 2015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시작, 2018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마련, 2019년 감사전담기구인 공공감사단 신설, 2021년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센터)을 신설하여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제도개선과제로 발굴하여 추진 (33건 발굴)

2. 민간참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형 종합감사

경상남도교육청

추진배경

- **(본청 피감기관 폭증현상)**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2010. 9.1.)에 따른 감사업무 본청 통합으로, 전국적인 본청 피감기관 폭증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7.1.시행)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도교육청으로 한정됨으로써 기존 시·군 교육지원청의 관내 유·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통합

- **(종합감사 적체현상 심화)** 제한된 감사 인력으로 늘어난 피감기관 감사에 한계, 종합감사 적체현상 심화(규정상 3년→5~6년으로 적체)

- **(자율 · 예방감사시스템 필요)** 감사적체현상 심화에 따른 감사 사각화→부정·비리예방을 위한 '자율 개선·예방 시스템' 도입 필요성 증대→학교 자율 감사권 부여→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유도 필요성 절실

추진내용

자율형 종합감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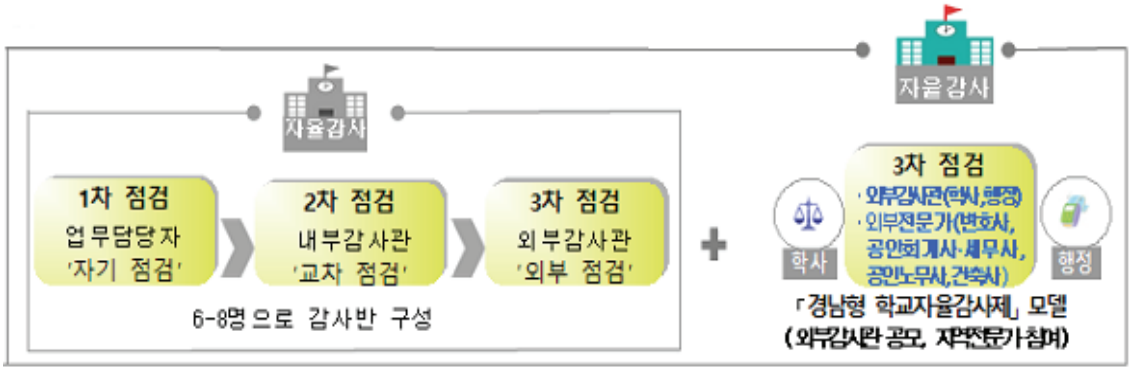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분, 개선 등을 이행하는 제도

- **(자율형 종합감사 시스템 구축)** 학교의 자율적인 부정·비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남형 자율형 종합감사' 시스템* 구축

  - 자율감사반 구성: 감사반장(교감) + 내부감사관(본교 교직원4~6명) + 외부감사관(본청 공모, 2명) + 외부 전문가(3~4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각 1명)

  * 경남형 자율형 종합감사란? 전국 최초로 「외부감사관 공모제」로 감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참여제」로 전문성을 확대한 모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율형 종합감사제」 운영 현황〉



※ 자율형 종합감사 인프라

- 외부감사관(188명): 전국 최초 공모·인력풀 운영(학사 107명, 행정 81명)
- 외부전문가(234명): 변호사 123명, 공인회계사 12명, 세무사 41명, 공인노무사 42명, 건축사 16명 참여
- 컨설팅단(40명): 교육지원청별 학사 및 행정 인력풀 구성 및 제공

● **(자율형 종합감사 지원활동 강화)** 단위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내실화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현장 지원활동 강화

- 자율형 종합감사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3~5월, 교직원 및 외부감사관, 외부전문가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 「자율형 종합감사 컨설팅」 지원(학교별 3회, 지역별 컨설팅단 활용)
- 「자율형 종합감사 매뉴얼」 3종* 개발·보급(전 학교 및 교육지원청)

* 운영 매뉴얼, 자율점검 매뉴얼, 감사사례집 ('20.1.2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지원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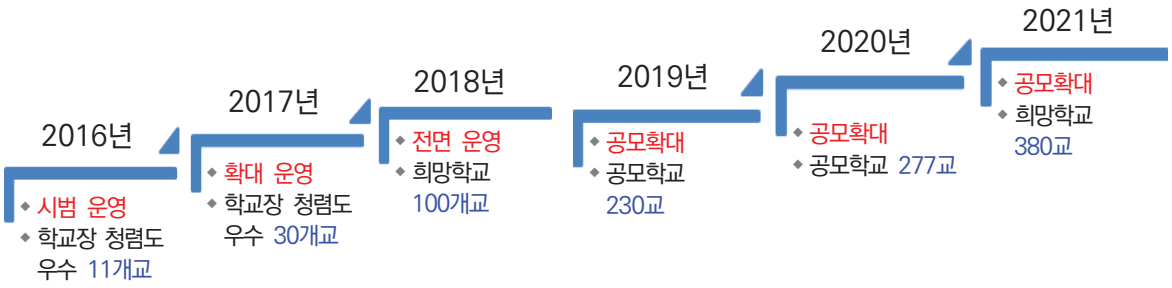
자율형 종합감사 인프라 확충		자율형 종합감사 현장 지원		자율형 종합감사 정착·확산
•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 및 외부감사관 구성 • 자율형 종합감사 컨설팅단 운영	⇨	• 자율형 종합감사 연수·컨설팅 • 자율형 종합감사 매뉴얼 개발·보급	⇨	•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자율형 종합감사 만족도 및 성과 제고

● **(자율형 종합감사 단계적 확대 및 체계화)**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전면 공모운영을 확대하고 전문가참여형*과 업무경감형**으로 체계화

* 전문가 참여형은 자율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학교로 '컨설팅과 외부감사 강화 모델

** 업무경감형은 자율감사 실시 경험이 있는 학교로 '자율성 강화 모델'

〈 자율형 종합감사제 단계적 확대 현황 〉



추진성과

- 자율형 종합감사로 자율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성과 달성
  - '자율 지적 · 개선 건수'가 해마다 종합감사 지적 건수보다 많으며 학교의 자율적인 부정·비리 예방 및 개선에 효과
- 자율형 종합감사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학교자치에 기여
  - 자율감사 학교 만족도 해마다 상승 (2018년 90점 → 2020년 94점)
  - 전문성 신장, 청렴도 향상, 교육본질 집중, 자율성 함양,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효과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외부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와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참여기관과 경상남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하고 학교자율감사, 컨설팅, 학생 교육, 관련 분야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 운영

3. 소통 및 협업

교육감 주도 현장 소통·공감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추진배경

- 일선 현장에서 직접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

추진내용

- 행복한 동행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추진
  - 교육감이 지역을 찾아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역주민,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회의
  -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경북교육 정책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서로 소통(필요시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하고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탑재

    * 안동 신도시 젊은 학부모의 교육혁신 요구, 포항 지진에 대한 불만 청취 및 학교 안전대책 강구 등

- '현장 소통토론회' 운영
  -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 연중 9회에 걸쳐 12개 시·군을 방문하였으며, 학부모 및 교직원의 다양한 현장 요구에 대한 교육감 답변을 바탕으로 부서별 대책을 공문으로 안내(피드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실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 설립, 학교 등굣길 안전대책 마련 등

- '소통·공감의 날' 운영
  - 교육정책에 대한 본청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및 복지, 근무여건 등 개선사항 수렴의 장 마련
  -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소통·공감의 날'을 '오픈 채팅방' 형식*으로 운영

    *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회의에 참여한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하여 채팅방에 올라온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교육감과 즉석에서 의견을 서로 나눔

추진성과

- 최일선에서 일하는 교직원들과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의 목소리가 중간에 왜곡되지 않고 교육감에게 직접 생생히 전달됨으로써 현장중심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상호 소통·공감함으로써 경북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 확보 가능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교육감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일선기관에서 의전 등의 이유로 부담감을 가지고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과감히 철폐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간소화도록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호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3. 소통 및 협업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구현

부산광역시교육청

추진배경

- 학교 급식 위장의심업체의 지속적인 난립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위협 및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학부모·시민들의 불신 고조

- 부산의 급식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유통단계가 취약하나, 교육청은 급식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 감독권 및 행정처분권 없음
  - 관리·감독 주체인 인·허가 기관(시·군·구)에는 불량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상시적 감시 시스템 없음

추진내용

1 (학교 밖) 시민단체, 교육청, 경찰청, 시청, 부산식약청, aT와 협업

- 식재료 공급업체 상시적 감시를 위한 교육청-시민단체-학부모 중심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단」 구성·운영
  - **(구성)** 학부모, 시민단체, 영양(교)사, 교장 및 행정직공무원
  - **(역할)**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안전점검, 위장업체 점검 등
  - **(운영방법)** 10~11조(조별 3~4명)가 부산 시내 업체 매월 불시점검
  - **(점검 실시기관)** 77개 기관(2017. 9월말 현재)
  - **(활동성과)** 불량의심업체 27개 유관기관(시·군, 식약청, aT)에 재점검 및 조사 요청, 위생불량 1개 업체 영업정지, 이용약관 위반 9개 업체 eaT 사용 정지

- 교육청-aT-경찰청 중심 「위장의심업체 합동 점검」 실시
  - 위장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불시 합동 점검

    * 2015년 : eaT시스템 이용정지 21개

* 2016년 : eaT시스템 이용정지 31개, 부정당업자 제재 7개
* 2017년 : eaT시스템 이용정지 12개, 부정당업자 제재 43개

● 교육청 – 부산시 중심 「식재료 유통업체 새벽 합동 점검」 실시

- **(내용)** 2017. 5월부터 격월제로 실시,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대형 농산물시장(반여, 엄궁)의 취약시간인 새벽 합동 점검(전날 11:00~익일 04:00)
- **(점검기관)** 부산교육청, 부산시(보건위생과, 특별사법경찰과)

● 교육청 – 부산식약청 중심 「식재료 공급업체 불시 합동 점검」 실시

- **(내용)** 2017.7.11.~7.12.(2일간) 식재료 공급업체 불시 합동 점검
- **(점검기관)** 부산교육청, 부산식약청(식품안전과, 위해사법조사팀)

● 교육청 – aT 중심 「식재료 납품희망 신규업체 현장실사」 진행

- **(내용)** 매월 4~5개 업체 현장실사
- **(점검기관)** 부산교육청, aT(부산지사)

2 (학교 안) 급식 모니터단, 매일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안전 점검 실시

● 단위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안전 점검

- **(점검단)** 단위학교별 관리자(교장, 교감, 실장) 중 1명, 영양(교)사, 학부모
- **(점검기간)** 2016년 10~12월
- **(점검기관)** 175교, 234개 업체
- **(활동성과)** 3개 불량 의심업체 적발

  ⇒ 부정당업자 제재(1개), 폐업(1개), 이상 없음(1개)

3 (제도개선) 교육부에 「학교급식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법률 개정 요청

●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교육청의 한계 극복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정당하고 내실 있는 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사법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법 개정 요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원회「학교급식 운영 · 관리」청렴도 측정결과 매년 상승
  - 2014년 : 7.53점 ⇒ 2015년 : 8.03점 ⇒ 2016년 : 8.53점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수 대폭 감소 : 1년 동안 310개 불량업체 퇴출

기준 월	'16. 10월	'16. 12월	'17년 3월	'17.8월	'17. 10월말	퇴출업체 수
식재료 공급업체 수	610개	546개	411개	356개	300개	310개 업체

- 민·관 협치의 점검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점검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증가
  - 부정당업자 제재 수 : 2015년(0건) → 2016년(7건) → 2017년(43건)

- 타 시·도 교육청과「학교급식 특별사법경찰 제도」공유
  - "학교급식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협조 요청(교육지원과-4148, 2017.6.1.)
  - 2017년 6월 전국 시 · 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 제출(교육지원과-4000, 2017.5.25.)

4. 청렴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체험교실

강원도교육청

추진배경

-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이 청렴 덕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라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부패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여 청렴한 사회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

추진내용

- 유아도 청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렴인형극 공연 지원
  - 도덕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감수성이 발달하도록 하는 청렴인형극(간을 빼앗긴 늑대, 빨간 모자 등 2편)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실시(2019년 7월, 9월)
- 발달 특성과 지적 호기심 충족 욕구에 맞춘 청렴체험교실 운영
  -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강원진로박람회(2019년 5월~6월)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인 제13회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2019. 9. 28.)에 청렴체험교실 부스를 마련하여
  - 다양한 호기심과 흥미가 있는 초·중·고교 학생이 청렴 덕목을 주제로, 다트, 스피드 퀴즈, 대형 윷놀이를 하게 하여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벼운 경쟁심을 생기게 하여 자연스럽게 청렴을 배우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
-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청렴한 가치관을 배우는 청렴골든벨 운영
  - 마지막 문제를 맞힌 학생만 남아 종을 울리는 퀴즈쇼 형식의 골든벨 게임을 청렴 주제로 문제를 구성하고 철원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0명 참가하는 청렴골든벨 실시(2019. 12. 16.)

- 문제 풀기에 앞서 청렴 주제를 공부함으로써 청렴한 가치관을 습득하고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

※ 강원 청렴클러스터 1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추진성과

-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축제 등 행사에 청렴 활동을 한 분야로 운영 가능
- 청렴은 경제적 관점의 소박한 삶만이 아니라 공정, 절제, 배려, 정직, 약속, 책임 등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질서라는 인식 확산
- 학생들이 청렴을 소재로 한 공연을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청렴부서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있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청렴교육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양한 청렴 교육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청렴 체험교실의 지속 운영이 필요함

5.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 운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경기도교육청

추진배경

- 경기도교육청의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종합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에 대한 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내부청렴도 점수 저조
  - 내부 의견수렴 결과, 갑질 관행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경기교육가족의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생활 속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4.)」의 주요과제 중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에 동참

추진내용

- 공익제보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주요 내용

- 전부개정(2019.1.11.)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의 범위·대상 확대
    ⇒ 부패신고+공익신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 보상금 지급의 효율성·통일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통합
- 일부개정(2020.7.15.)
  - 공익제보 대상 범위 확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추가)
- 일부개정(2021.7.14.)
  -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

● 공익제보 전담팀(공익제보센터) 운영

시범 운영(2019.8월~12월)		전담팀 운영(2020.1월~)		전담팀 확대(2021.3월~)
• 반부패청렴팀 내 겸임 운영 • (겸임) 팀장 1명, 주무관 1명, 시민감사관 1명	⇨	• 공익제보센터팀 운영 • 팀장 1명, 주무관 2명, 시민감사관 1명	⇨	• 공익제보센터팀 확대 • 팀장 1명, 주무관 2명, 시민감사관 1명

● 공익제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내 온라인 공익제보 창구 개설

기 존		개 선(2020.2월)
•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한 e-mail(익명) 신고	⇨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실명 공익제보센터 신설 (Dr.재정씨의 부패클리닉) ※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한 e-mail(익명) 신고 병행

Dr.재정씨의 부패클리닉 (https://bit.ly/2Tylips)

교육감이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공익제보자에게는 제보의 문턱이 높지 않고 신고 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교육감이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익제보를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줌

● 교육단체 최초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운영

- **(대상)**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8명 위촉·운영
- **(운영절차)**

공익제보자		변호사		변호사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안심호루라기 변호사에게 이메일 상담 신청	⇨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공익제보 가능 여부 검토	⇨	공익제보센터 대리신고 실시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	조사실시 후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공익제보 홍보 영상, 웹포스터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경기도 교육청 유튜브, 블로그 및 홈페이지 탑재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단위 : 건,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상반기)	합계
포상금 지급건수	4	5	2	11
포상금 지급액	29,687	33,133	8,250	71,070

추진성과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적극적 홍보로 신고·상담건수 증가

- 공익제보센터 신고접수 현황('21.6.월 기준)

(단위 : 건수)

연도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	
	접수건수	공익제보 건수	접수건수	공직비리 건수
2020	82	4	71	20
2021	50	8	31	7

※ 공익제보건수 : ('16) 11건, ('17) 6건, ('18) 8건, ('19) 13건, ('20.10월) 10건

-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상담건수('21.6.월 기준)

(단위 : 건수)

실적	2020년				2021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공직비리 건수
상담	1	1	3	6	1	1	13
대리신고				1		1	2

04

공직유관단체

1. 갑질문화 개선
2. 계약분야 비리예방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4. 기관간 협업
5.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관리자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7. 민간 참여
8. 청렴문화 확산
9. 부패사건 제재 강화
10. 연구개발 분야 부패방지 시책
1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12. 자가진단 등 자율적 개선제도 운영
13. 채용비리 근절
14. 청탁금지제도 운영 내실화

1. 갑질문화 개선

익명신고 활성화를 통한 갑질 근절 체계 구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추진배경

● 갑질행위 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

	인식적 측면	제도적 측면
환경 분석	• [부패사례] 직원 21% 갑질행위 경험 * 갑질빈도 : 연 2~3회 경험, * 고위직 비율 6% • [부패개선] 직원 12% 부패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항목은 부패교육으로 선정 ⇒ 갑질문화에 대한 전 직원 인식 개선 필요	• [공익신고] 신고채널 다양화로 혼선 초래, 신고자에 대한 익명보호 필요 • [보호조치] 공익신고 전담관리부서의 부재, 제2차 피해방지 제도 미흡 ⇒ 부패행위 점검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필요

개선방안

개선 방안	• 공단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감사) 강화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채널 체계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추진내용

● **(사례조사)**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갑질사례 분석 및 종합 개선계획 수립

추 진 내 용	추 진 실 적
• **갑질행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2018.3.21.~3.30)** - [대상] 공단 전 임직원 - [조사방법] 온라인(그룹웨어) 설문조사 - [내용] 갑질, 성희롱, 피해사례, 의심증후 등 17개 항목조사 • **갑질 실태 분석 및 주요개선 방안 도출(* 연간 정책 반영)**	• **직원 1,595명 설문조사 참여** - 주요 갑질유형 및 실태 파악 • **갑질근절 및 상생문화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8.4월)**

● **(인식개선)** 갑질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솔선수범 강화

추 진 내 용	추 진 실 적
• **기관장 및 감사 산하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 -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청위 및 개선방안 교육 및 제언 - 주요 개선사례 지시이행(공익신고자보호, 익명시스템 개선 등) • **고위 간부직 갑질 및 부패행위 금지를 위한 내부규범 강화** - 실장급 이상 비윤리행위 서약서 작성 및 갑질교육, 신고자보호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및 이행 강조	• **기관장 청렴간담회 개최** - 연간 6회 개최 - 제언사항(4건) 100% 이행 • **갑질근절 결의대회 개최** - 2018. 8월 본사 및 전소속기관 실장급 이상 이행서약서 작성

● **(제도보완)** 갑질 예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추 진 내 용	추 진 실 적
• **갑질근절을 위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책임관 제도"도입** - [인력] 총괄 책임관 : 감사실장, 부서책임관 : 각 소속기관장 - [내용] 갑질 피해자 상담, 조사처리, 신고자 보호 등 • **공익신고자 익명신고 시스템의 보완 및 기능강화** - [기능보환] 부당지시 등 갑질행위 신고채널 추가(신설) - [통합관리] 익명채널 통폐합으로 접근성 및 관리 강화 * 신고채널 : 4개 → 2개로 통폐합	• **본사 및 소속기관 책임관 임명** - 본사 1, 소속기관 18 * 소속기관장, 실장급 임명 •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 신고채널 기능강화('18. 7월) - 익명신고채널 통폐합 → 전년대비 56% 신고 증가

● **(특정감사)** 공익신고,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발본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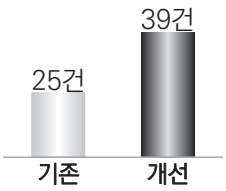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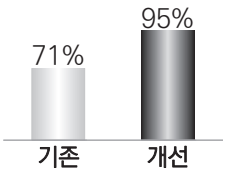
추 진 내 용	추 진 실 적
•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 [조사범위] 공익제보, 부패유발 사례, 취약업무 분야 등 - [조사내용] 사적노무요구, 부당지시, 성비위, 금전요구 등 • **갑질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신분처분 강화** - 성비위, 사적노무, 사적 금품수수 대상자 징계 처분	• **공익제보, 취약분야 사례분석을 통한 부패사례 8건 특정감사** • **감사결과에 따라 갑질 및 성 비위 행위자 15명 중징계 처분**

● **(보호조치)**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추 진 내 용	추 진 실 적
• **공익신고자 보호·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운영** - [전담기구] 갑질신고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규반영) • **공익신고자 제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 전보, 인사처분 공정화 관리, 법률자문, 심리상담 제공 등	• **공단 본사 및 전 소속기관에 갑질 피해 신고센터 19개 신설** • **신고자 4명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및 희망 전보 조치**

추진성과

● 익명신고 활성화 등 갑질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운영체계 개선으로 부패취약요인 근절

공익 신고 활성화	• [신고체널] 공익신고 채널 부패 유형별 신고기능 강화, 신고채널 통합화로 신고관리의 적시성 강화 • [보호조치] 신고전담센터 설치, 제2차 피해 보호조치 규정화 ⇒ **공익신고 56%↑(기존 25 → 39건), 부패행위자 15명 징계 처분**	
갑질 인식 개선도	• [실태분석] 전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유형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의견 종합계획에 반영 • [인식개선] 기관장, 감사 등 고위직 갑질근절 솔선수범 ⇒ **공단 임직원 갑질문화에 대한 체감효과 95% 긍정적 응답**	

1. 갑질문화 개선

「60계 지킴이북」 등 갑질 근절 콘텐츠 대국민 공유

한국서부발전

추진배경

-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불합리한 관행 등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저해요소 발굴·대국민 공유로 정부차원의 청렴선진국 도약에 기여
  -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최초 발간('17년) 이후 매년 지속적 사례 발굴과 편찬 시행 중
    * '17년도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 권익위 10대 반부패 우수시책으로 선정

〈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발간 이력 〉

날 짜	버 전	부제 (소제목)
2017.8월	Ver.1	• 공정한 업무지시, 청렴한 서부발전
2018.8월	Ver.2	• 갑질 근절을 위한 하급자(을) 관점의 소통지침서
2021.3월	Ver.3	• 60가지 갑질 근절 이야기 「60誡 지킴이북(e-book)」

추진내용

- 직장 내 갑질 사례 발굴을 위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table>
<tr><th>날 짜</th><th>추진활동</th></tr>
<tr><td>'20.01~'20.02</td><td>• 전사 순회 청렴 워크숍 시행(총5회) 및 직원의견 수렴
<table>
<tr><th>사 업 소</th><th>본 사</th><th>태 안</th><th>평 택</th><th>서인천</th><th>군 산</th><th>합계</th></tr>
<tr><td>참여인원</td><td>30명</td><td>30명</td><td>20명</td><td>15명</td><td>15명</td><td>110명</td></tr>
</table></td></tr>
<tr><td>'20.06~'20.09</td><td>• 태안 사업소 상주형 인권·청렴센터 오픈 및 의견접수
- 협력사 포함 현장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 상담</td></tr>
<tr><td>'20.10~'20.11</td><td>•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례 추가 발굴
- 직원의견 검토 및 타 기관 사례조사로 116건 발굴
• 사내 직원 대상 사례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 116건의 사례 Pool에서 최종 60개 사례로 확정</td></tr>
</table>

● 60가지 직장 내 갑질 사례 도출 및 유형 구분

No.	유형	세부내용	사례
1	부당 업무지시	불합리한 지시	8
		지위권한 남용	7
		개인용무 지시	7
		개인권리 제한	9
		비인격적 대우	5
2	불합리한 관행	조직문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3	기본소양 부족	상하급자 모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10
4	상생인권 침해	협력회사 및 지역주민 대상 갑질 근절	7
합 계			60

● 뉴미디어 신세대 감성을 반영,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 추진

- 삽화(이미지) 위주의 내용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 간결하고 위트 있는 워딩으로 가독성과 재미요소 가미
- 독자의 친근감 유발을 위해 청렴 캐릭터 '탁대리' 창작

● 유명 온라인 서점 등록 및 대국민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제도(공공누리)를 통해 대국민 공유 추진

공공누리 제4유형 적용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공공누리 표시 도안을 부착,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 촉진

❶ 출처표시, ❷ 상업용 금지
❸ 2차적 변형 금지

* 온라인 북스토어 등록현황 : Google, NAVER, 국립중앙도서관 등

● 갑질 사례 소개 웹드라마 제작 및 YouTube 게시(1회/격주)

- 콘텐츠명 : [청탁(淸濁) TV] 탁대리의 슬기로운 회사생활
- 주요내용 : 「60誡 지킴이북」 내 갑질 사례를 웹드라마 형태로 소개

● 갑질 사례 소개 웹툰 제작 및 사내포털 게시·공유(1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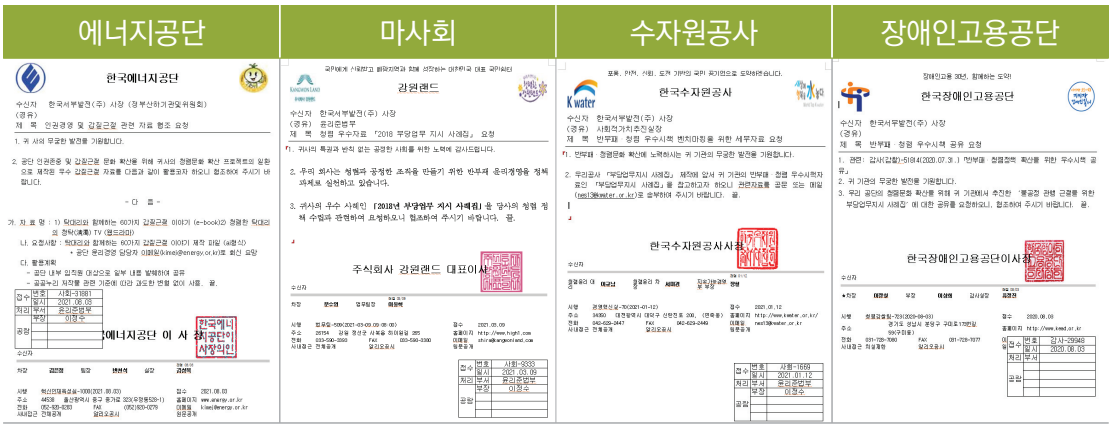
- 콘텐츠명 : 「탁대리와 달마부장이 함께하는 갑질근절 캠페인」
- 주요내용 : 유명 웹툰작가의 주인공 캐릭터와 서부발전의 탁대리가 함께하는 갑질 근절 회사생활 스토리

● e-book 및 웹드라마 지역사회 공유·전파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지역사회 :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17개 회원사

구 분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근거	• 「충청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현황	• 충남도, 천안시장, 중부발전, 공주대학, 현대오일뱅크 등 17개 기관
주요활동	• (1사1실천 과제) 회원사 별 특성과 현안에 맞춰 각자 추진 • (공동이행 과제) 서부발전 갑질 사례 공유사업 추진 【공동이행 과제】 갑질 사례 공유사업 추진 서부발전의 「60계 지킴이북(e-book)」과 「청탁(淸濁) TV」 영상 콘텐츠를 17개 회원사에 공유 및 각 회원사별 활용 추진

- 공공기관 : 에너지공단, 마사회 등 공공분야 협조요청에 적극 대응



● 연도별 10대 실천기준 제정·선포 및 준수현황 모니터링 시행

- 「60誡 지킴이북」을 참고하여 실천기준 제정·선포→우수조직 포상

구 분	실천기준	모니터링 시스템
’20년	10대 실천기준	WP등대 : 실천기준 위반율 측정 (설문조사 방식)
’21년	10대 실천기준 5대 기본소양	청렴표시등 : 실천기준 위반율 측정 (포털 시스템화) * 하급자들이 지켜야할 5가지 기본소양 추가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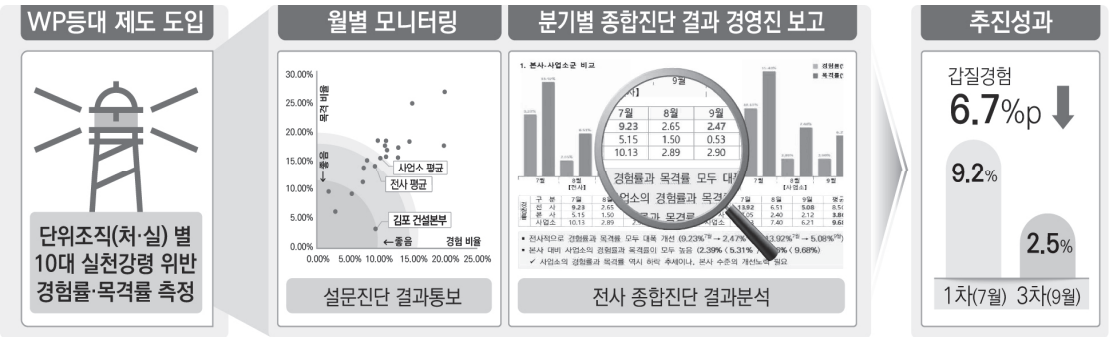
● ’20년 권익위 내부청렴도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 10점 만점 득점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과 경험빈도 모두 만점 달성

평가영역			’20년
내부청렴도	업무지시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10.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빈도	10.0

● 내부 구성원 갑질 경험률 감소로 청렴문화 구현에 기여

- ’20년 「WP등대」 운영결과, 갑질 경험 6.7.%P 감소 (9.2%→2.5%)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21.8월 현재, 10대 실천기준 위반율 측정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실천기준 위반율 측정방식을 기존의 설문방식에서 탈피,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토록 시스템화

기 존	WP등대 설문조사	▶	개 선	청렴표시등 시스템

  - 신고시스템 접근 편의성과 익명성 강화로 갑질 신고 증대 가능성↑

- 임직원 대상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청렴마케팅 시행으로 직장 내 갑질 근절에 주력할 계획

1. 갑질문화 개선

고질적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 이행체계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진배경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공공 민간 구분없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대상 불공정 갑질을 대표적 생활 적폐로 지목
- 공사는 내·외부 갑질 제거를 위한 불공정거래특수조건 개정 등 선제적으로 노력을 이행하였으나 여전히 한계점 상존

추진내용

- 불공정거래 전문성 보유 기관(대한건설협회)와 협업을 통한 불공정 거래 계약조건 개선 및 모니터링 시행
  - 대한건설협회가 우리 공사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발주건(256개)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보호 및 혼란 방지를 위한 '현장 대리인 보험료 정산' 관련 규정 개선 제안('18. 6월)
- 불공정 갑질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관련 규정 개정

공사관리규정, 간이공사처리요령 內 관련규정 신설	"공사감독원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독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계약상대자에게 지속적·반복적 부당 언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계약 수행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 간 갑질 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 시행 및 대응체계 선도 구축
  - 정부가이드라인 수립 전(국조실, '18.12월 예정) 공사 대응체계 구축('18.9월)

개선 전	①갑질확인	②조사	-	-	-	③최종 결과

▼

개선 후	①갑질확인	②조사	③1차 결과	④노사협의	⑤외부조사	⑥최종 결과
내용	노동조합 등 채널 인사부 확인	감사실 사실관계 조사	인사위원회 회부	고충청취 및 전문가 조사 합의	외부조사단에 의한 객관적 조사	인사위원회 최종 처분

추진성과

- 민간과 내부의 부당한 갑질 원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완료

공사계약업체 대상 부당행위 방지규정 신설	- 공사관리 규정 제11조(공사감독원의 책무) 개정 완료('18.8월) - 간이공사처리요령 제9조(공사감독) 개정 완료('18.9월)
중대 갑질에 대한 상벌규정 개정	-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배제' 명문화('18.10월) - 인사혁신처 제정 전('18.12월 예정) 선제적인 규정 개정

- 대내·외 참여를 통한 불공정한 갑질 근절 선도모델 마련
  - 외부 이해관계기관 참여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신고 활성화
  - 내부 현업부서 자율제도개선 참여로 자발적인 민간갑질 근절 유도

- 직원 간 갑질 방지를 위한 컨설팅 감사는 사회적 가치실현 감사로 감사원에서 '우수' 평가
  - 2018년 감사원 주관 우수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우수 사례 발표

2. 계약분야 비리예방

신사옥 건립공사 청렴이행 점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진배경

- 본원 지방이전 완료('15년 말) 후 정부방침에 따라 2차 지방이전('19년 말)이 예정됨에 따라 신사옥 건립공사와 관련한 부패위험요인 증대(총 공사비: 약 1,514억)
- 이에 따라, 청렴한 신사옥 건립공사 진행을 통해 공정관리의 투명성 및 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고 공사관계자 및 국민에 대한 우리 원의 청렴 이미지 구축 필요

추진내용

- **(점검반 구성)** 기관 청렴업무 전담부서 및 신사옥건립팀 직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관계자와 합동 점검(약 20명)
- **(신사옥 건립 추진 상황 점검)** 신사옥 건립 추진경과, 공사일정 및 공사감독 체계 및 주요 진행 작업상태 확인
- **(부패취약요인 및 영향 평가)** 건설공사 업무 프로세스별 부패유형 및 부패취약요인 파악
  - ① 입찰/계약 → ② 공사시공→ ③ 준공 후 단계 등 각 단계별 발주자, 공급자별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 확인
- **(중점관리대상 확인)** 입찰, 하도급관리, 설계변경, 검사, 공사비 지급, 하자관리,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분야별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패유형 확인(총 30개)
- **(청렴이행방안 마련 및 점검)** 각 분야별 "청렴이행방안 체크리스트"(총 27개) 마련 후 이행 여부 등 점검
- **(부패신고 안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에 대한 부패신고센터 안내 및 확인

추진성과

- 주요 부패위험에 대하여 청렴전담부서와 협력사의 공동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유형 및 부패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함께 확인하고, 청렴이행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과 민간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였음

- 또한, 불공정행위,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채널을 안내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청렴이행 담보장치 마련

※ (효과분석) 타 기관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사 등 부패취약분야의 경우 "청렴이행방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민간과 합동으로 점검 한다면 국가 청렴도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임

2. 계약분야 비리예방

지하철상가·광고관리 업무 부패유발요인 개선

서울교통공사

추진배경

- 청렴도 조사 결과 가장 취약한 상가·광고업무의 전사적 개선작업 필요
  - 2019년도 부패경험 2건 발생 및 부패인식 전 항목 최저로 공사의 외부 청렴도 측정 4대 분야 중 최하위(2018년 대비 상가·광고 청렴도 3.26점 하락)

    ⇒ 4대분야 청렴도 : 물품(9.68점) 〉 공사(9.62점) 〉 용역(9.58점) 〉 상가·광고(5.75점)
  - 통합공사 출범(2017년) 이후 줄곧 공사의 만성적 청렴도 저조 업무 기록

    ⇒ 청렴소통 확대 및 업무담당자 공정, 투명, 친절 등 부정인식 개선 필요

추진내용

- 대외 이해관계자와 청렴상생 소통채널 운영
  - 상시소통 채널(카카오 알림톡) 구축 운영(3.16.~,월평균 30여건 상담)
  - 계약업체 청렴민관협의회 대면회의(5.20.), 설문조사(9.18.~9.28. 85 업체 대상)
  - 소통 간담회/상가업체(49명)/광고업체(37명)/찾아가는 현장간담회(4.23., 10.30.)
- 상생을 위한 계약업체의 어려움 해소 노력
  - 청년창업 등 공익목적 공간 인센티브 부여하여 저렴한 임대료 산정(총 10건)
  - 코로나19 방역용품 지급(역사 내 상가 1,194개소 및 통합매점 102개소)
  - 광고 도안심의 프로세스 단축으로 광고대행사 불만요인 해소(5.19.)
  - 상가단속 업무처리 절차 및 단속 허용기준 표준화, 제작 배부(1,800여개 상가 방문)
- 청렴창구 알리기
  - 상가 신문고 제도 도입, 고객의 소리함 설치, 정기 수거
  - 임대상가(1,149개소) 부패행위 신고 스티커 부착
  - 입찰 공고문 및 계약체결 안내문 등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내 문구 시인성 강화

- 업무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강화
  - 상가·광고 계약 업무처리 통합 프로세스 표준화·제작(4종, 5.14.)
  - 임차인 애로사항 책임관리(업무처리 후 7일 이내 해피콜 시행, 상담내역 기록 유지)
- 업무 담당자 청렴 다잡기
  - 상가 질서유지 보안관 근무조 및 관리구간 순환제 도입(7.1.)
  - 고객응대 방식 전환(5.19. 신속한 전화 받기, 청렴인사)
  - 상가담당자 반부패 결의(4.21. 50명) / 사업부서 청렴워크숍(8.12) 등

추진성과

- 이해관계자와 청렴상생 소통채널 운영 및 계약업체 어려움 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임차인 및 광고주 부정인식 개선
- 전년대비 상가·광고 관리 업무전반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2020.9월 상가·광고 계약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입찰 관련 정보제공의 충족도(96%, +16%p상승)
-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의 부당성 '없다'(100%, +25%p상승)
- 계약체결 후 이행과정에서의 부당성 '없다'(87%, +27%p상승)
-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부서 인지도(67%, +52%p상승)

-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상가·광고업무 청렴도 전년대비 대폭 상승
  - 다각적인 집중개선 노력의 결과, 임대상가·광고대행 관리업무 청렴도 9.04점 기록으로 전년대비 3.29점 상승('19년 5.75점)

  ⇒ 물품(9.72) = 공사(9.72) 〉 용역(9.63) 〉 상가·광고(9.04)

2. 계약분야 비리예방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도입 플랫폼, 道公기술마켓

한국도로공사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특혜시비 및 감사우려로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고, 중소기업은 로비 · 인맥 위주 영업 장벽에 판로를 찾지 못해 좋은 기술이 사장되는 등 신기술 활성화의 한계에 직면
- 공정과 투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상생 · 발전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 필요

道公기술마켓 이란?

중소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신기술을 검증하고, 미개발된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최초 365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추진경과

- 道公기술마켓 플랫폼 오픈('18.1.)
-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VIP주재)」우수사례 발표('18. 8.)
  - 한국도로공사의 기술마켓 소개 및 참여 중소기업의 수혜사례 공유
- 道公기술마켓을 바탕으로 SOC 기술마켓 확장 오픈('19.6.)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단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협업과제 선정('18.10)
  - 에너지 기술마켓('20.10), ICT 기술마켓('21년 예정) 으로 확장
- 道公기술마켓 중기('20~'22) 추진전략 수립 ('20.6.)

  *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 · 포용성장을 위한 4대 전략 20개 실행과제
- SOC 기술마켓(14개 공공기관) 운영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지정 ('21.6.)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명정대한 모두에게 평등한 온라인 신기술 플랫폼 지향

-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중 인지도 1위

  * 조달연구원 · 코리아리서치 주관 설문결과('20.5)

-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절차 및 전담조직 마련

전담조직 (1팀 9명) → **신기술접수** (도공, 온라인) → **사전검토 2회** (담당부서, 현장평가단) → **등록심의** (도공, 기술자문위원회) → **기술마켓 등록** (도공) → **설계/시공 활용** (전 기관)

- 모두에게 道公기술마켓 참여기회 부여

  -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 개인, 개인사업자까지 문호 개방

- 道公기술마켓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다양성 추구

  - 토목분야 편중 → ITS, 전기, 디자인 등 모든 분야 기술개발 시행

- 좋은 기술(제품) 개발 · 확산을 위한 협업(정부-도공-중소기업) 강화

  - (정부) 구매활성화 (도공) 과제컨설팅 (중기) 지식재산권 취득 의무화

2 규제(제도) 개혁을 통한 올바른 운영 시스템 구축

- 특정 공법 심의 대상 검증강화를 통한 투명성 · 공정성 강화

  - (당초) 인증신기술, 특허 (변경) 道公기술마켓 등록기술 + 인증신기술(2개 이상)

- 도공 적용 실적 없는 기술의 판로지원을 위한 성장디딤돌 제도 운영

  - 최초 활용 3회까지 특정 공법 심의면제 → 초기 판로 확보

- 신생기업(창업 3년 미만) 지원자격 완화*로 우수기술 탄생 지원

  *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기준 면제

- 全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의무구매(판로지원) 적용

  - 정부지침이행(2종) 외 도공자체 기준(3종) 수립으로 판로 지원(총 5종)

3 중소기업과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및 판로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도공형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All-Care* 체계 구축

  * 아이템 발굴~기술개발~등록~활용(판로지원)~사후관리~홍보

- 공공기관 최초 신기술 플랫폼(道公기술마켓) 활용 경진대회 시행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도모 및 신기술 활용 동기부여
-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道公 Test-Bed 지원방안 수립
  - 중소기업 열악한 여건인 시험시공 비용 지원 및 Test-Bed 제공
-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신기술 공모제(온라인) 도입
  - 현장 필요기술을 비대면 · 비공개 방식으로 기술(업체) 선정
- 타기관 협업을 통한 상호 기술활용, 기술실증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대구시 등),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등), 공공기관(서울시설공단, SOC 기술마켓 등)과 우수 중소기업 기술의 공공판로 확대

추 진 성 과	대내	• 道公기술마켓 등록 회원 수 : 3,533명(법인 : 1,388명, 개인 : 2,145명) • 중소기업 신기술 251개, 6,850억 원 활용(연간 약 2,300억 원) • 안전 ·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개발 52건 233억 원 지원
	대외	• 道公기술마켓 등록기술 정부 혁신제품에 17개 선정(공공기관 최다) • 「2020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중기부장관상 수상 • 「건설신기술 발전 유공」 국토부장관상 2년 연속('19~'20) 수상 • 기획재정부 주관 SOC 기술마켓(14개 공공기관 참여) 운영기관 선정

2. 계약분야 비리예방

ICT를 활용한 투명한 구매 프로세스 구축

한국수력원자력

추진배경

- **(외부)** 부패 사례의 발생 및 민간의 한수원에 대한 불신 강화
- **(내부)** 자의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투명성 저하 및 입찰 공정성 저해

단계별 위험요소 파악

- **(구매프로세스)** 계약 프로세스에 대한 사외의 정보 제한
  - 한수원과 계약을 한 협력업체가 프로세스를 제한적으로만 확인이 가능
  - 입찰의 진행상태(입찰서제출, 심사진행, 개찰상태)의 일부만 표기, 검색조건 없음
- **(구매평가)** 계약유형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입찰자의 접근 기회 결여
  - 적격심사에 대한 진행상태 조회기능이 없어 낙찰자의 불안감 가중
  - PQ심사의 경우 수기로 진행함에 따라 업체의 불신 초래 및 오류 가능성 상존
- **(구매통제)** 비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기능의 미약
  - 비위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있으나, 대상의 한계 및 방법의 문제점 존재
  - 특히 담합관리의 경우 담합징후포착 시스템*('15. 4.)이 구현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절차가 부족하여 실효성 미약
    * 일정기간 공급자별 투찰 패턴 등을 분석한 후 공급업체의 담합 가능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 구매 프로세스, 평가, 통제에 대한 객관화된 정보제공 기능 부재

추진내용

1 (구매프로세스 분야) 주요 절차의 시스템화 및 공개로 투명성 확보

- 계약의 주요 프로세스 등 자동 공개를 통한 형식적 투명성 확보
  - 업체가 견적접수 상태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건의 계약진행상태, 유찰여부, 견적 활용 여부를 포함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계약담당자 정보 확인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계약담당자 직접 연결 후 문의사항 해결 가능
- 검색조건 다양화를 통한 실질적 투명성 확보
  - 기존의 입찰 진행상태를 포함하여 입찰제한 해당 시 사유, 입찰서 제출상태,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구매유형, 입찰진행상태, 계약방법, 공고일자 등의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협력업체의 조회 편의성 도모

➡ 프로세스 공개, 실질적 검색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2 (구매평가분야) 적격심사, PQ심사, 제안평가 심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적격심사 진행 항목 조회기능 신규 도입
  - 협력업체가 입찰참여한 계약건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온라인 제출 기능, 적격심사 마감 여부, 적격심사 서류제출여부, 심사결과 확인 가능
- 온라인 규격심사 및 제안평가 시스템 구현
  - 규격/제안평가 결과만 등록 및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제출, 평가 및 이력관리까지의 기능에 대해 시스템 구현

➡ 구매 프로세스의 평가, 통제에 대한 객관화된 관리 시스템 신설

3 (구매통제분야) 담합징후포착 시스템 개선

- 분석 대상 확대 → 예비품 / 일반자재 / 공사 · 용역
  - 기존 보조기기에 한정되어 사용하던 담합징후포착시스템을 예비품(Q, A등급), 일반자재(S등급), 공사 · 용역 분야로 확대
- 분석 방법 개선 → 입찰유형별 기준 수립
  - 기존에는 보조기기 구매 평가기준만 존재하였으나,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각 품목(예비품, 일반자재, 공사 · 용역)별 별도의 기준 신설
- 정성평가 심사 고도화 → 평가자, 평가방법 확대
  - 기존에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없었으나 평가자를 복수로 확대하고 정성평가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객관성 보완

• 분석대상이 제한적(보조기기)이어서, 시스템 운영 효과가 제한적임 • 단일 평가기준을 운영함에 따라 개별 입찰 유형(구매, 공사·용역)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불가	I 취약 요소 O	• 공정위 신고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 담합 입찰 건 현황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내부 개선	• 분석대상 확대(예비품 / 일반자재 / 공사·용역) • 분석방법 개선(입찰유형별 기준 수립)	•정성평가 심사 고도화(평가자, 평가방법 확대)	외부 개선

추진실적

1 (구매프로세스분야, 구매평가분야) 전자상거래 재구축시 해당 기능 반영

- (Step 1) 해당 내용의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분석
- (Step 2) 상세기능 설계 및 인터페이스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
- (Step 3) 전자상거래 오픈 및 해당 ICT 기능 활성화
  - 입찰공고별 진행사항을 Process Map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제공

2 (구매통제분야) 담합방지시스템 구현

- (Step 1) 분석방법 개선

'17. 10.		'17. 11.		'18. 1.~6.		'18. 7.
평가지표(초안) 수립	▶	타 기관의 평가지표 벤치마킹	▶	평가지표(초안)에 따라 시뮬레이션 시행	▶	최종지표 확정 및 시스템반영 요청 (→ 보안정보처)

- (Step 2)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17. 9.~11.		'18. 1.~6.		'18. 7.~12.		'18. 하반기		'18. 하반기
담합포착시스템 개선 관련 요구사항 구체화	▶	담합포착시스템 베타버전 구현	▶	담합포착시스템 정규버전 구현	▶	담합포착시스템 사용 개시	▶	개선 내용 알림 (→ 계약담당자)

추진성과

- 투명한 정부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 소통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진 제시
- 평가제도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민간이 가지는 한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회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
- 담합 등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비리 요소를 발본색원함으로서 건전한 원전 생태계 조성에 기여
- 타 공공기관으로의 높은 전파 가능성 : ICT화 준용 용이

  ⇒ 공공기관 전체의 투명성 강화 및 대국민 신뢰확보의 초석 기능 역할 가능

2. 계약분야 비리예방

비위면직자 취업업체와의 수의계약 비리 예방

한국전력공사

추진배경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8조에 의거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체결을 금하고 있으나,
- 퇴직자 이력관리 부재로 인해 비위면직자 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이 존재
- 비위면직자에 대한 점검강화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필요

추진내용

- 수의계약 자가진단 확대 및 비위행위자와 수의계약 제한('19.12월)
  - 자가진단 대상을 계약금액 5억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 자가진단 시행결과 5년 이내 당사 비위행위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이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경쟁입찰 또는 타 업자와 수의계약 시행

    * 비위행위자가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시 수의계약 제한

- 수의계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완('19.12월)
  - **(계약요청자)** 수의계약 의뢰 시 자기진단 문항에 비위행위자가 수의계약 대상 기업 대표 또는 임원인지 확인 필수
  - **(계약부서)** 계약요청자의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의 해당여부 내용 정확성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수의계약 체결요청건 반송
- 비위 면직(행위)자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 비위 면직자 정보 조회 및 수시 업데이트
  - 계약 의뢰 시 "부패전력업체" 등 전산 사전조회 기능 추가

    * 사내 ERP 시스템 내 확인 기능 삽입으로 서면과 전산 동시 확인 가능

< 비위면직자 취업 업체와의 수의계약 절차 변경 >

기 존	계약요청자		계약부서		계약체결			
	수의계약 의뢰	▶	계약 요건 여부 확인 및 시담	▶	계약 상대자와 계약체결			
개 선	계약요청자		계약요청자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체결
	임원 및 대표자 명부 조회	▶	비위자 명부 확인 및 체크	▶	계약방법 재검토· 법령 확인	▶	수의계약 필요시* 근거검토	▶	수의계약 체결

* 생산자가 1인이어서 대체자 불가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적용 한정

- 해당 규정 적용 및 안내 : 전기공사협회 회원사 등 2,000여 개 사

추진성과

- 비위 행위자의 제재 효과가 재직 시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지속, 사내 구성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까지 청렴의식 확대 기여
- 역량 · 기술 우수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 관련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하며 도입 시 유관업체 및 협회 등의 인적 쇄신 가능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부패행위 시 퇴직 후 5년간의 계약제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퇴직자 소속기관과의 계약제한기간 2년보다 상당히 제재수준이 높아 다소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안내 및 홍보

2. 계약분야 비리예방

시공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한국전력공사

추진배경

- 2014년부터 송배전 협력회사에 대한 자주적인 품질관리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시공품질이 우수한 협력회사를 평가 및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공 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단순히 시공품질만 평가기준에 반영함에 따라 부정당 제재 경력이 있는 업자가 시공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음
- 협력회사의 시공품질 관리능력과 더불어 청렴도를 평가하여 단순히 시공기술이 우수한 회사가 아닌 청렴성을 겸비한 회사를 송배전 시공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하여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정사회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추진내용

- 부정당업자 시공 우수 협력회사 선정 제외('18. 8월)
  -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 이력이 있는 회사는 우수업체 선정 제외
  - 한전 자체 공사에 대한 제재사실 확인과 함께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한전 이외의 공사에 대한 제재사실까지 확인하여 실효성 제고
  - 또한, 2단계 평가(1차 사업소 평가, 2차 본사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회사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 1차 사업소에서 2배수 선정, 본사 최종 확정(전기공사협회 심사 참여)
- 협력회사 직원 대상 청렴윤리 교육 이수 평가('18. 8월)
  -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한 '청렴윤리 이러닝' 교육과정을 협력회사 직원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
  - 시공우수 협력회사 평가 시, 협력회사 직원 청렴윤리 교육 수강 실적을 가점(최대 10점) 항목으로 운영

    * 협력회사 직원 교육 가점 1인당 2점 부여

추진성과

- 부정당업자의 인센티브 수혜를 원척적으로 차단하여 부정·부패 행위 발생 근절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외로 청렴도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협력회사가 지속적인 부정당 행위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협력회사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직원 수준의 청렴윤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청렴의식 저변 확대
-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시공우수 협력회사 선정 시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한다면 민간 건설업체의 청렴도 동반 향상에 기여할 것임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는 시공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될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해 협력회사의 반발이 높았으나, 청렴도 평가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근로복지공단

추진배경

- 공단의 핵심업무인 산재 보상분야에서 부정비리 지속 발생
  - 장해급여 등 산재 보상분야에서 각종 부패사건 지속발생, 산재보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대
  - 장해판정 등 산재보상 혁신으로 산재노동자 중심의 보상서비스 개선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위한 제도정비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요구

추진내용

- 업무절차 개선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부정예방
  - 장해판정과 지급주체 분리

현 재		개 선
• 장해지급 담당자가 장해판정까지 관여 •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장해판정이 진행 → 비리가능성 상존 및 전문성·일관성 결여	⇨	• 장해판정-급여지급의 주체 분리 → 장해유형별 판정 집중과 일원화

  - 장해유형별 전담심사기관 도입

구분	장해등급판정 전담조직	전담심사기관 도입	업무 표준화
개선	산재의학센터 신설, 장해판정 전담직원 확대	장해유형(상병)별 전담기관 지정운영	장해유형별 필수 수집검토자료 목록 마련

  - One-Click 산재신청 및 모바일 민원검색서비스 도입, 이주노동자 외국어지원 확대 등 고객중심 업무프로세스 개선
  - 상·하반기 보험범죄 신고강조기간 및 보험범죄 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예방 및 산재보험 제도 안내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홍보 실시

    * 산재보험 의료기관 31개소 및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2,140명

- Big Data 기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부정탐지
  - **(산재보험 부정수급방지시스템 운영)** 85개 복합시나리오, 위험관리항목 5개 분야 78개 항목 운영을 통해 부정위험 포착
  - **(리스크 자가점검 시스템 신규 지표 발굴)** '19. 24개 → '20. 32개 리스크 지표 발굴로 내부통제 확대
  - **(E-감사시스템 고도화)** 상시예방감사 체제의 현행화로 고위험 사전 검증 체계 구축

- 부정수급 적발 경로 발굴 및 체계적 기획조사를 통한 부정조사
  - **(기획조사 실시)** 보험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된 취약 분야 타겟 설정, 제보 및 검·경찰과 연대한 합동조사 실시
  - **(테마감사 실시)** 산재 브로커 불법행위 및 공무수행사인 부당행위, 금품수수, 갑질,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부정비리 조사 등 고위험분야 테마감사 실시

-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 개정)**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의 의지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 조치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클린의학자문 운영 확대)** 업무담당자의 자문의사 임의선택을 차단, Random 방식에 의한 자문의사 선정시스템 구축으로 의학자문 과정상의 부정개입 차단
  - **(산재의료기관 청렴경영 평가제 도입)** 산재의료기관 지정조건에 청렴의무 신설 및 의료기관 평가 시 청렴노력도 반영

추진성과

- 선제적 부정수급 예방체계 가동 및 업무 개선으로 공정한 산재보상 제공
  - 청렴도조사 부패경험 ZERO 및 청렴도 2등급 달성
- 장해판정 전문기구 신설, 의학자문의 공정 투명한 업무설계로 부정비리 개연성 원천 차단
- 산재 의료기관의 반부패 동참을 위한 업무설계로 민간 청렴의식 확산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추진배경

- 소방용품 유통·판매업자의 불법·미인증 소방용품 유통으로 소방시장의 부패위험성이 증가

  ※ 서울시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2020.1.16.)
  자체적발 '제품검사 시 수입신고필증 위조업체 성능인증 취소' (2020.7.6.)

- 소방용품 유통시장 부패취약분야 분석 결과 국민들의 소방용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

- '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소방기기·KFI 승인·검사 업무에 대한 갑질예방 및 투명성 개선이 필요

추진내용

1 소방산업의 여건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지속적인 취약분야 제거 및 부패사고 제로화를 통한 '소방산업 지속가능경영 확충'을 경영 목표로 설정

- 기관장의 투명한 업무수행 강조, 기술원·제조업체·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청렴문화 소통·확산 의지

소방산업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 **(청렴문화 전파)** 경영진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의지전파, 검사업무 투명성 홍보
- **(불공정 소방업체 근절)** 기관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 예방시스템 강화
- **(상호존중·갑질개선)** 국민과 소방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상호존중 문화 확산

2 청렴문화 전파

- 기관장이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소통강화

- **(CEO 의지전파)** 기관장 주재 반부패·청렴경영 노하우를 소방산업계로 전파 ('20.1월, 신년 인사회)
- **(청렴문자·서한문)** 소방산업체 및 내부임직원 대상 부패취약분야 대상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문자 및 서한문 발송 (4회)
- **(청렴소통·교육)**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 및 청렴소통 (4회)

●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운영 현장컨설팅 추진 ('20.4월)

- **(컨설팅단 조직구성)** 제조업체 ISO37001 인증심사 교육을 위한 총괄(행동강령책임관), 청렴업무담당자, 전문위원 구성 운영
- **(국제수준의 반부패경영 전파)** 소방산업체에 국제수준의 반부패·청렴경영시스템을 전파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위험 예방 (총 7개 기관)

●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용품 공개시험·검사 실시 (총 6회)

-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민 참여 소방용품 시험·검사를 통해 소방용품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중심의 정보제공)** 시험·검사 시스템 공개 및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 체험 제공

3 불공정 소방업체 근절

● 불법소방업체 신고센터 운영

- **(부패유발요인 제거)** 익명신고시스템, 불법소방제품신고를 통한 부당지원금 환수와 불량 소방용품 유통근절로 소비자 권익보호

● 불량 소방용품 설치 현장조사 강화

- **(소방청 협업·리콜명령)** 특정 소방용품 설치 아파트 현장 방문 및 무작위 수거시험 실시

※ 총 21개 성능확인 후 소방청 협업 리콜 명령, 관련규정 개정 ('20.8월)

● 소방용품 제조업체 품질관리·기술교육 지원

- **(품질능력향상)** 품질전문교육기관(KSA)의 최신기술 정보제공 및 소방산업 현장의 고품질 생태계 조성으로 상생협력 강화 ('20.6월)
- **(우수소방용품 보급 확대)** 품질관리컨설팅 지원을 통한 제품검사 효율성 향상 및 소방용품 품질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수소방용품 보급

4 상호존중 · 갑질개선

● 제품검사직원의 갑질관행 예방시스템 강화

- **(상생협력 인식개선)** '검사기관-수검기관' 상하관계 인식을 '상호존중의 상생 파트너십'으로 문화정착
- 제품검사 업무프로세스 개선 (규정 개정완료, '20.10월)

1단계(검사 전)	2단계(검사 진행 중)	3단계(검사 후)
• 갑질자가진단 점검표 작성 • 갑질신고 핫라인 안내	• 청렴윤리팀 현장순회 • 검사결과 등록시 청렴검사 확인	• 검사과정 부당경험 조사 • 갑질모니터링 사후관리

● KFI 임직원 갑질 근절대책 마련 추진

-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준수)**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로 '탈바꿈'하여 국민과 상호신뢰 이미지 제고
- **(갑질근절 동참 서약)** KFI 임직원 상호간 인격 존중의 문화 선도 및 개개인 인식·행동의 자발적 변화 유도 (전 직원, '20.4월)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KFI 내·외부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갑질신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운영

추진성과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시스템 구축

- **(불법소방용품 근절)**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한 제품 품질향상 및 제도개선
- **(제품검사 갑질예방)** 제품검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제품검사 업무프로세스 개정을 통한 갑질예방
- **(청렴생태계 구축)** KFI-KSA MOU체결을 통한 소방제조업체 반부패경영시스템 컨설팅 협의체 구성
- **(반부패경영시스템 운영)** ISO 37001 효과성 제고 및 부서별 부패리스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내부심사원 양성

● **(효과성)** 불법소방용품 비위사업자 경각심 제고
주방소화장치, 예비전원 등 부당유통업체 인증취소 및 고발조치로 비위사업자 강력대응

● **(도전성·다양성)**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인식 개선
국민 참여 소방용품 검사, '소방산업체'대상 반부패경영 현장컨설팅, '임직원'의 갑질예방 및 상생협력 등 맞춤형 정책 추진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부당수급 및 가짜정보를 활용한 부패행위 발생 통제

한국에너지공단

추진배경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발전시장(RPS) 규모가 대폭 확대 (태양광 중심으로 보조금, 민간자본의 발전시장 투자 집중)
-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보조금 부정사용, 발전소 투자사기, 편법개발 등 보조금(공공)·발전시장(민간) 부패위험 증가
- 보조금 집행·관리, 발전시장(RPS)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KEA의 핵심업무로 신재생에너지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시급

추진내용

보조금 부정사용 제재 미흡, 가짜정보 유통 및 사후관리·규정 미비 등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발전시장(RPS) 부패발생위험 요소로 분석

(원인1) 보조금 부정사용 제재 미흡	(원인2) 태양광 가짜정보 유통	(원인3) 사후관리 및 규정 미비
• 시공기업의 불법 하도급, 명의도용 등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시행되지 않음	• 태양광 설비, 입지, 전력가격 등 일반인은 전문정보의 접근·획득이 어려워 가짜정보 범람	• 사후관리 미비로 본래용도가 아닌 건축물로 활용되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 → REC 부당이득
• 수급자의 잘못된 인식 정착(참여제한, 환수조치 없는 사각지대 존재	• 이에 따른, 태양광 분야 허위·과장광고, 허위견적 분양사기 피해 증가	• 법·규정 미비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발전소 운영 → REC 부당이득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원인1 해결방안)**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및 부정사용 강력 제재

보조금 투명 집행·관리	• 피해접수 콜센터(1670-4260) 운영 → 부정사례 적극 수집 •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 불법하도급 등 보조금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은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계약해지 및 고발·수사의뢰 조치 → 강력제제

● **(원인2 해결방안)** 태양광 가짜정보 근절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사기피해 예방	• 태양광 피해유형 분석 및 예방방법 개발 → 정확한 정보제공 - 카드뉴스, 리플릿, 유튜브, 반상회보(행안부) 및 교육개설 • 신재생E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전국 12개 지역, 52명)

● **(원인3 해결방안)** RPS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법령·규정 마련

발전시장 건전성 회복	• 발전소 사후관리 강화 및 건축물 REC 가중치 세분화 •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RPS제도 개선) • 신규 사업자를 위해 입지·전력계통·일사량·경제성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ReCloud)

추진성과

● 보조금 사용 실태조사 및 부정사용자 제재를 통해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피해접수 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사용 수집 채널 구축
- 보조금 사용자 · 시공기업 전수 실태조사(약 3만 개 소)로 보조금 집행 · 관리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부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한, 협약 해지를 통해 일반시민의 부정사용 피해 예방, 의심기업은 고발조치로 민간분야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

● 가짜정보 근절, 전문조직 신설로 민간피해(생활적폐) 사전예방

- KEA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허위광고 등의 민간분야 피해예방에 기여
- 종합지원센터는 일반 시민접점에서 보조금 신청, RPS컨설팅 지원으로 정보부족에 따른 부패위험 차단

● RPS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법령·규정 마련으로 기존 신재생사업자의 부당수익을 방지하고, 예비사업자의 사기피해 예방

- 태양광발전소 사후관리, 가중치 마련 및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등 RPS 제도 개선 활동으로 사업자의 부당수익 비위 예방
- 태양광 발전사업 원스톱서비스 제공(ReCloud)으로 발전사업 전주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분양사기 등 예비사업자의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태양광 발전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공공기관 사칭, 무상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었으나, KEA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보조금·발전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 및 전파

  * 태양광 예비발전사업자, "한눈에 일사량인허가 정보 체크 가능"(전기신문, '19.6월)

  * 에너지공단, 태양광업체 종합점검…"불법행위 업체는 퇴출"(연합뉴스, '19.7월)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대행의 투명성 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고, 매 2년 마다 평가 후 재약정을 통해 위탁 운영 중

  *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 지속적 직업생활을 위해 부수적 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인력

- 최초 사업위탁 기관 선정에는 별도 평가위원회 및 평가 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반면, 재약정 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단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비계량(정성) 방식으로 평가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물량* 대폭 증가에 따라, 부실 위탁기관의 재선정 가능성 역시 증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수행기관 재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을 통해 부정·부패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예산(백만 원) : ('17) 14,486 → ('18) 20,726 → ('19) 55,477 → ('20) 94,809 → ('21) 155,185

추진내용

- **(위험성 분석)** 사업물량 및 수행기관 재선정 현황, 공단 감사실 및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부패 위험성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 최근 5개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황(개소)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근 5개년 증가
신규	2	1	3	28	47	45(225.0%)
재선정	28	28	29	31	58	30(107.1%)
수행기관	30	29	32	59	105	75(250.0%)

- **(개선 방향 설정)**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및 재평가 시 직원의 재량이 배제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개선방향으로 설정

- **(개선 절차 추진)** 기준 마련 → 관련 내규 개정 → 현업 적용 단계로 진행
  - **(평가 기준 마련)** 타 사업 평가표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기관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표*"를 개발

    * 7개 항목 12개 기준(의무기준 1개 포함)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책임성 및 준수성, 사업추진 실적, 근로지원인 고용조건 개선 노력, 전담인력 운영, 근로지원인 배치 및 인력풀 구축, 부정사용 적발 등

  - **(관련 내규 개정)** 사업수행능력평가표를 반영한 공단 내규* 개정 추진

    *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 처리규칙 제112조 및 별지 제28호 서식 등

〈 내규 개정 결과 〉

규칙 개정 전	규칙 개정 후
제112조(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 ①~④ (생략) 1.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수행기간 중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12조(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 ①~④ (생략) 1.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점수 70점 이상 3. 사업수행기간 중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현업적용)** '21년도 수행기관 선정 시, 재약정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 후 부실 기관 탈락*

    * 평가 대상기관의 6.3%가 기준 미달로 재약정에서 제외

추진성과

- **(수행기관 평가체계 정립 및 적정 수행기관 유지)** 개선 기준 적용 전 '20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재선정 비율은 98.3%이었으나, '21년 수행기관 재선정 비율은 87.6%로 약 10.7%p 감소

〈 2021년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황(개소) 〉

연도	전년도 수행기관	재수행 기관	신규 기관	연도 말 수행기관
2020	59	58(98.3%)	47	105
2021.6	105	92(87.6%)	46	138

- **(담당자 재량권 남용 방지)** 계량화된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모호한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 방지하여 위탁기관의 반복 선정 등에 대한 부정 요소 사전 차단

- **(사업수행능력 미달 수행기관 참여 제한)** 사업 역량 미달 기관의 퇴출을 통해 능력 있는 신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사업 참여 수행기관의 반발)** 일정 요건 유지만으로도 재선정에 유리한 일부 수행기관의 반대 존재
  - 공단 본부(중증지원부)와 근로지원인 수행기관 협의체 간의 간담회 개최, 공단 소속기관 실무 담당자 중심의 현장 설명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취지 및 효과*에 대한 공감 유도

    * 부실기관의 난립은 결과적으로는 사업 축소 및 폐지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

- **(추가적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내부 직원의 불만)** 별도 평가 절차를 위한 업무증가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우려 존재
  - 문제점 발굴 단계에서부터 소속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

    * 위탁수행기관의 업무 투명성 제고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소속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강화 및 제도 개선*의 기회 마련

    * 지도점검 방법 개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 부패예방지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지도점검 체계 개선 등 추가적인 긍정적 연쇄 효과 발생

3.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예산 부당집행 예방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추진배경

- **(추진배경)** 내부 예산집행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부정사용, 예산낭비 등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자율적 · 선제적 예방대책 필요

기관의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분석

⇨ **(부패위험 노출)** 대규모 예산('19년, 3,196억 원) 운영과 해외사무소 전도금 등 예산 집행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한 예산오용의 "잠재 위험요인" 존재

* 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ICT 전문가 자문',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예산집행 유형 존재

⇨ **(내부 부패인식)** '18년 청렴도 조사 결과, "위법·부당 예산집행" 항목 '17년 대비 △0.64점 하락(['17년] 7.82 → ['18년] 7.18)하여 개선이 시급

- **(문제점 인식)** 재정누수, 부당집행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부서별 소관업무의 위험성 점검, 자각·인식을 통해 4대 영역 발굴

① **(해외사무소 예산 오용)** 해외사무소 특성상 전도금 지급*, 분기별 정산(엑셀활용)등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등 "예산 오용 위험요소 존재"

* 해외원격 근무지 특성상 분기별 일정 사용액을 사전에 지급하여 예산 운영
('18년 기준) 5개 해외사무소(싱가포르, 하노이, 인도, 미국, 호치민) 전도금 예산 22억원

② **(출장비 재정누수)** 출장 신청 및 여비 정산처리의 세부지급 기준 부재로 '교통비', '식비', '여비' 등 "과다지급 지속 발생"

* ('18년 기준) 국내출장비 9.8억 원 집행(약 1만 4천 건)

③ **(부서운영비 부당사용)** 고질적으로 부서운영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 부족과 불투명한 집행으로 인해 부적절한 "예산 낭비 · 오용 발생"

* ('18년 기준) 부서운영비 3억 원 집행(약 5천 건)

④ **(불투명한 자문비 지급)**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자문분야에 대한 적합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무분별한 자문비 지급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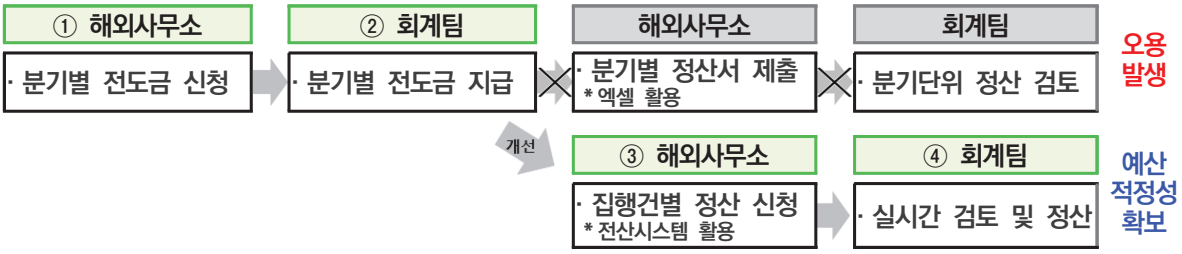
* ('18년 기준) 외부전문가 활용비 25.7억 원 집행(약 7,429건)

추진내용

「예산 부당집행 예방 4대 백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예산집행에 대한 재정누수 근절의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백신1 해외사무소 실시간 예산집행 점검체계 구축(지침개정, '19.7월)

- **(실시간 점검체계 마련)** 해외사무소 운영 공공기관 최초 전도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내부통제를 통해 예산오용 사전 차단



  - **(전도금 관리시스템 도입)** [기존] 분기별로 전도금 정산(엑셀활용) ➡ [개선] 전도금 관리시스템('19.7월 완료)을 통해 건별 증빙첨부 · 정산 및 실시간 사전 검토(회계팀) 후 결의
  - **(책임성 강화)** 회계 관리 강화를 위한 현금 및 예금 집행에 대한 입·출금, 잔액관리의 책임소재(소장) 관련 조항 개정('19.9월 완료)

    * (기존) 수표발행에만 한정 → (개선) 현금 및 예금의 입출금 포함
  - **(규정 현행화)** 실시간 정산 프로세스 실행에 따른 '회계장부', '전도금 정산서' 등 관련 조항의 내용 반영('19.9월 완료)

백신2 출장여비 예산누수 요인 사전차단(지침마련, '19.4월)

- **(출장업무 처리지침 제정)** 교통비 등 정산방식의 강화와 증빙(영수증, 현지사진 등) 기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예산누수 요인 사전 차단
  - **(세부기준 재정립)** 교통수단별 비용 및 거리 산정방식, 출장 증빙 등의 세부적 기준 마련('19.4월 완료)
  - **(전직원 대상 교육)** 출장업무 관련 정산, 증빙 등 변경사항 및 출장비 부당수령 사례 등 설명을 통한 교육추진('19.1월·3월 완료)

백신3 부서운영비 사용 책무성 강화(지침개정, '19.9월)

- **(부서운영비 인식개선)** 부서운영비를 조직(실, 단·본부, 팀) 내 공통경비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개정 및 관리 책무성 강화
  - **(관계규정 개정)** [기존] 보직자 중심의 '직위' 기준(실장, 단장·본부장, 팀장) 운영 ➡ [개선] '조직' 기준(경영전략실, 단·본부, 팀)으로 지침 내 명칭 변경('19.9월 완료)
  - **(내역공개)** 실, 단·본부 부서운영비를 대상으로 직위, 사용일자, 집행목적, 사용장소, 집행금액 등의 사용내역 공개*('19.8월~)

  * 기관 업무포털 내 윤리경영 게시판을 활용하여 매월 공개

백신4 전문가 자문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지침개정, '19.9월)

- **(외부 전문가 활용 객관성 확보)** 자문회의, 포럼운영 등 업무 수행 간 전문가 섭외 시 경력확인 등을 통해 전문가 활용 업무 청렴성 제고
  - **(전문성 검증)** 전문가수당 지급 신청 시, 전문가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지침 개정('19.12월)하고 적합성 검증 후 예산 집행

  *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자문 관련 경력사항, 자문내용 등을 검토

추진성과

- 해외사무소 전도금에 대한 집행건별 내역을 실시간 점검 및 정산을 통해 예산오용 사전차단

  * 연도별 전도금 액수 : ('18년) 2.2억 원 ⇨ ('19년) 2.7억 원

  ⇨ 해외사무소 운영 공공기관 최초 사례로 예산오용 사전차단. 향후, 유관기관(약 30여개)에 확산하여 국가 전반의 투명한 예산 집행 가능

- 출장 신청 및 정산 처리의 세부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18년 동일기간 대비 '19년 출장 예산 절감 및 재정누수 방지

  ⇨ 매년"출장비 17% 절감"효과 기대
  ['18년(1~9월)10,876건/7.2억원 ⇨ '19년(1~9월) 9,873건/5.9억원]

- 부적절한 사용 위험성이 높은 '부서운영비'와 기관 특성상 예산비율이 높은 '전문가 활용비' 등에 대한 무분별 집행 예방

  ⇨ 매년 1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집행 투명성 확보
  ('18년 기준) 부서운영비(약 3억 원), 전문가 활용비(약 26억 원)

4. 기관 간 협업

정보공유, 협업을 통한 사기수출 방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추진배경

- 최근 수출입 가격 조작 등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무역사기범죄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 필요
  - 무역사기범죄를 통한 부정대출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역보험기금'의 누수 야기
  - 사기수출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원기관과 수출기업 간 상호불신으로 다수의 건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축소로 국가 경제까지 부정적 영향
- 불법 무역 · 외환거래 근절로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청 등과 정보공유 · 협업 강화 실시 필요

추진내용

-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의 MOU체결
  - 한국무역보험공사-관세청간 협업으로 사기수출방지 및 건전수출기업 지원확대

K-Sure		MOU 체결		관 세 청
• 무역보험지원 내역 및 사고정보 공유 • 성실무역업체 지원우대	⇨	• 사기수출 방지 • 건전수출기업 지원 확대	⇦	• 공사 제공 정보 활용한 관련 정보 공유 • 성실무역업체 명단제공

⇩

심층조사	• 역외탈세 · 국부유출 대응협의회 •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달

● 무역금융범죄 사전차단을 위한 정보공유·협업 체계 구축 완료

〈 무역금융범죄 적발 정보공유 · 협업 체계도 〉

정보공유	심층조사
무역 · 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 협약 체결 • 관세청과 MOU 업무협약 체결 - 무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무역금융범죄 사전차단 기반 마련	역외탈세 · 국부유출 대응 협의회 •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한국은행 등 - 불법외환거래, 자금세탁 관련 대응
+	+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 무보, 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 9개기관 - 무역금융범죄와 관련된 해외금융거래 정보교환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 관세청, 서울세관, 금융정보분석원 등 - 무역금융범죄 정보분석 및 수사실시

성과 및 노하우 공유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통한 무역금융범죄 적발 과정

① 연 2회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 이용업체 대상, 수출통지 이상패턴 포착

② 이상업체에 대한 거래증빙 및 수입자 앞 거래확인 실시

③ 사기의심업체 한도 해지

④ 관세청 통보 및 수사를 통하여 사기업체 적발

● 개선사항

- 기존에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역금융 관련 정보 공유만을 수행하였으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정상 수출거래 조사
- 전문 수사 · 정보 전담 기관과 협업하여 무역금융범죄 관련 심층수사 및 분석 실시 가능으로 무역사기 적발이 가능하게 개선

〈 비정상 수출거래 조사 및 정보공유 개선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업무체계	• 무역금융 관련 정보만을 공유	→	• 무보 모니터링 시스템 결과 공유
효과	• 정보만 공유하여 효과미비		• 비정상 수출거래 가능성 조사 가능

추진성과

- 무역금융 사기 적발을 위한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 특별 모니터링 및 수출통지 이상징후 점검

〈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점검 실적 〉

연번	모니터링 종류	시기	점검업체수	점검한도금액	조치내용
1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 특별모니터링	'16.10월	216개사	U$972백만	점검결과 조치대상 36개사 U$361백만 중 U$43백만 감액
		'17.10월	136개사	U$695백만	점검결과 조치대상 33개사 U$193백만 중 U$39백만 감액, 1개사 관세청에 고발
2	수출통지 이상징후 점검	'17.3월	137개사	U$539백만	1개사 관세청에 고발
		'17.7월	209개사	U$519백만	

- 상기 모니터링을 통해 M사의 4천억 원대 무역사기를 적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 중인 U$220만 한도를 해지하여 기금 손실 방지('17.7월)
  - 무보기금 손실 U$220만을 사전 예방하고, 추가적인 국부유출 사전 차단

이상징후 포착 및 관세청과 협업 내용

- **무역보험공사 : 이상징후 포착 및 상세 내용확인**

① 수출금액이 U$50만, U$100만 단위로 일정하게 이뤄진 점
② 수입자 구매담당자 이메일주소가 회사명의 도메인 아니고, 전화번호 국번이 본사 소재지가 아닌 점
③ 수출대금 입금지가 수입자 소재지인 중국 천진이 아닌 심천인 점
④ 수출업체 최근 3년간 매출이 매년 30%이상씩 급증한 점

⇒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기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무보 북경지사 및 상해지사에서 수입자 유선/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입자간 거래가 없음을 확인

- 한편,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15년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건 2,948억 원의 무역금융 편취 적발

- 지속적인 무역금융사기 모니터링으로 ① 무역보험기금 누수 방지 및 ② 건전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4. 기관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반부패협력 강화

한국수출입은행

1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추진배경

- OECD는 '97년 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는 '99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중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97년 합의, '99년 발효
  - *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 ** OECD회원국 총 38개국 및 비회원국 6개국 비준(총 44개국)
- 뇌물수수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 기회(a level playing field)를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

- 동 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99년 1단계, '04년 2단계, '11년 3단계, '18년 4단계 심사 수검 후 현재 후속조치 진행 중
  - 외교부 주관으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여러 기관이 공동대응

추진내용

- 각 부서별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
  - **(윤리준법부)** 협약준수 관련 업무통할, 뇌물방지 관련 내부 통제, 협약준수 관련 OECD 회의 참석 등
  - **(여신총괄부)** 여신실행 과정에서의 수출신용 관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 등 담당

- **(경협총괄부)** EDCF 지원과정에서의 개발협력 관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 담당
- **(법무실)** 뇌물방지관련 국내외 법령 위반 시 각종 조치(수사 기관 앞 신고절차 등) 등에 대한 자문 제공

● 여신거래청렴유지세칙 개정 및 뇌물방지 심사 매뉴얼 제정

- 개별여신 관련 단계별(승인신청 접수 → 검토 → 심층조사 → 지원 의사결정 →사후관리) 확인사항 및 필수 action 배포
- 지원대상 수출거래의 뇌물연관성 의심 사유 발생시 ①지원금지대상자 목록(WB, ADB 등의 watchlist) 등재여부, ②뇌물제공행위 방지제도 등 내부통제제도 구축현황 파악, ③지원 대상 사업 타 거래 당사자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등을 시행하는 방안 등 마련

추진성과

● OECD 뇌물방지작업반측은 한국의 4단계 수검 후 후속조치 이행여부 평가 중으로, 당행 소관 후속조치*는 이행으로 평가('21. 6월 기준)

* ECA 및 ODA 기관 직원 앞 해외뇌물범죄 위험 징후, 신고절차 등 교육

●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국제사회 반부패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제고에 기여

2 자금세탁방지의 체계적 위험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추진배경

- 테러자금, 탈세 목적 자금세탁거래 등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거래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강화되는 국내외 법규 및 제도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및 대응능력 강화 필요

추진내용

- 여신부서의 고객확인제도(KYC) 이행에 대한 전략적 관리
  - KYC 전반에 대한 세부이행 지침 수립 및 지속적 개선
  - RPA* 기능(KYC 수행 자동화) 구축하여 여신부점의 KYC 수행 편의 도모
    *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 단순·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하여 자동화
  - 기존고객에 대한 신규여신 승인 시 KYC 생략 가능하도록 고객확인 업무 간소화
    * 단, 신규상품 승인 시 고객위험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생략 불가
  - 여신부서의 KYC 정보 및 검증자료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 KYC 이행 관련 여신부서의 질의 등에 대한 실시간 자문 제공
-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제도(STR*) 운영
  -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분석 및 보고 등
    *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자금세탁 관련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 앞 보고
- 전 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및 연수 실시
  - 외부 콘텐츠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온라인 교육 실시
- 자금세탁위험평가 이행을 통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 관리
  - 자금세탁위험 통제 관련 제도·절차의 적정성 및 유효성 확인
  - 고위험 분류* 부점 직원 대상 맞춤형 AML 교육 실시
    * 비거주자 등 고위험 고객 비중이 높거나 연간 고객확인 건수가 많은 부점

추진성과

- 고객확인제도(KYC) 수행 자동화 RPA 구축을 통해 여신부서 KYC 업무시간 절감, 단순 반복 업무 오류 감소로 직원 만족도 향상
- 기존고객에 대한 신규여신 승인 시 KYC 생략 등 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 개선
- 의심거래보고(STR)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흐름을 검토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속한 보고
- 전 직원 대상 AML 교육 및 자금세탁위험평가를 통해 인적·물적 시스템의 공고화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업무특성상 계좌개설 및 수신업무가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초기에는 타 금융기관 대비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으나, 꾸준한 직원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식 제고 및 업무효율 강화

4. 기관 간 협업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유통 불공정 거래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진배경

- 공단 각종 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요소 확인과정 중 지속적으로 수기계산서를 발행하여 보험급여비를 청구하는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가 확인되어,
- 수기계산서의 적정 여부 점검을 통한 소득축소 및 탈루 등 불공정 거래 개선 필요

추진내용

- **(사례 발굴)** 불공정 거래 개선팀 전 부서 대상 불공정거래 · 공정거래 사례 실태 점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던 중 판매업체의 소득축소·탈루 사례* 확인

    *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판매금액을 축소한 후, 국세청에 신고
- **(기관 간 소통)** 국세청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장기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상호 자료연계를 위한 법령 등 개정 필요성 공감
- **(기관 협업)** 국세청과 협업으로 공적급여비용 소득축소·탈루 방지를 통해 세수 확충방안 마련
  -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확대 내용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신청·지급 내역" 강조하는 내용 명시
- **(정보 공유)** 대전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소득누락 의심업소 자료제공 및 점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용 지속증가 요인 분석 중 판매업체의 소득 축소탈루 사례 확인
  - 의심업소 10개소에 대한 자료제공 및 국세청의 자진신고 유도

추진성과

- 대전충청지역 관할 판매업소 중 '18년도 수기세금계산서 제출 지급금액 상위 10개소 추출하여 1억9천2백만 원 적발 및 자진신고 유도

  * 미신고 업소 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지침 개정을 통한 소득탈루 방지대책 근거 마련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기관장 솔선수범 청렴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강원랜드

추진배경

-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향한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리더십과 솔선수범 의지를 청렴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 미흡
- 청렴정책 실행을 주도하는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의 구심점(추진단장)과 정책참여 기능 부재로 인해 실천조직의 실행력·추진력 한계 봉착
- 기관장과 직원들의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소통 시스템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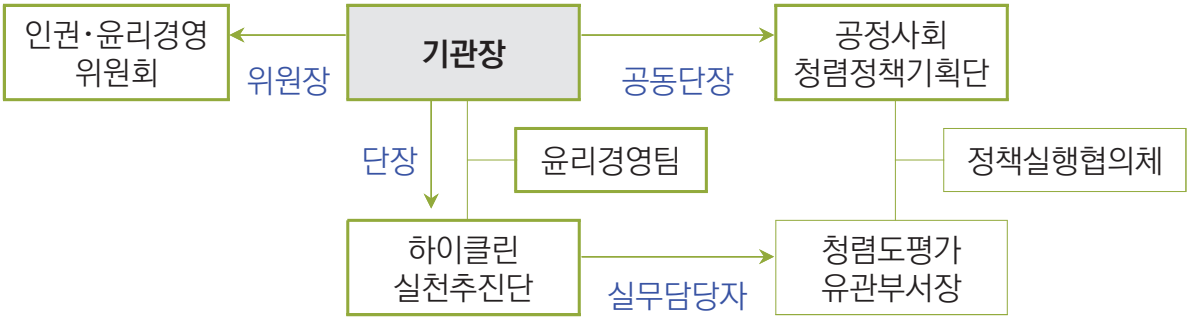
추진내용

- 기관장의 직접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청렴정책 최고 심의기관 '인권·윤리경영위원회'(총 9명) 신설
    - 기관장이 위원장으로서 청렴정책 수립의 선봉 역할 수행
    - 행동강령책임관, 노동조합 대표, 하이클린실천추진단 대표 등 3명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하여 전사적 청렴정책 의견 수렴
    - 학계·법조계 등의 외부위원 5명(과반수)을 위촉하여 전문성 확보
  - 청렴정책 내부 Control Tower '공정사회 청렴정책기획단' 신설
    -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이 공동단장으로서 청렴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패 사각지대 해소의 시너지 창출
    - 청렴도평가 부문별 유관부서장(25명)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반부패 과제 발굴과 이행의 책임 관리를 통해 실효성 제고

- 지속가능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윤리경영팀' 신설
  - 윤리경영 지표(청렴도평가)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청렴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전사 내부조직평가에 반영
  -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진단, 정책 기획, 이행점검, 환류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 수준 제고
  - 청렴감사팀과 '정책실행협의체'를 구성하여 반부패 추진계획 실행

- 하이클린실천추진단 청렴정책 실행력·추진력 강화
  -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을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직속으로 배치하고 위원장을 추진단 단장에 위촉하여 추진동력 확보
  - 하이클린실천추진단 대표를 인권·윤리경영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선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기능 부여
  - 기관장이 하이클린추진단 대상 청렴특강을 직접 실시하여 반부패 리더십과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결속력을 강화

〈 기관장 반부패 리더십 기반 청렴정책 추진체계 〉



- 청렴소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렴공감대 확산
  - 사내 인트라넷에 청렴채널 신설(청렴소통 게시판 및 청렴소식 운영)
  - 기관장 및 임원 청렴편지, 실장 청렴메시지 릴레이, 청렴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전파

추진성과

- 청렴정책 추진체계에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으로 고도화
  -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자문을 통한 청렴정책수립 대외 신뢰성 확보
  - 공정사회 청렴정책기획단 발굴 반부패 개선과제* 100% 이행
    * 의결과제 3건, 제도개선 24건, 청렴활동 15건 등 완료
  - 진단, 기획, 점검, 환류의 청렴정책 추진 4단계 확립

-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의 다양한 대내외 청렴활동 실시
  - 내부조직평가 반영 청렴활동 성과 전 부서 초과달성
  - 대외 청렴문화 확산활동 적극적 추진
    - 폐광지역 3개 지역축제 청렴부스 운영
    - 청렴인형극(아동), 청렴토크·청렴릴레이(청소년), 청렴콘서트(성인)

- 기관장 반부패 리더십으로 청렴공감대 형성 및 내재화
  - 기관장 및 임원 청렴신뢰도 급상승
  - 권익위 청렴도평가 지속적 상승 견인('18년 5등급 → '20년 3등급)
  -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2019년·2020년 2년 연속 1등급 달성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체계적 반부패 제도개선과 전사적 청렴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영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 어려워 내부구성원들의 실망감과 피로도가 누적됨

- 이에 고위직을 중심으로 직원들과의 청렴소통을 강화하여 독려하고 기관장과 하이클린실천추진단이 솔선수범하여 내부 청렴공감대를 내재화하여 극복함

5.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관리자

관리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추진배경

- 조직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노력
  - **(관리자 교육)** 매년 고위직 및 직책보임자에 대한 별도의 부패방지, 직장 내 고충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지도 역량을 강화
  - **(청렴 수준의 성과평가 반영)** 고위직의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 개인별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부서장의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경제적 보상(성과급)과 연계

    * 경영성과평가지표 중 '윤리경영' 항목으로 5% 반영

-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인식
  -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는 관리자의 의식 개선과 자기주도적 청렴도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하고, 개인별 부패위험성(청렴도) 진단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금전적 보상에도 한계
  - 승진, 보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가요소에도 관리자 청렴도 항목(상향식 평가)을 추가 반영하는 제도적 강화 필요

〈 관리자 청렴도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 강화 〉

기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개인별 청렴도 측정결과)	→ **성과평가** (윤리경영 항목 5% 반영)	→ **경제적 보상** (성과급 지급)
보강 (신설)	**상향식평가** (관리자 청렴도 20점)	→ **근무성적 평가**	→ **조직 및 신분적 보상** (승진·보임·연수)

추진내용

- **(관리자 평가지표 청렴도 항목 신설)** 관리자 근무평가 중 상향식 평가(직원→관리자) 지표에 '관리자 청렴도' 항목을 신설*

  * 상향식 평가 점수(100점) 중 관리자 청렴도 항목으로 20점 배점

  - 부하직원은 체험을 토대로 공정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등 소속 상사의 청렴성과 반부패 노력 정도를 직접 평가

  - 인사관리규정세칙 개정('20.10.30.) 및 '20년 근무평가부터 적용·시행

〈 인사관리규정 세칙 개정 전·후 비교표 〉

현 행

[별지 제7호 서식] 상향식평가표

상 향 식 평 가 표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책	직급	성 명
본부	부(실)	팀			

2. 평가자 유의사항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역량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관 찰 내 용	평가기준 S	A	B	C	D	평가점수
업무지식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지식 보유 여부 및 신규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19	18	17	16	15	
업무 추진력	20	주어진 현안의 문제점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량	19	18	17	16	15	
책 임 감	20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 또는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자세	19	18	17	16	15	
의사소통	20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속 직원의 고충예방 및 동기부여에 노력을 기울이고,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량	19	18	17	16	15	
리더쉽	20	소속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단위업무의 장으로서 조직을 목표로 이끄는 역량	19	18	17	16	15	
평가자 의견 및 평가점 합계								점

4. 평가자 기명날인

본인은 이 평가표가 평가대상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상향식평가표

상 향 식 평 가 표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책	직급	성 명
본부	부(실)	팀			

2. 평가자 유의사항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역량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관 찰 내 용	평가기준 S	A	B	C	D	평가점수
업무지식	20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지식 보유 여부 및 신규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19	18	17	16	15	
업무 추진력	20	주어진 현안의 문제점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량	19	18	17	16	15	
책 임 감	20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 또는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자세	19	18	17	16	15	
의사소통	20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속 직원의 고충예방 및 동기부여에 노력을 기울이고,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량	19	18	17	16	15	
청 렴 도	20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유지하려는 노력	19	18	17	16	15	
평가자 의견 및 평가점 합계								점

4. 평가자 기명날인

본인은 이 평가표가 평가대상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추진성과

- 소속 직원과의 청렴 소통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와 청렴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
  - 관리자(임원·부서장·팀장) 청렴도를 관리자 개인별 성과평가에 반영(금전적 보상)하는 기존 제도에 더하여,
  - 승진·보임·연수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가에도 반영하여, 청렴 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
- 청렴한 리더를 우대하는 인사제도 마련을 통해, 인사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와 근무평가 제도에 대한 내부적 신뢰 강화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패트롤」 및 「다가치 Hi-Five」 운영

근로복지공단

추진배경

-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금품수수·성희롱·힘희롱 등 중대 비위사건 근절을 위한 노력 필요
- 직원 1만 명 시대 진입으로 세대·직급 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하향식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다같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필요

추진내용

-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한 「청렴패트롤」 도입
  - **(개념)**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수시·정기 순찰 같은 노출형 상시감찰 활동
  - **(취지)** 사후적발·처벌 위주의 소극행정을 넘어 사전예방·제도개선으로 비위행위 발생 위험요소의 사전 차단
  - **(운영방식)** 소속기관 직원 심층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테마형	현장소통형
갑질, 성희롱 등 조직문화 저해행위, 관행적 비위행위 등 테마 선정	애로사항 수집,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비위사례 전파 등
1분기 성희롱근절 2분기 저녁 있는 삶 3분기 태움 근절	1차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2차 비위 위험인물 파악

* 감사실 연인원 108명 투입, 소속기관 54개소 방문, 607명 직원 면담

-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5대 실천운동 「다가치 Hi-Five」 전개
  - **(목적)** 나부터 실천하는 자정노력으로 공단 조직문화 개선
  - **(방법)** 직원 자율 설문 실시
  - **(5대 실천과제)** 회식·보고·관계·소통·공사구분별 1개 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5대 실천운동 다가치 Hi-Five

1. 건강한 회식 1·2·3
   (Yes1) 1차만, (Yes2) 2시간 이내
   (No3) 참석강요, 음주강요, 술잔돌리기 금지
2. 똑똑한 보고와 회의
3. 모두에게 존댓말! 직위로 호칭을!
4.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5. 지나친 사적관심 NO!

- **(실천운동 전개)**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제작·설치, 업무용 수첩 5대 실천과제 게시, 홍보물품(마우스패드, 메모홀더) 제작 배부

● 「나쁜 조직문화 해우소」 설문조사 실시

- **(목적)** 신규직원 증가로 인한 세대 간 인식차로 유발되는 조직갈등 개선
- **(방법)** 전 직원 이메일 설문

구분	해우소 1차	해우소 2차
내용	"어서와 갑질은 처음이지?"	"어서와 부당업무지시는 처음이지?"
문항	내가 경험(직접, 간접)하거나 생각하는 '갑질'은?	내가 경험(직접, 간접)하거나 생각하는 '부당업무지시'는?
응답현황	1,805명	1,432명
활용	· 설문결과 전 직원 공유하여 각 세대·직급 간 인식차 해소 · 감사인력을 활용한 지속적 점검 및 교육 실시	

추진성과

● 갑질 척결 등 조직문화 개선 견인, 부패사건 외부적발 "0"건

● 노출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전 구성원의 청렴문화에 대한 체감도 향상

● 조직문화 저해행위 감소, 중대비위 감소,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감사실 직원의 상시 노출에 대한 소속기관 및 직원들의 거부감 표출

- 사업계획 소속기관 전파, 직원 면담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 설명 및 홍보

● 1만 명 조직 확대에 따라 구성원 다양성 가속화, 세대 간 격차 심화로 소통 부재

-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소통 활동 및 구성원 참여 독려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새내기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 「청렴루키」 운영

부산항만공사

추진배경

- 부산항만공사가 청렴 모범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관을 통한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 · 내재화가 필요
- 청렴의식 및 공직관은 특히 입사 초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여 입사 3년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루키(Rookie) 신설 · 운영
- 각종 교육 · 캠페인 등 청렴성 제고활동을 통해 신입직원의 청렴한 공직관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통한 청렴문화 상향식 확산 도모

추진내용

〈 부산항만공사 청렴루키 운영과정 〉

1. 추진체계 구축		2. 중점과제 이행		3. 내외부 청렴 내재화
• 시니어 청렴조직과(리더, 실무단) 협업 • 청렴의식 강화활동	➡	• 주도적으로 청렴과제 수립 · 이행 • 청탁금지법 이해도 제고	➡	• 공사-이해관계자 간 청렴 네트워크 구축 • 부패유발요인 제거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1기 청렴루키 신설(2018)
  - 사내 청렴조직 "청렴리더", "청렴실무추진단"과 청렴정책 수립 · 실행의 보조역할 수행
  -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청렴캠페인(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독후감, 청렴콘테스트 참여, 가두캠페인, 부패공판체험 등) 추진
- 중점 추진과제 실제 이행을 위한 제2기 청렴루키 발족(2019)
  - 청렴루키 주도로 타 기관 도입 · 운영 사례가 없는 국내 최초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정책 수립 · 시행

    * 청렴루키가 주축이 되어 해당 정책을 직접 계획, 준비, 실행(중 · 영 · 일 3개국어 리플릿 제작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청렴루키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청탁금지법 내용을 청렴루키와 Q&A 형식으로 구성·제작 및 배포

  * 청렴골든벨(퀴즈대회) 제도 도입 및 부서 간 대항전 실시로 임직원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 습득 유도

  * 각급 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예방을 위해 전사 갑질교육 실시

● 내·외부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제3기 청렴루키 운영(2020)

- 각 부서 청렴루키로 하여금 업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적극 반영, 청탁금지법 준수여부 상호 감시, 부패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 등을 내용으로 협약 체결

- 외부고객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익 및 부패신고 제도 등 전파를 위한 퀴즈대회, 청렴교육 등 실시

- 업무 상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정보공개 강화, 갑질·불공정 규정 개선을 위한 사규·제도개선 추진

추진성과

● Bottom-Up 방식의 청렴조직문화 조성

- 신입직원의 청렴 솔선수범을 통한 전사 청렴문화 확산

  * 임원,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 횟수 225%, 청렴활동 참여 횟수 300% 증가

  * 코로나19 등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청렴활동 '19년 대비 41% 증가

  * 부산항만공사 부패사건 4년 연속 제로(Zero) 달성

● 우수 청렴시책 발굴 및 대외 전파

- 청렴루키가 주도한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의 경우, 국내·외 118개 기관으로 홍보 및 12개 기관에서 동 과제 활용 중

  * 부산광역시 등 28개 국내기관으로 홍보(예 : 부산시 블로그 및 청렴캠페인 시 활용)

  * 세계은행(World Bank) 등 90개 국외기관으로 청탁금지법 홍보(리플릿 설명·배부)

  * 설문조사 결과, 홍보 대상 외국인의 92%가 본 시책을 효과적이라고 응답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청렴활동 추진이 어려운 등 우려가 있었으나, 화상 협약 체결, 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부패유발 규정개정 등 각종 비대면 활동을 통한 청렴시책 지속 추진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전 직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

한국남부발전

추진배경

- 청렴활동을 청렴담당부서만의 업무로 인식, 청렴 피드백 부족
- 전 직원 주도적 참여 및 기회 부여로 청렴문화 정착 모색 필요

주도적 참여기회 ⇒ 청렴자긍심 고취 ⇒ 청렴문화내재화

추진내용

- 월별 청렴견인부서 운영(1개월 주기로 순환)

- 본사 : 10개 조직 운영

부 서 명	기획처	관리처	안전관리처	정보전략실	발전처
활동기간	'19. 5월	6월	7월	8월	9월

- 7개 사업소 : 4~5개 조직 운영(하동본부 예시)

부 서 명	경영지원	기술지원	제1발전소	제2발전소	안전/보안
활동기간	'19. 5월	6월	7월	8월	9월

- 청렴견인부서장은 상임감사위원이 직접 임명

• 임명 시 운영취지 및 당부사항 전달
• 청렴견인부서장 청렴명찰 패용

➡

- 청렴견인부서 활동사항

• 출·퇴근 또는 중식시간 청렴방송 시행
• 청렴슬로건 제작·게시 또는 피켓팅 시행
• 윤리적 조언 등 청렴소통 행사 시행
• 청렴뱃지 전달, 청렴독서
• 협력사 청렴문자 발송
• 청렴지킴이 활동 지원

● 일일 청렴지킴이 활동(청렴뱃지 착용)

- 일일 주기로 순환(본사 10명/일, 사업소 8~10명/일)

• 청렴윤리 우수사례 또는 이슈사항 등 게시판 등록
• 협력사와 청렴소통(직접통화, 청렴문자, 티타임 등)

[청렴뱃지]

● 청렴의지 실천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청렴명함 제작

- 개인별 청렴실천문구 반영하여 1,091명 자발적 신청 및 제작

- 나만의 청렴실천 주요 문구 제작[앞면(5가지), 뒷면(8가지) 각각 선택]

※ 참여 인센티브 : 청렴문구 우수자 선정(기념품·청렴마일리지 지급, 107명)

● 부패유발 제거를 위한 부패연관 규정개정 전사 아이디어 공모

- 반부패 전문가그룹 등 청렴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전 직원 대상 부패연관 규정개정 아이디어 공모 최종심사 결과, 전체 80건 아이디어 공모 ('19년 45건, '20년 35건)

● 청렴정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18~'20 청렴정책 참여 우수자 주요 인센티브 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인센티브	• 사장상 포상 (5명) • 해외 벤치마킹 (13명)	• 사장상 포상 (3명) • 단체·개인 포상 (1,000만원)	• 사장상 포상 (2명) • 개인 포상 (상품권, 14명)

추진성과

● 전 직원 자발적 청렴프로그램 참여 유도로 청렴의식 내재화 기여

- 청렴견인부서 및 청렴지킴이 활동실적(총 184건)

● 전 직원 부패연관 규정개정을 통한 부패차단 내부통제 강화 기여

- 퇴직자 협력사 취업제한 및 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 기준 강화 등

● 청렴정책 참여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한 적극 참여자 동기 부여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전 직원 의견수렴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추진배경

-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과 임직원의 조직 청렴가치에 대해 열린 소통,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주도적 청렴활동 추진체계 구축 필요

추진내용

- **(기관장의 청렴의지)** 고위직 대상 주간회의 및 에기평 토론방(전 직원 대상) 등을 통하여 청렴실천과 반부패 조직으로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청렴에 대한 기관장의 철학 강조 및 청렴위원회 개최 소감(작은 부패도 용인하지 않는 부패에 대한 민감도 제고)을 전 직원과 공유

- **(의견수렴)** 청렴정책추진단, 내부직원 대상 설문 및 청렴옴부즈만 의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통하여 발굴한 과제로 구성한 청렴계획(안)을 청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추진체계		의견·검토 주요내용 [추진계획 반영 과제]
내부	청렴정책 추진단	• 2017년 추진과제의 2018년 지속 및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수렴하여 2018년 계획에 반영 • 각 부서별로 추진할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정책사업 추진절차의 공정성 제고 과제]
	청렴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설문·수요조사	• 임직원 행동강령의 부당지시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부당지시로 인식 • 부당지시에 대한 익명신고 채널 구축 및 보직자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고위직 청렴리더십 강화 과제]
	리더(본부장) 인터뷰	•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의한 Top-Down 과제와 기관 추진계획에 기반한 Bottom-Up 방식에 의한 연계 필요 [갑질예방 교육 과제], [경쟁형 R&D 확대 과제]
외부	청렴옴부즈만	•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필요 • 내부청렴도 제고관련 내부 신고대상 확대 및 익명성 보장 전 사전 홍보 및 교육 필요 • R&D 연구비 정산비 불인정사례 안내 및 수범사례 확산 노력 필요 [정산업무 전문성 강화 과제]

추진체계		의견·검토 주요내용 [추진계획 반영 과제]
의결	청렴위원회 (기관장, 본부장, 외부전문가)	•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반영 • 업무추진비에 대한 별도의 감사 추진 필요성 검토 • 부당지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과제 추진 필요 등 [부당지시 신고 채널 구축 과제]

- **(자발적 참여)** 청렴정책 추진 과제를 청렴마일리지(부서평가 반영) 지표와 연계함으로써 부서별 자발적 참여 유도

2018년 청렴정책 (세부과제)	청렴마일리지 부여하는 청렴활동
• 청렴활동 참여자 및 담당자 인센티브제도 운영	• 청렴정책추진단 참석 • 부서별 자율적 제도개선/자율시책 계획 제출 및 추진
• 청렴의식 제고 활동(공모전, 청렴과거시험) 추진 • 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 홍보 강화 • 전사 청렴 서약 및 대외 청렴선포	• 청렴과거시험, 청렴공모전 참여 • 사업·협약 설명회에서 부패·공익·청탁금지법 등 홍보 • 청렴서약서 제출
• 맞춤형 전사 청렴집합교육 실시	• 청렴교육 이수
• 수요기반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제도 정착	• 수요기반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활동

- **(참여자 인센티브)** 청렴정책추진단 대상으로 국내·국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렴 활동별로 포상품·경품 제공 및 최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포상(포상품 포함) 실시

  * 국내연수(청렴정책추진단 17명), 국외연수(청렴에너지연구소 2명) 기회 제공

  * 청렴공모전·청렴과거시험(각 50만원),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2명, 각 20만원)

추진성과

- **(제도개선 컨설팅)** 부서별 자율적 제도개선·자율시책 발굴 시 청렴업무 담당자의 컨설팅(의견제시)을 실시, 부서 맞춤형 과제를 발굴 · 제도개선 추진

- **(높은 참여율·만족도)** 참여 중심의 청렴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인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 달성

  * 청렴교육 93.43%, 청렴과거시험 80.6%, 청렴공모전 : 86.8%, 청렴Talk : 80% 참여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감사실의 소통기능 강화, 「행복문화상담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추진배경

- **(문화갈등)** 신세대* 입사자 증가로 권위적 리더십 중심의 수직적 조직문화와 민주적 리더십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의 갈등

  ※ 신세대(대략 1980년 이후 출생자)의 사회 진출로 2017년 말 전 직원의 47.4% 점유

  언론보도 자료

  - 직장인 10명 중 8명 '상사 부하직원과 세대차이 느껴' '18. 8. 1. 이데일리
  - [세상읽기] 워라밸은 수평적 조직문화에서 싹튼다 ··· '18. 3. 7. 여성신문

- **(미래비전)** '16년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조직 불신, 청렴문화에 대한 낮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지닌 인적 구성원 변화에 대응할 의사소통 체계 미흡*으로 소속감 저하 및 기관 미래비전 달성 곤란

  ※ 직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성·편의성·안전성을 갖춘 상담창구가 마땅하지 않아 이를 포기하거나 또는 익명의 신고채널에 의존하는 경향

- **(감사실)** 감사 위주의 사후관리로 직원들이 감사실을 사업 추진의 장벽으로 인식하는 등 기관 내 부정적 이미지 팽배

- **(시사점)** 기관 신뢰도 재구축 및 문화갈등 해소를 통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전사적 조직문화 개선활동과 함께, 감사실 문턱을 낮추고 직원과 소통하는 감사실의 소통 기능 강화 필요

추진내용

기존 감사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 내·외부 의사소통을 통한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의견을 사고예방 중심의 제도개선 및 윤리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으로 신뢰문화 조성

- 감사실 내부명칭을 '행복문화상담실'로 변경하여 소통·개선활동 강화
  - **(추진개요)** 감사실을 감사 및 반부패 · 청렴활동의 소극적 활동에서 의사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포함한 적극적 기능으로 확대

- **(주요내용)** 감사실 내부명칭을 '행복문화상담실'로 변경('18. 3월)하고,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18. 4월)을 수립하여 시행

● 청렴간담회 실시 및 AS(All-Solution) 센터 설치

- **(추진개요)** 감사실 최초 대면·정기적 채널인 청렴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상시적 채널인 AS(All-Solution) 센터 설치('18. 4월)
- **[AS(All-Solution) 센터]** 직원의견 및 궁금사항을 신속하게 답변해 주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기존 익명 신고센터인 헬프라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담 기능 강화

●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추진개요)** 조직문화 개선 실천강령 및 4대 실천과제 수립('18. 4월)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실천강령	配機上 差不下 (배려와 기회는 높이고, 차별과 불편은 낮춘다)
4대실천과제	① 퇴근은 정시에 ② 휴가는 자유롭게 ③ 호칭사용 Yes ④ 술잔강요 No

- **(주요내용)** 사내게시판 배너 설치, 간부진 공유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 직원 전파하고,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 실시('18. 7월)

● 청렴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 **(추진개요)** 반부패·청렴정책 심의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팀장 중심의 청렴위원회 구성('18. 3월), 부패방지 제도 권고 기능의 청렴옴부즈만 운영(분기별), 하급직원 의견수렴 창구인 주니어보드 신설('18. 9월)
- **(주요내용)** 반부패·청렴활동 공유 및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구분	개최('18년)	추진실적	비고
청렴위원회	3월, 6월, 9월	조직문화 개선과제 선정 등	청렴문화지수 측정 결과 심의
청렴옴부즈만	3월, 6월, 9월	부패행위자 감경금지 등	비상임감사 및 외부위원(2명)
주니어보드	9월(신설)/매월	하급직원 의견수렴	청년청렴단 기능 확대

● CEO 청렴·소통 칼럼 등 고위직 청렴활동 강화

- **(추진개요)** CEO 청렴·소통 칼럼 등 고위직 솔선방안 추진

※ '18년 권익위 청렴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은 청렴도 향상 최우선과제를 '고위직 솔선수범'으로 응답

- **(주요내용)** CEO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조 및 청렴조직 구현을 직원과 약속하는 청렴·소통 칼럼 발행('18. 7월/매월), CEO 청렴교육 실시('18. 9월), 관리자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18. 6월)

● 「정관」에 윤리경영 조항 신설

- **(추진개요)**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제시된 권고 의견에 따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책임성 확보 위한 규범체계 정비
- **(주요내용)** 기관 최고 규정인 정관에 윤리경영 조항* 신설('18. 7월)

* **정관 제26조의5(윤리경영)**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진흥원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4.〉

추진성과

● **(의사소통 활성화)** 직원들이 언제든지 편하고 안전하게 감사실에 의견 제시

- 감사실 주관 간담회 · 토론회 개최로 개선과제(70건) 발굴 · 추진(신규)

구분	중점과제(건)	대표사례	추진결과
조직문화	15	워라밸 정착 노력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시행
청렴/윤리	8	고위직 청렴교육 실시	전문가 초청 별도 교육 실시
인사(평가)	4	상향평가 제도 도입	의견 반영하여 제도 개선
인사(승진 · 전보)	11	순환보직 원칙 수립	원칙 수립하여 시행
보수	2	시간외수당 및 기본급 문의	불가 사유를 설명
복지/교육	9	주말 체육행사 지양	체육 · 문화행사 분리시행
복무/기타	21	우표박물관 체험관 조성	4차산업 연계 틴틴우체국 조성

● **(문화갈등 최소화)** 신고와 상담채널의 병행 운영으로 문화갈등 최소화

- 신고 · 상담건수가 '17년 13건 → '18년 33건으로 증가(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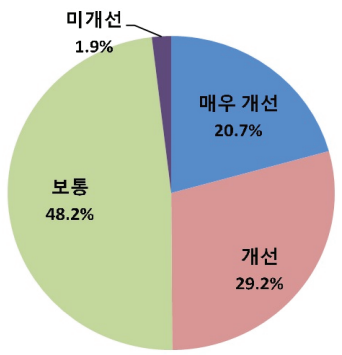
구분	유형	접수(건)	대표사례	추진결과
헬프라인	고충 건의 및 신고	18	직원 부적정 행위관련 조사 요청	감사 실시
AS센터	의견 상담	15	주말 워크숍 근로시간 여부 질의	노무사 답변

●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 결과, 보통이상 긍정응답이 98.1%를 차지함

항목별(전년대비 개선율)	
① 정시 퇴근	52.2%
② 자율적 휴가	58.5%
③ 호칭 사용	43.1%
④ 회식 문화	68.3%
⑤ 예산 집행	48.6%
⑥ 인사 운영	34.5%
⑦ 조직문화 전반	44.4%

* 개선율 저조한 분야는 별도 계획 마련 및 이행

종합(전년대비 개선율)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경영진부터 사원까지, 전 직원 참여기반 청렴시책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추진배경

-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구성원 간 청렴 공감대 형성 필요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토대로 전 직원이 청렴시책 계획 수립부터 시행, 환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렴가치 내재화 추진

추진내용

-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직원이 청렴시책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구분	역할 및 주요 활동
청렴 경영진	• 고위직으로서 청렴경영을 위한 이정표 제시 및 솔선수범
	– 전 직원 대상 경영진 릴레이 청렴 메시지 발송하여 윤리경영 의지 표명 – 업무현장에 방문하여 청렴리스크 점검 및 고충상담 등 부패사각지대 관리 – 보다 전문성 있는 청렴컨설팅을 위해 상임감사가 직접 청렴강사 자격 취득
청렴 리더단	• 청렴정책 시행의 중간 관리자로서 부점 단위 청렴정책 시행 주도 및 청렴정책 수립 · 이행 · 환류 전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 청렴 강사로서 부서 자체 청렴교육 진행 – 청렴정책 추진 핵심인력으로서 부점원 대상 청렴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및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실시
전 직원 (청렴그물망)	• 다양한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청렴마일리지 등 포상 제도를 활용하여 능동적 참여 유인 • 청렴정책 효과성 점검 및 개선방안 제언
	– 나의 청렴다짐, 청렴 사진 콘테스트 등 체감형 청렴 프로그램 참여 – 청렴대나무숲(카카오톡을 활용한 익명 청렴토론방) 등을 통한 청렴담론 형성 – 청렴정책 만족도 평가 및 개선의견 제언

- 본사부터 12개 지역본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고려한 반부패 · 청렴활동 실행 체계 구축

구분	역할 및 주요 활동
본사	• 業을 활용한 청렴생태계 조성 • 부점별로 매년 1개 이상의 반부패 · 청렴 제도개선 과제 수행
	- 업무 이해관계자(지원대상기업, 자문변호사 등)와 합동 청렴선언 등을 통한 대외 청렴문화 전파 - 업무수행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지역본부	• 대민 접점을 활용한 청렴문화 대외 확산활동 실시
	- 고객 대상 포스터 · 리플릿 등 청렴홍보 콘텐츠 배포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등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실현

추진성과

-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5년 연속('16~'20년) 1등급 달성
- 전 직원 참여체계를 기반으로 주요 청렴시책 이행력 및 정책의 수용성 · 효과성 제고

〈 2020년 참여 주체별 주요 성과 〉

구분		주요 성과
계층별	청렴 경영진	• 경영진 청렴컨설팅 총 19회 실시 •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청렴토론회'를 개최(연 2회)하여 청렴도 부진 부점 소속 관리자와 청렴현안 공유 및 청렴도 제고방안 논의
	청렴 리더단	• 청렴리더 주도하의 정기적인 부점별 청렴교육(연 2회) 실시로 체계적인 청렴규범 전파 및 임직원 청렴역량 강화
	전 직원 (청렴그물망)	• 나의 청렴다짐(1,367명), 청렴 사진 콘테스트(573명) 등 반부패 · 청렴프로그램 적극 참여 • 청렴대나무숲 의견을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계하여 부패위험요소 제거 • 반부패 · 청렴 정책 만족도 평가 및 개선의견 차년도 정책수립 시 반영
부점별	본사	• 총 30건의 반부패 · 청렴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 - (사례) 양구 해안면 무주지 경작권 불법매매 등 불공정 이용 해소를 위한 법 제 · 개정 및 전담조직 신설 등
	지역본부	• 전국 지역본부에서 청렴문화 확산활동 총 88회 실시 - (사례) 국유지 대부중인 소상공인 지역카페와 협업하여 공사의 청렴다짐이 담긴 청렴컵홀더 배포 등

6. 내부 조직문화 개선 - 직원 참여

노사합동 청렴목민관 제도 운영

한국수력원자력

추진 배경

- 성폭력, 직장 갑질 등 생활형 일탈 등 비위행위 다양화로 조합원에 대한 보호 및 회사 비리 행위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 강화 추세
- 근본적인 조직 내 청렴 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청렴 실천활동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현장(사업소) 단위 자체 감사 한계 및 노조의 견제기능 미비로 부패사각 지대 발생
  → '17년도 복리후생시설 사용실태 점검 결과 약 91명의 중복 수혜자 지속 발생
  → 사업소 급여운영실태 점검 결과 급여 오지급(총 693건) 발생 등 인건비 손실 발생

추진 내용

〈2018년도 추진 체계〉

목 표	공기업 최초 노사합동 「청렴목민관 제도」 신설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에 모범사례 선도적 구축
추 진 단 계	① 도입기반 구축 단계(타 기관 벤치마킹, 대상자 선발) ② 제도화 등 실행인프라 확보단계 ③ 주기적 소통 및 성과점검단계

추 진 과 제	1 도입기반 구축	2 제도화 등 실행인프라	3 주기적 성과점검 등
	청렴목민관 제도 개발 청렴목민관 발대식 개최	학습형 청렴인프라 「다산목민학당」 신설	목민관 현장실태 조사 및 목민관 릴레이 워크숍 개최

- 청렴목민관 제도 설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입기반 구축
  - 청렴목민관 구성, 역할,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제도 설계(공기업 최초)
  - 청렴목민관 대상 후보군 선정 및 최종 임명을 위한 발대식 개최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구성</td><td>• 노사 간 균형적 참여를 통해 청렴활동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회사측(노무처 등 5명), 노조측(중앙노조 등 5명) 등 총 10명 내·외
→ 현장 노무팀 및 노조간부의 참여로 본사/사업소대상 균형적 참여</td></tr>
<tr><td>선발
방법</td><td>• 회사측 : 노무처, 현장 노무팀 등에서 업무경력, 사정의지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 추천 후 노무처장이 최종 선발
• 노조측 : 중앙노조, 현장 조합간부 중 자율적 의사에 의해 후보군 추천 후 중앙위원장이 최종 선발</td></tr>
<tr><td>주요
활동</td><td>• 본사 및 현장단위 부패취약요소 발굴 및 개선과제 도출
① 노사합동 청렴목민관 현장 실태 점검 및 조사 보고서 작성
② 청렴목민관 현장순회 릴레이 워크숍 개최
• 부패방지활동 성과 점검 및 부패 수준별 시정 또는 감사 청구
<table>
<tr><th>구 분(회의체)</th><th>개최 주기</th><th>주요 임무</th></tr>
<tr><td>청렴목민관
릴레이 워크숍</td><td>상·하반기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td><td>현장별 부패취약요소 및
개선과제 발굴[청렴목민관 대상]</td></tr>
</table></td></tr>
</table>

● 선발된 청렴목민관 역량 강화를 위한 KHNP 다산목민학당 신설

- 정약용의 청렴 선비정신을 닮은 목민관을 양성하기 위한 청렴사관학교 개설
- 남양주시의 「다산 목민학당」*('18.3.~)을 벤치마킹하여 한수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최적화

* 다산 목민심서 발간 2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남양주시에서 신설한 프로그램

구 분	방 법	비 고(남양주시)
운영방식	상·하반기 KHNP 다산목민학당 개설(다산문화교육원 협업)	총 40명씩 / 12기 시행
프로그램	목민심서를 통해 본 공직 윤리와 청렴선비정신 전문가 특강 목민관 청렴좌우명 작성(붓글씨), 다산 박물관 체험 등	유사 프로그램 운영

● 청렴목민관 워크숍 개최 등 주기적 소통 및 성과점검체계 구축

- 「청렴목민관 현장 릴레이 워크숍 개최」로 취약(개선)과제* 발굴·시행

* 급여 과·오지급 재발방지 시스템 점검 및 가이드북 제정

* 주택자금 연대 보증(안) 변경 등 사택운영 개선을 위한 방침 수립

- 청렴목민관 합동 현장 부패실태 조사로 규정위반사례* 적발 및 개선 조치

* 생활연수원 중복 수혜자(91건)에 대한 급여 일괄공제로 복지형평성 확보

* 본부 퇴직자 사택관리규정 위반 등을 확인하여 현장 조사 및 시정요구

추진 성과

● 노사합동 청렴목민관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 중심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에 대한 실천 동력 지속 강화

● 노사합동 교차점검으로 방만경영 근절 및 재정건전성 제고 기여

[주요 항목]	〈 As-was 〉		〈 To-be 〉
급여 과·오지급	693건(1.7억)		0건(3분기 기준)
사택 운영 부적정	130건	➡	0건(제도개선 21건)
복지시설 이중수혜	91건(19.9백만 원)		0건(3분기 기준)

● 학습형 청렴인프라 확보

- 자체 청렴 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목민학당 신설 및 자발적인 청렴리더십 확보

● 타 공공기관으로의 공유를 통해 청렴인프라 우수기관(역할모델)의 위상 확보

- 공기업 노무담당협의회(17개 기관, 7월) 등으로 청렴목민관 제도 공유·전파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추진배경

-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외국인투자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 문화 확산 필요성 대두
  -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출의 10.8%, 국내 고용의 5.6%, 수출의 18.6%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
  - 국내 진출 시 선진 경영기법, 고도 기술 전파와 같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 선진 기업 문화 확산 등에도 영향
- 외국인투자기업의 윤리·청렴 문화 공유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공정한 기업생태계 구축, 사회공헌활동, 준법경영 실천 노력 등을 공유하여 국내에 글로벌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전파

추진내용

- 한국외국기업협회, 외국인투자기업 8개사와 '사회공헌·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 체결
  - KOTRA(Invest KOREA), 한국외국기업협회, 협회 회원사 8개사와 2020년 10월 7일(수) 청렴사회협약 체결

    * 노벨리스코리아(알루미늄), 랑세스코리아(특수화학제품), 린데코리아(산업용가스), 온세미컨덕터(반도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한국AVL(차량솔루션), 에머슨(자동화솔루션), 헨켈코리아(산업소재)
  - △사회적 책임경영 선언,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 실천 협의회 설치, △청렴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성공 사례 발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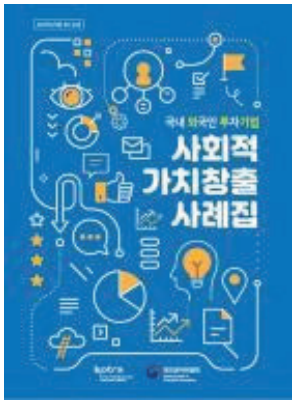
추진성과

- 협약 연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사회적 가치창출 사례집' 발간
  - 협약 체결 외국인 투자기업 8개사 참여,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사례 수록
  - 지역사회공헌, 윤리경영,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청렴 문화 확산 사례 공유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회적 가치창출 사례집 〉

연번	기업명	제목	주요내용
1	노벨리스	지속가능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사회 공헌
2	랑세스코리아	기업과 사회를 모두 이롭게	환경보호, 교육 지원
3	린데코리아	지역과 환경을 생각하는 공헌활동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4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내일	지역사회 봉사, 자선기부
5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나눔을 통해 꽃피우는 가치	자선기부, 지속가능한 개발
6	한국 AVL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7	한국에머슨	환경을 아끼고 지역을 살피는 실천	환경보호, 자선기부
8	헨켈코리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걸음	지역사회 봉사, 자선기부

사례집 표지



사례집 목차

- 외부 배포를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외국기업협회, 국내 유관기관 인쇄물 자료 배포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내 파일 게시(정보센터-발간물)
  - 외투기업의 지역사회공헌, 청렴문화 노력 공유를 통한 反외국인 투자 정서 극복 기여

7. 민간참여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추진배경

-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소통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재정비하고, 대국민 홍보 계기로 활용
-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안전의식 제고 도모

추진내용

- '18. 2.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공모를 통한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위촉(연초)
  - 대국민 공모 방식을 통한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단위 : 명)

연 도	2018	2019	2020	2021
국민안전감독관	15	15	15	15

- **(사전교육실시)**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계 및 관련 제도·법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3개 권역(서해, 서남해, 동남해)으로 배치되어 활동 추진(연중)
  - **(개별활동)** 개별 자율 활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이행실태 현장 모니터링
  - **(공동활동)** 민·관 합동점검, TF자문회의, 공동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국민관점 의견 수렴
  - **(기타활동)** 여객선 이용 불편·개선 사항 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 홍보·자문 등
- 워크숍을 통한 활동성과 공유 및 환류(연말)

(단위 : 건)

연 도	합계	2018	2019	2020
지적사항	175	44	62	69
제안사항	10	6	1	3

● 국내해상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체계

선박 종류	소관법률	소관부처	안전관리 조직	운영현황
여객선	해운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KOMSA)	102항로 164척

추진성과

● 국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형성

- 국민 · 사업자 · KOMSA · 정부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 운영

● 국민관점 현장 점검으로 지적사항 175건 발굴·개선으로 여객선 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안전 분야 우수 청렴정책 사례 선정 및 언론 보도로 타 기관 벤치마킹 유도('20.03.)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국민안전감독관의 활동 범위에 여객선에 대한 암행점검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활동지침* 제공

  * 활동지침 예시

  - 감독관의 활동범위는 사업자 선장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에 한정한다.
  - 감독관은 사업자 선장 등의 허가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선박 설비를 작동하거나 물품을 꺼내거나 이동시키는 등 선박 고유의 관리 및 보관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민간참여

명예시민감사관 협업 사규 부패영향평가 도입

한국동서발전

추진배경

-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사규 부패영향평가의 제한적 성과를 극복하고 실질적 부패방지시스템 작동 필요
-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시민감사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개선

추진내용

- 명예시민감사관 구성·운영
  - 재무 · 회계, 감사 행정 · 민원 등 분야의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2018.8.2.)
  - 감사참여 및 청구, 제도개선 권고, 청렴정책 건의 등의 임무 수행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규선정	부패영향평가의뢰	부패영향평가시행
• 제도 도입 검토 • 추진절차 수립 등	• 선정기준 정립 • 적정성 검토 등	• 사규 배분기준 정립 • 관련 참고자료 제공	• 배정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행
2019. 9.	2020. 2.	2020. 2.	2020. 3. ~ 5.

평가결과 보고	현업부서 검토	사규개정 시행	종합결과 보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현업부서 검토요청 • 수용여부, 의견 등	• 권고사항 반영 • 해당사규 개정 시행	• 사규개정결과 보고 • 성과 및 효과성 등
2020. 6.	2020. 6.	2020. 6. ~ 10.	2020. 10.

● 사규선정 및 배분

구 분	내 용	비 고
선정 대상	• 규정, 지침, 기준 등	총 110개
선정 기준	• 부패취약 및 감사지적 빈도가 높은 업무중심 사규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 안전관리 관련 사규 • 불명확한 기준, 개념 또는 악용우려가 있는 사규 •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다수에게 적용되는 사규	-
선정 결과	• 규정 12개, 지침 15개, 기준 10개	총 37개
사규 배분	• 명예시민감사관 1인당 사규 배분 결과 - 규정 6개, 지침 6개, 기준 4~5개	e-mail 송부

※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규는 공통 배분(인사규정, 계약규정, 안전관리규정 등 6개)

●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결과(제도개선 권고) : 인사관리규정 등 9건, 조항 15건

순번	사 규 명	검토결과	개정여부
1	감사인 윤리강령(제8조, 제13조, 제16조)	수용	2020.08.06.
2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지침(제2조, 제7조)	수용	2020.07.02.
3	사회공헌 운영지침(제2조, 제7조)	수용	2020.08.13.
4	출자회사 관리지침(제6조, 제14조)	부분수용	2020.08.21.
5	인사관리규정(제2조, 제32조)	수용불가	-
6	취업규칙(제74조)	수용	2020.07.29.
7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3조)	수용	개정 예정
8	해외사업 선정 위원회 운영지침(제6조)	수용	2020.10.28
9	해외 근무직원 관리규정(제34조)	수용불가	-

● 사규개정 주요내용

제 목	관련사규	개 정 내 용
비위행위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 강등제도 도입	취업규칙	* 비위행위 예방 및 처벌강화 • 2직급 이상 중대 비위행위(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등)자에 대하여 한 직급 하향 조정(신설) • 시행일 : 2020.7.29.
사회공헌운영위원회의 사업예산 심의·의결 금액 현실화	사회공헌 운영지침	* 불합리한 조항 개선 • 심의·의결 대상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상을 3천만 원 이상으로 합리적 조정 • 시행일 : 2020.8.13.
감사인 윤리강령의 준수사항 개선·보완	감사인 윤리강령	* 불명확한 조항 구체화 • "회사 전체에 유익한 방향"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 요인임 - "공정하고 합리적으로"로 개정 • 시행일 : 2020.8.6.

제 목	관련사규	개 정 내 용
출자회사 관련 심사위원의 심사 제척사유 신설 및 비상근임원의 배상책임 명확화	출자회사 관리지침	* 부패취약 및 악용우려 사전예방 • 심사위원 체척사유 구체적 명기 • 출자회사 비상근임원 배상책임 범위 명확화 반영 • 시행일 : 2020.8.21.
사외 심의위원 대리출석 금지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 불합리한 조항 개선 • 사외 심의위원 대리출석 시 제4조에 의한 전문성 검증 시행 • 시행일 : 2020.10.28

* (평가회 개최) 명예시민감사관 초청 개선안 별 설명 및 검토 시행

추진성과

● 기존 자체적 사규 부패영향평가('19년 이전) 대비 질적 및 양적으로 향상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건 수	사규	9	5	3	3	3
	조항	15	5	7	4	3

* 기존 단순하고 한계적인 자체 평가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심도있는 개선 시행

●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건전한 감시로 부패예방 체계 확립

- 향후 명예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회계부정, 인권, 연구개발비 분야 집중 평가 시행예정

8. 청렴문화 확산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실천 및 확산

근로복지공단

추진배경

-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 추진 필요
- 국민과 함께·협력하는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민·관 쌍방향 소통채널 구축 필요
- 코로나19로 대면방식 청렴문화 추진 한계, 효과적인 온택트형 소통 채널 마련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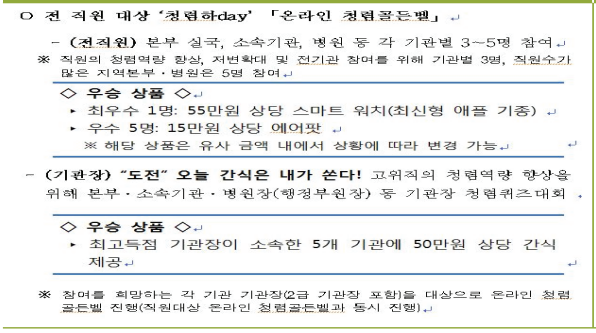
- 시민청렴패널단과의 쌍방향 소통채널 '多가치 CLEAN' 밴드 개설
  - 접근성이 좋은 네이버밴드 운영을 통해 공단의 청렴노력, 청렴정책 등을 실시간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 * 공단 각종 청렴시책 및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실시
    - * 공단 사업에 대한 청렴도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 공단 사업, 청렴정책 등을 전파하는 청렴 홍보 창구
  - 공단 사업,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시민청렴패널단으로 위촉하여 '多가치 CLEAN' 밴드 가입 및 공단의 업무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밴드 참여자를 청탁방지담당직원 및 감사실 담당자에서 시민청렴패널단으로 확대
    - * 시민청렴패널단 간담회 및 패널 대상 청렴정책 홍보활동 전개
    - * 시민청렴패널단을 각종 심사·심의·면접위원 및 청렴위원회 위원 참여 권장
- 2020년 '내가 만드는 청렴문화' 淸오름 공모전 개최
  - 공단 직원 및 직원가족 대상 청렴아이디어, 사진, 포스터, UCC 공모 (2020년 8월~10월)
  - 청렴활동 참여를 통한 청렴인식 내재화 및 확산 유도
    - * 접수작품 83점 중 수상작 20점 선정

청렴포스터	청렴사진

- 2020년 淸오름 문화축제 '청렴하day' 개최
  - 청렴활동에 대한 전 직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 공감대 확산 및 공모전 수상작 전시·상영을 통한 청렴 콘텐츠 공유 ('20.11. 17.~11.23.)

淸오름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실시	청렴문구 캘리그라피 액자 제작·지급

기관장 포함 전직원 온라인 청렴골든벨 실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청렴퀴즈 이벤트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하day' 「온라인 청렴골든벨」

- (전직원) 본부 실국, 소속기관, 병원 등 각 기관별 3~5명 참여

※ 직원의 청렴역량 향상, 저변확대 및 전기관 참여를 위해 기관별 3명, 직원수가 많은 지역본부·병원은 5명 참여

◇ 우승 상품 ◇

- 최우수 1명: 55만원 상당 스마트 워치(최신형 애플 기종)
- 우수 5명: 15만원 상당 에어팟

※ 해당 상품은 유사 금액 내에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기관장) "도전" 오늘 간식은 내가 쏜다! 고위직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해 본부·소속기관·병원장(행정부원장) 등 기관장 청렴퀴즈대회

◇ 우승 상품 ◇

- 최고득점 기관장이 소속한 5개 기관에 50만원 상당 간식 제공

※ 참여를 희망하는 각 기관 기관장(2급 기관장 포함)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렴골든벨 진행(직원대상 온라인 청렴골든벨과 동시 진행)

추진성과

- 공단 청렴정책 및 청렴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청렴사회 실현에 기여
- 적극적인 청렴 홍보 및 확산을 통해 청렴공단 이미지 제고
- 유관기관 직원 및 시민 관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공유
- 일반직원 참여 외에 고위직(기관장)만 참여하는 온라인 청렴골든벨 별도 실시로 고위직 및 직원의 청렴역량 향상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청렴활동 추진 곤란
  -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개설로 실시간 소통 가능

8. 청렴문화 확산

전체 협력사 초청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행

한국전력기술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청렴 정책에 대한 성과가 협력사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전파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로그램 추진
- 반부패 청렴교육이 필요한 사각지대 해소 및 소속직원 외 협력회사 · 지역사회 · 이해관계자 · 유관기관 ·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업까지 청렴문화 외연 확장을 통해 참여하고 즐기는 청렴교육 시행 필요
- 협력회사 대상 청렴 실태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확인 및 추진성과 점검

추진내용

- 협력회사 CEO · 일반직원 대상 청렴상생 실천대회 개최(연 2회*)
  - 협력업체 청렴윤리 강조·동참 당부 CEO, 상임감사 청렴 서신 발송
  - 한전 기술 CEO(사장 · 상임감사) 직접 청렴특강
  - 국정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설명 및 청렴·인권·갑질근절 공동 결의
  - 공정 계약제도 및 청렴계약 제도개선 의견 청취와 관련 교육
  - 청렴게임(청렴 골든벨과 청렴 다트) 프로그램 시행

  * 일반직원 대상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 '19.3월, 84개사 130명 참석

  * CEO 대상 협력회사 청렴상생 실천대회 : '19.5월, 84개사 CEO 100명

- 한국전력기술 청렴 ACADEMY 투어 프로그램('17년~'19년)
  - 공공기관 최초 민간참여 중심의 반부패 청렴문화 공유 프로그램
  - 협력업체 및 민간대상 청렴윤리 제도 · 문화를 영상, 교육, 견학, 시찰 등의 방식으로 제공
  - 협력업체·지역주민이 방문하고 싶은 초청 청렴 ACADEMY 투어 프로그램을 통한 자발적 참여 방식의 청렴 프로그램 추진

  * 청렴 ACADEMY 투어 주요 운영실적('17년~'19년)

구 분	참 여 규 모	참 여 업 체
'17년	43개 단체 200명	협력회사, 민간기업 등
'18년	43개 기업 65명	협력회사(전국 한전기술 협력회사)
	59개 기업 62명	민간기업(경북김천지역 내)
	3개 단체 80명	민간단체(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팀)
	2개 단체 77명	한국장학재단 대학생팀 · 구미공고 등 학생단체
'19년	1개 단체 33명	민간기업(국제 라이온스 354-C 지구)
	5개 기관 190명	공공기관(한국컨텐츠진흥원 등)
	1개 단체 39명	공공단체(경북 지역 청렴윤리 담당자)
계	총 157개 단체 746명 참여	

● 갑질 피해 없는 협력회사 만들기를 위한 반부패·청렴 실태조사

구 분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등록심사 83개사 중 36개사 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19년 8월 ~ 2019년 12월
조사방법	• 협력회사 직접 방문 및 체크리스트에 따른 실지조사
조사내용	• 갑질사례, 담당자의 적극성 여부, 부패경험 등 조사
조사결과	• 갑질사례·부패경험 없으며, 적극성에 대한 긍정 답변 도출

추진성과

● 정부·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질 간극 해소

- 협력회사 및 주민·기업들과의 청렴윤리 문화확산 공유

● 다양한 그룹에 대한 청렴문화 공유 확산 방안의 다양성 확보

- 정부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공공기관의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공공성 확보

- 지방이전 지역과의 청렴윤리 · 상생협력 · 동반성장 교류 기틀 마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의 확보뿐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 광역화된 민간부문의 호응도가 높은 자발적 참여방식 청렴문화 확산

- 지역 협력사와 주민 · 민간부문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문화 확산

8. 청렴문화 확산

국민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추진배경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정부의 반부패·청렴 관련 정책 추진 및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 기대 증가
  - 공사 외부고객에 대한 신고제도 안내 강화 및 청렴교육 제공 필요
  - ⇨ 은퇴금융 아카데미와 부패취약분야 간담회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청렴교육으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윤리경영 확산 추진

추진내용

1 은퇴금융 아카데미*

- 은퇴금융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전국 20여개 지사에서 아카데미 기수별 청렴교육 실시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설명하는 부패·공익신고 표준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

은퇴금융 아카데미란?

- 공공기관 최초의 전국단위 은퇴고령자 대상 맞춤형 경제·금융 강좌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20여개 지사에서 소득·지출관리, 재무설계 등의 실무금융지식과 재취업 등의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

2 부패취약분야 간담회

-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Target)를 선정하여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교육 추진

- 자금운용 및 사업자보증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교육
  - 청렴 업무 주관부서(준법경영부)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자금운용 관련 금융기관, 사업자보증 이용업체, 주택건설업체 임직원 등 교육

추진성과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대상, 경향 금융교육 대상 등을 수상한 전국 단위의 일반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실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참여 유도
  - 자금운용, 사업자보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횡령사고 등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한 공사 대외 신뢰도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 우수 등급 달성

  ⇨ 대국민 윤리교육 및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로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 우수 등급 달성

9. 부패사건 제재 강화

부패행위 협력업체 강력 제재로 안전한 철도 제공

국가철도공단

추진배경

- 공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등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으로 입찰 시 협력업체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의 선정 필요
- 원도급사는 부패행위유발 시, 법·규정으로 제재 중이나 하도급사의 경우 공단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어 제재가 어려움

추진내용

- 공단 제도개선*으로 부패행위 하도급사 강력 제재 추진('17.4.~)

  *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2017.4, 2018.10.)

  - 원도급사에 금품제공·부정청탁 등 부패행위를 한 하도급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체결 불가
  - 기 계약한 하도급사의 부패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단은 원도급사에 계약해제·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원도급사는 의무적 수용 필요
  - 부패유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 시 부패행위 감점(△3점) 부과하여 입찰참여 방지

    * 공사 관련 국가법에는 저가업체 및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만 존재

  -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입찰공고 시 게시 및 계약서에 포함하고, 원도급업체와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수 받아 실효성 제고

- 부패 유발 "건설기술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원도급사)** 건설기술자(감리, 시공) 평가제도 도입('16.12월)
    - 철도현장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해 청렴성 등을 평가(년 2회)하여 부패행위자 철도현장에서 퇴출

- **(하도급사)**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자 철도사업 참여 제한('17.4월)
  - 공단에서 원도급사에 하도급업체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 시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계약서에 포함
  - 하도급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 **(진입방지 시스템)** "건설현장 참여기술자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패행위자 철도현장에 재진입 방지

● 협력업체 청렴성 제고를 위한 '협력사 간담회 및 컨설팅' 시행

- 협력사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통한 협력사 직원이 지켜야할 청렴 수칙(KR 파트너 Clean 10訓) 선정 및 홍보('17.9.~)

< KR 파트너 Clean 10訓 선정 과정 >

1 분석단계 ➜	2 도출단계 ➜	3 확산단계
• 공단 비위 현황 분석(79건) • 클린10훈 문안 협력사 의견 수렴(총49건 접수) • 부패관련 연구자료 분석(5건)	• 10훈 Pool 선정(27개) • 협력사 직원 대상 설문조사 • 분석단계 중요사항 반영 • 10훈(안) 최종 선정	• 파트너 클린 10훈 제작 및 협력사 배포 •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CEO 주관 협력사 사장단 간담회 등 협력업체 VOC를 수집하여, 불공정 관행 및 제도 개선

  * '18년 220건, '19년 60건, '20년 55건 과제 실행

- 철도현장 협력사 대상 부패행위 VOC 수집 후 청렴감시인(청렴옴부즈만) 컨설팅을 시행하여 현장 청렴도 제고('21. 8.)

  * '18년 105개소, '19년 123개소, '20년 103개소 현장 F.G.I. 시행

추진성과

● 하도급사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및 간담회·F.G.I. 등 소통 강화로 건설 현장 부패행위 선제적 차단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 및 기술자의 진입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제공

●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도 현장 퇴출 등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청탁금지법과 같이 건설기술자를 보호하는 순기능 작용

-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공공기관(한국전력,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적용 가능하며 도입 시 민간 건설업체 청렴성 향상 기여 가능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현장 퇴출제도 제재수준이 높아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기술자를 보호하고 철도현장의 청렴성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9. 부패사건 제재 강화

주차비 횡령사건 끈질긴 추격전, '철퇴' 맞고 방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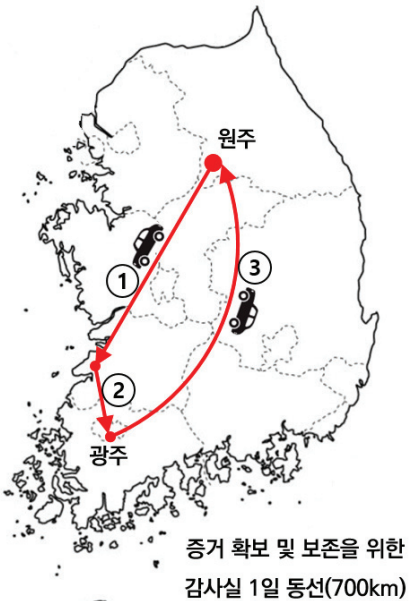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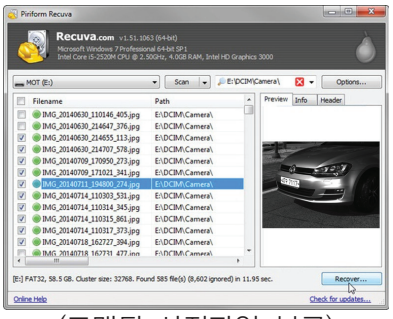
추진배경

- **(조직의 특성)** 공단은 전국 65개의 국립공원 주차장 중 44개소에서 직원이 직접 주차비 징수(현금, 신용카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차비를 받는 과정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의 '감경·무료차량 처리' 기능을 이용한 주차비를 부당 편취를 하고 있다는 내부공익신고 접수

추진내용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업체로부터 관련자료 확보·분석을 통한 주차비 징수체계 파악 및 징수체계 취약점 발견
- 취약점으로 인한 주차비 횡령 가능성 인지. 전 국립공원 44개소 주차장에 대하여 특정감사 전환(임대, 무료 주차장 21개소 제외)
  - **(증거자료 훼손)** 특정감사를 위한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던 ○○○사무소에서는 점검 하루 전 주차관제시스템PC의 고장 이유로 수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부름
  - 전문업체는 현장에서 PC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주차관제시스템 재설치를 위해 포맷을 하려고 PC를 본사(광주)로 가져감
  - **(증거자료 추적)** 감사실에서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PC가 광주로 이송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광주로 차량을 돌림.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PC 포맷이 완료된 상태였고, 감사실에서는 포맷된 PC를 수거하여 본사로 가져 옴





(포맷된 사진파일 복구)

- **(디지털 포렌식 추진)** 정보지원실, PC복구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끝에 PC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PC 내 모든 자료를 복구하는데 성공하여 횡령사건조사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입·출차 차량데이터)를 찾아 냄
- 복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사 재착수
- **(횡령 포착)** 정상 입차 차량을 감면·무료차량(장애인, 업무차량 등)으로 처리 후 정상적으로 받은 주차비를 횡령 함. 감면·무료차량으로 처리된 입차 차량이 출차 시에는 차량이 시스템에 인식되지 않도록 수동으로 출차처리 함

1. 정상 입차	2. 거짓 처리	3. 주차비 횡령
• 입차 및 주차비 징수	• 정상적인 일반 주차차량을 감면·무료차량(장애인 등)으로 처리	• 감면·무료차량으로 처리된 주차비를 현금으로 횡령

- **(비위자 고발)** 비위행위가 확인된 ○○○사무소 11명(46,680,000원 횡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요청
- **(조사결과)** 비위행위가 확정된 5명은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1명 징계 조치되었고, 6명은 무혐의 판결. 감사실 조사단계에서 시인한 횡령금액(8,800,000원)과 나머지 금액(37,880,000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횡령금액의 100%를 환수함
- **(신고자 보상금 지급)** 횡령사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보상금 6,442,310원(공단 최대금액)을 지급

추진성과

- **(공익신고 실효성 극대화)** 감사실에서는 신고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19년 신고채널 통·폐합, 신고채널 홍보영상 제작, '20년 모의신고 대회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임. 그 결과 개선 전 1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가 개선 후 10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공익신고 활성화 노력의 산출물로 판단

〈자체제작 공익신고 홍보 동영상〉

- 또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님을 全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로 인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횡령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해임'이라는 최고수준의 처분으로 횡령사건에 대한 직원 경각심 고취
- **(재정건전성 제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재정누수 근절, 횡령금액 환수로 재정손실액 절감

- **(주차비 징수체계 핵심리스크 제거)** 주차비 징수체계 중 문제가 됐던 핵심리스크(인력에 의한 횡령, 주차비 정산과정에서의 데이터 조작) 제거로 수입금징수체계 투명성 제고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애로사항)** 부패행위를 감추기 비위자들의 증거훼손
- **(극복방안)** 사건해결을 위한 감사실의 발 빠른 대처와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사건

9. 부패사건 제재 강화

부정부패 수출기업 무역보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

추진배경

- 수출자가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유인 원천 차단

- 또한, 수출자의 외국 공무원 앞 뇌물공여 등 수출거래에 있어 부정부패 사례 방지를 위한 OECD 기준* 준수가 미흡**한 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실효적인 무역보험 관련 제재조치 마련 필요

*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규범('99년 발효)

** OECD는 회원국들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OECD는 '18년 우리나라 앞 해외뇌물 범죄 적발 및 처벌강화 권고

추진내용

- **(허위 수출기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수출기업이 허위 수출계약으로 무역보험 사고 유발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경우 신용보증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최하 신용등급으로 지속 관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인수규정」 제6조 제4호

제6조(신용보증 금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의 한도 책정을 금지한다.
1~3. (생 략)
4. 채무자가 허위 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부패유발기업과의 수출보험 재계약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수출입 실적 조작 등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무역사기범죄 근절
- 허위 수출기업에 신용등급 최하급(R급) 부여 및 불량국내업체로 등록하여 지속 관리

- **(수입국 공무원에 뇌물 공여시 보험계약 철회)** 민간 수출기업 대상 뇌물 비공여 확인서를 보험계약 체결 시 징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기업의 뇌물 공여 적발 및 적발 시 실효적인 제재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인수요령」 제17조(뇌물관련 규율 실행)

제17조(OECD 뇌물관련 규율 실행) 규정 제10조의 OECD 뇌물 방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 및 세부절차는 별표25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단계-사전안내)** 보험가입 상담 시 뇌물방지 규율 고지 및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뇌물 비공여 확인서(한글, 영문판) 연 1회 징구 의무화*

* 미제출시 사이버영업점 서비스 이용 불가

뇌물 비공여 확인서

1. 무역보험 청약건과 관련하여, 동 법에 규정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않겠음
2~3. (생략)
4. 본인은 청약건에 대한 뇌물연루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보험계약 철회, 보험금 지급거절, 사법당국앞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보험계약자 : (인)

- **(2단계-모니터링)** 무역보험 가입 수출기업, 금융기관의 뇌물 공여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국제금융기구 지원금지 명단 확인 등)
- **(3단계-불이익조치)** 해당 무역보험건 관련 뇌물 공여 증거 확인 시 보험계약 철회 혹은 보험금 지급거절

추진성과

- 반부패 관련 무역보험 이용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민간 수출기업 청렴도 견인하는 한편, 범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과제(37. 수출입거래 악용) 이행 및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개선에 기여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년 이후 매년 2천여 개 민간기업으로부터 뇌물 비공여 확인서를 제출받아 민간기업 앞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안내하여 이에 대한 준수 유도

10. 연구개발 분야 부패방지 시책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신고보상제도 활성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추진배경

-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행, 카드사)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이하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구축('10년)

  * 「금융실명법」에 부합한 자금관리 방식 구현으로 현금 · 카드거래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11년~)제도를 활용, 세금계산서로 집행된 연구개발비의 진위여부, 사후 수정 · 취소*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분과 비교 검토하여, 차액을 정산 시 환수 등

- **(신고포상제도 도입)** 연구비 부정에 대한 사후 적발의 한계, 올바른 연구실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연구비 부정 등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활성화 필요

-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패방지·청렴시책에 대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필요

추진내용

-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집행하기 전 거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RCMS에 등록토록 의무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월)으로 RCMS와 국세청 세원정보 연계 근거(제19조제3항)를 마련하여 시스템 개선

  * (기존) 수행기관이 국세청(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인공인인증서로 제출
    → (개선) 시스템 간 직접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자동 조회

- **(부패사례 모니터링)** 수행기관이 공급자(거래처)와 도모하여 연구과제 정산 · 완료 후 거래를 취소(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는 사례* 확인

  *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발표('20.2월, 국조실) → 과세정보 제공 등 제도개선 추진

- **(신고포상제도)**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 보상제도 확산
  - 연구지원전문가 대상 신고·보상제도 교육 의무화('20년 18회, 447명)
  - 연구비 부적정 사례에 대한 유튜브 교육('20년 3회, 8,033뷰)
  - 신고보상제 운영 관련 과기부, 중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컨설팅 실시
- **(청렴마일리지 제도)** 직원의 청렴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 **(부서 성과평가(BSC) 연계)** 부서원의 청렴마일리지 평균점수를 부서별 BSC 계량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다양한 청렴활동 기회 제공)** 매년 차별화된 마일리지 적립 항목 발굴을 통해 직원의 청렴활동 다양성 및 참여도 제고
  - **(포상 및 인센티브)** 개인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 실시 및 청렴조직 활동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성과

- 연구비 부정집행에 따른 환수규모 감소 : 258억 원('15년) → 66억 원('18년)
- 국세청 협업을 통한 RCMS 연구비 집행 유효성 상시 모니터링 및 오(誤)집행 예방기능 강화 지속 추진
-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활성화 및 신고보상 강화
  - **(신고제도 활성화)** '17년 대비 '20년 신고접수 건수 2.7배 증가
  - **(신고보상 강화)** '17년 대비 '20년 보상금 지급액 3.2배 증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접수 건수	6건	19건	24건	16건
보상대상가액 (환수액)	137,812천원	229,338천원	406,592천원	471,204천원
보상금 지급액	25,293천원	44,106천원	52,461천원	79,823천원

-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 활동 강화 및 민간으로의 청렴문화 확산 추진
  - **(청렴활동 다양화 및 개선)** 코로나 대응 및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렴활동 확대 및 보직자 마일리지 강화를 통한 솔선수범 유도

- **(민간으로의 청렴문화 확산)** R&D 기획 분야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의 청렴서약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R&D 기반 강화

  * 청렴서약 확대 실시 : 선정, 중간, 최종 평가 위원('19년) → 기획분야('20년)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전 직원 활동 독려)** 청렴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 청렴지기로의 포상 확대를 통해 전 직원의 적극적 청렴활동 유도

  * ('20년) 청렴활동 우수자(개인) 포상 → ('21년) 우수부서, 우수자, 우수 청렴지기

● 종합청렴도 5년 연속 우수등급 및 산업부 부패방지시책평가 1위('20년)

10. 연구개발 분야 부패방지 시책

국내 최초 온라인 메타기획·평가시스템 적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추진배경

국가 에너지R&D사업 지원사업 특성상 기획·평가전문가집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객(연구자) Needs와 기대수준이 매우 높음

- **(R&D기획)** 기존 기획방식은 소수전문가의 일방향 대면기획 중심으로 개방성이 다소 미흡하여, 우수전문가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획품질 저하와 기획의 폐쇄성이라는 근본적 부패위험요소 상존
  - 개방성 및 검증의 한계에 따른 기획과정 공정성 저하

- **(R&D평가)** 기존의 대면평가 방식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대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요소에 대한 부패위험 존재

구 분	사 례
평가 이전	•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의 사전접촉 결탁 가능성
평가 중	• 학연, 지연 등 연고 관계로 인한 평가 공정성 훼손 가능성 • 평가위원 간 담합으로 인해 투명하지 못한 평가 진행 가능성
평가 이후	• 평가 이후, 평가위원 권력을 이용한 답례 및 특정 사항 요구 가능성

추진내용

- **(R&D기획)** 기획 프로세스 단계별 순환검증 과정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작업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개선

구분	기 존	개 선
기획 과제 검증 방식	• 오프라인 검증위원회 개최 • 일방적 일회성 방식 검증 (검증위원) → 의견검토 (기획위원)	• 온라인 검증위원회 → 대면에서 발생가능한 부패위험요소 차단으로 과제검증의 공정성 향상 • 검증위원-기획위원 간 의견교환(피드백) 방식 채택 검증 (검증위원) ⇔ 의견검토 (기획위원)
기획 추진 주체 평가	• 미실시	• 메타순환평가체계 도입 (검증위원→PD/기획위원장→기획위원→전담기관→검증위원) → R&D과제기획의 공정성 기여

● **(R&D평가)** 평가체계의 공정성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온라인메타평가 제도를 실행하여 부패요소를 혁신적으로 개선

구분	기 존	개 선
역평가	• 미실시 →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없이, 전공/경력사항을 토대로 평가위원 섭외	• 평가내용 환류,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전담기관 제도운영 평가 등 "평가에 대한 평가"를 구축하여 청렴한 평가체계 구축 → 평가위원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의 책임감 강화와 평가 공정성 확보
평가 방식	• 대면평가 → 평가위원 8명과 피평가자 및 기관별 책임연구원 참석	• 비대면온라인평가를 통해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의 사전접촉 결탁 가능성을 차단 → 선진화된 청렴 평가체계 구축 • 평가위원 각자의 평가독립성 확보로 평가결과 담합 등 R&D 평가의 부패 요소를 원천 차단 → 평가위원 간의 결탁가능성 해소로 반부패 평가 관리체계 구축
평가위원 이력관리	• 미실시 →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관리	• 부패평가위원 추후 섭외 불가 → 평가위원 섭외 단계에서 부터 부패 위험성을 사전 차단

추진성과

● **(평가 독립성)** 평가위원 다수가 익명평가로 인한 독립성 및 공정성 향상을 장점으로 의견 제시(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 **(의견 환류)** 피평가자에게 답변 기회를 제공하여 평가의견 및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한 결과, 평가 공정성에 대한 피평가자(고객)의 만족도 상승
  - 최초 도입('19.3.) 이후 전담기관 만족도 조사 점수 지속적 상승(5.6점, 6.5%↑)
    * ('19.3월 개념평가) 85.5점 → ('20.3월 개념평가) 86.5점 → ('20.5월 본평가) 91.1점
  - 피평가고객 설문조사결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메타평가 지표 중 '객관성 및 공정성' 항목 최고득점(95.4점)
    * 실제의견 : "평가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며,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검토한다는 느낌을 받음"
- **(국내외 확산활동)**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우수사례로 해외기관에 홍보 및 확산('20.8월)
  - IEA IDR(In-Depth Review, 30개 회원국) 한국보고서에 혁신성과로 소개되며, 코로나19에 대응과 투명한 평가방식에 대한 우수 국제화 사례로서 우리나라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상을 제고

10. 연구개발 분야 부패방지 시책

국가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연구재단

추진배경

- **(배경)**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 R&D 예산이 매년 확대됨에도 국가연구개발비가 '눈먼 돈' 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 존재

- **(필요성)**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표적 연구관리 전문기관('21년 7.6조원)으로, 국가연구개발비가 연구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 필요

추진내용

-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사용·집행을 위한 연구사업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 국가연구개발과제 전주기 단계별 위험요소(불공정 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사체계 구축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투명성 강화

연구개발과제 단계별 관리체계

	과제 선정	과제 진행	과제종료 및 정산
단계	• **(공고)** 과제 선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 • **(선정)** 접수과제 대상 선정 평가 실시	• **(협약)** 주관기관과 협약 (연구비 사용계획 포함) • **(연구진행)** 연구비 집행 및 집행내역 입력	• **(종료)** 연구실적 최종평가 • **(정산)** 종료 후 3개월 내 사용실적 보고
불공정 요소	• 선정 평가위원 간 불공정 평가담합 위험 • 특정과제 몰아주기 분위기	• 규정 범위 이상 집행, 부처 및 기관 간 중복집행 • 연구와 무관한 사용 (유흥업소 등)	•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리 체계	•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으로 평가 현장모니터링	• 연구비 통합 모니터링으로 집행내역 실시간 관리 • 연구비 클린카드 제도	• 연구비사용실적 접수 및 정산
감사 체계	• 익명신고 채널 운영으로 서류상 적합하게 꾸민 연구비 부정집행 적극적발 및 처벌 • 감사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 정기적 점검		

- **(과제 선정단계)** R&D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 **(주요 위험요소)** 평가위원 간 평가담합, 특정과제 몰아주기 분위기 조성
  - **(관리·감독체계)** 연구과제 선정평가위원회에 청렴모니터링단(청렴옴부즈맨 등 외부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평가현장참관 모니터링하여 평가 불공정 방지
- **(과제 진행단계)**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 **(주요 위험요소)** ① 규정 범위 이상 연구비 집행,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중복집행 ② 유흥업소 등 연구와 무관한 연구비 사용
  - **(관리·감독체계)** ① 범부처 시스템 운영으로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연구비 중복집행 방지, ② 연구비 클린카드 제도 운영
- **(과제 종료단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집행 잔액 및 부적정 사용금액 회수)
- **(과제 全 단계)** 신고채널 운영으로 서류상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꾸민 연구비 부정집행(편취·유용 등) 적극 적발 및 강력처벌
  - **(신고 활성화)** 익명신고 채널 운영 및 신고채널 다각화*로 서류상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꾸민 연구비 부정집행 적극 적발

    * 주요포털사이트 '연구비 신고' 검색 시 신고채널 연결, 익명신고채널 별도 운영, 유관기관 홈페이지(BRIC, 김박사넷) 신고배너 운영 등
  - **(강력처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뿐 아니라, 부정정황 포착 시, 형사고발(수사의뢰)까지 진행
  - **(사례전파)** 부정집행 사례 및 처벌결과는 언론보도, 관계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여 경각심 제고 및 투명한 연구비 집행 유도

추진성과

- R&D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국가연구개발비가 적합한 수여대상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성 강화
- 연구비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모니터링 강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명한 집행 유도
- 국가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하여 국가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
- 익명 신고채널 및 신고채널 다각화로 부정집행 사각지대 해소
- 언론보도, 관계자 교육,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자체 자정유도 및 청렴 연구문화 확산

10. 연구개발 분야 부패방지 시책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연구재단

추진배경

- **(필요성)**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R&D예산을 집행하는 대표적 연구관리 전문기관('21년 7.6조원)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가 중요
- **(목적)** 연구사업의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

추진내용

- **(모니터링단 역할)** 재단 평가 등 업무 수행과정에 제3자의 입장에서 참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연구사업의 평가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심의·회의 등
- **(모니터링 항목)** 평가준비 및 진행절차의 적절성, 평가위원 구성의 적정성, 평가 참여 충실성,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의 공정성 및 평가윤리 준수 여부, 정부부처 및 재단 관계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
- **(모니터링 위원)** 청렴옴부즈맨, NRF 시민참여단(일반시민) 및 연구자 등

〈 연도별 청렴옴부즈맨 운영 추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시횟수	30회	33회	35회	40회	41회
모니터링단	감사인 위주	감사인+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별도 풀 구성 (감사 관련 전문가 등)	NRF 시민참여단 및 연구자 ※ '20년 일반시민 평가 참관 시범 도입
점검항목	5개 항목 (평가준비 적절성, 평가위원 구성, 평가참여도, 평가진행의 공정성, 외부관계자 개입)				6개 항목 (평가위원 구성 관련 세분화)
점검방법	현장참관 또는 온라인 설문				온·오프라인 평가현장 참관 (평가자·피평가자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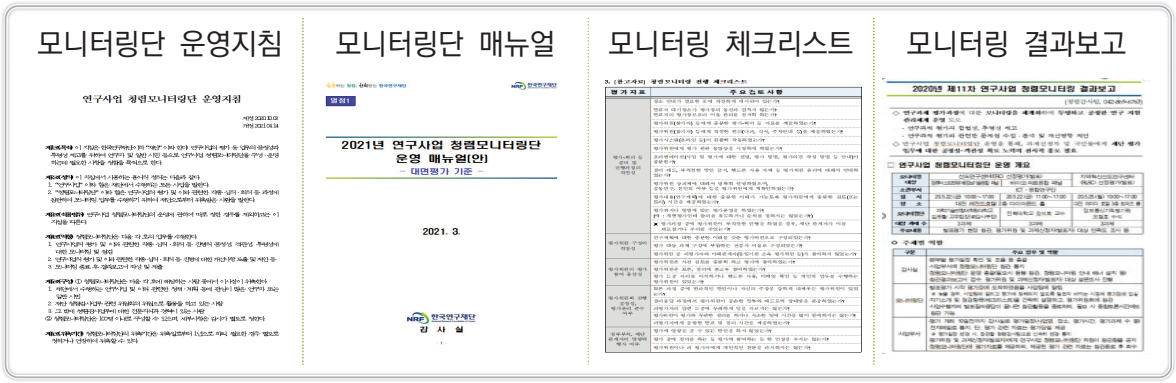
● 주요 개선실적

- **(제 도 화)**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지침」제정·제도화('20.10.08)
- **(점검대상)**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평가 포함 확대(현장참관 + 화상평가(온라인))
- **(위원구성)** 일반시민(NRF 시민참여단*), 청렴옴부즈맨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니터링 실시

  * 과학기술을 통한 삶(Life)의 질 향상과 미래 혁신에 관심이 많은 20~60대의 대학(원)생, 프리랜서, 교사, 작가, 직장인 등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

  * 언론보도(7회) :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 **(점검범위)** 평가발표·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평가 전 과정 참관점검 의무화
- **(전사적 운영)** 청렴마일리지(청렴KPI) 제도 연계, 전사적 운영 활성화
- **(결과반영)** 운영 결과보고 및 피드백(즉시), 검토·반영 요청



추진성과

기관 특성에 맞게 청렴옴부즈맨을 청렴모니터링단 위원으로 활용하여, 2년('19~'20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우수사례로 발표

● 평가위원, 신청자도 아닌 제3자가 평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평가위원과 신청자에게 경각심 제고

●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 간 평가담합, 특정과제 몰아주기 분위기 조성 등 불공정 위험요소 방지

● 일반시민, 청렴옴부즈맨 등이 평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공정성·투명성 확보

● 국가연구개발비가 적정한 대상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 예산 누수 방지

1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교통공사

추진배경

- 최근 외부기관의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로 인한 비리발생 사례 다수 발생으로 공사 내부의 퇴직자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이데일리, 2020.07.24. '퇴직자 몰래 챙겨주다 적발된 ○○기관'
  - 퇴직자가 퇴직전 재직기관의 경비업체 대표로 취업하자 기존 원칙을 뒤바꾸어 무자격 회사에 경비용역 맡기는 등으로 감사원 적발
• 00기관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수백억 일감 수의계약 따내 논란
  00기관 간부 재취업 업체 2년 연속 거액계약 독식 등 공공기관 부패사례 다수

- '20년 2월, 공사 청렴취약분야 진단을 위한 '내부직원 전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로 인한 청렴성 훼손 응답 다수 적출

• 퇴직자들이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하여 부적절한 업무 지시
•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선배들이 퇴직 후 연계기관에 취업하여 관련업무 수행
• 용역 및 공사계약 시 퇴직자가 업체 임원이 되어 검수 및 검사할 때 불공정하게 개입
• 부장급 퇴직자가 단가계약 공사 책임자로 현장에 나타나 직원들에게 갑질

- 상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위원 분석결과 '유관기관(계약업체) 취업 퇴직자와의 이해충돌 개선'을 청렴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기관장 특별 지시(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20. 4. 9.)
  - 재취업 퇴직자 규제를 위한 매뉴얼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지시

추진내용

● 재취업 퇴직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20.09.02. 완료)

〈 업무흐름도 〉

계약 체결	▶	계약업체 ① 재취업 퇴직자 고용현황(필수) 및 ② 개인정보 동의서 사본(선택) 제출	▶	계약업체 퇴직자 고용현황 /접촉현황 신고	▶	퇴직자 접촉실태 모니터링
계약부서		계약업체		발주부서		청렴감찰처

〈 시스템 개발 〉

구 분	내 용	관리부서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고용현황 관리	• 계약업체(공사·용역·물품·상가·광고)에 재취업한 퇴직자 고용현황 등록/수정	발주부서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접촉현황 관리	• 계약업체(공사·용역·물품·상가·광고)에 재취업한 퇴직자(3급 이상)와 공적, 사적 접촉현황 등록/수정/삭제 • 등록 및 삭제(사유 포함) 시 소속부서장 메일 통보	
관리자 페이지	• 계약업체(공사·용역·물품·상가·광고)에 재취업한 퇴직자 고용현황 및 접촉현황 관리	감사실 (청렴감찰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우리공사와 계약업체간 계약기간(계약기간 경과 즉시 삭제)

고용 및 접촉현황 관리실적('21.1월 말 기준)

• 고용현황 : 총 106 명
  - 공사·용역·물품, 상가·광고 계약 시 계약업체에서 고용중인 관리자급(3급) 이상 퇴직자 현황 제출건

• 접촉현황 : 총 60 건
  - 재직자가 우리기관의 계약업체에 재취업 퇴직자 접촉 시 퇴직자, 접촉자, 접촉사유 입력건
    ※ 재취업 퇴직자 종합 관리대책 시달(금년 5월) 이후 계약건에 대한 관리실적

●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시 '부패행위 거리두기' 실시(계약부서/발주부서)

- 계약시마다 공고문을 활용하여 관련업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패행위 거리두기 안내('20.5월~)

부패행위 거리두기 안내문구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 공사 준공검사 시 교차검사 시행(발주부서/1~4호선 ⇔ 5~8호선)
  - 기술본부 준공검사 교차시행 개선방침 수립('20.7.27.)
  - 공사 준공검사 단계에서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차 검사 시행

- 재취업 퇴직자 행위제한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 운영(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 퇴직자 접촉실태 모니터링 및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시 조치('20.5월~)
  - 인사규정 시행내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청렴의무 위반 및 임직원행동강령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위반 적용

추진성과

- 재취업 퇴직자 관리체계 확립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고용현황 관리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접촉현황 관리		재취업 퇴직자 행위제한 및 위반사항 조치
• 퇴직자 고용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황 등록 - 계약시 3급이상 퇴직자 고용 현황 제출 의무화 (1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시 고용현황 징구 (2차) 재취업 퇴직자 확인 후 고용현황 시스템에 입력	+	• 퇴직자 접촉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황 등록 - 재취업 퇴직자 공적, 사적 접촉시 퇴직자, 접촉자, 접촉사유 입력 - 퇴직자 접촉 시 2인 1조 필수, 접촉 후 부서장 결재로 등록 - 공사계약의 경우 준공검사시 교차검사 시행(유착가능성 차단)	+	• 퇴직자 접촉실태 모니터링 - 재·퇴직자 접촉실태 상시 점검 관리부서 이행실태 테마점검 • 퇴직자 접촉 미 신고시의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미신고시 과실여부, 고의성 등 종합적 판단하에 조치
계약 발주부서		접촉 발생 전 부서		감사실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20. 9월~)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20. 9월~)		이행여부 모니터링 (연중)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내부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상 체감하는 부패취약분야를 기관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었음
- 기관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발생 요인의 적극적 발굴 · 개선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발본색원 하고자 하는 신임 기관장 이하 상임감사 및 경영진의 강력한 청렴의지에 기인
- 재취업 퇴직자 관리에 대한 기관내부 공감대 형성 및 공공기관 관리실태 사전조사, 선행기관 벤치마킹,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등 전사적 참여와 대응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1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임직원의 주식 등 거래 자가점검제도 시행

한국수출입은행

추진배경

-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이해충돌 행위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상장회사·금융기관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으로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추진내용

- 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등 거래 자가점검 제도를 마련('17. 2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

  * '17년 이후 당행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에 지속 반영

  - **(全 임직원)** 법령 및 내규(임직원 행동강령 등)를 기반으로 구성한 점검항목*을 통해 주식 등 거래내역에 대한 자가점검을 분기별 실시

  * 주식 등의 거래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및 직무관련성 여부 등

  - **(금융투자직무 수행 임직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계설 및 거래 내역 등을 준법감시부서 앞 정기적 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내규 반영)

-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위법사례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
  - 현업부서의 실제 업무상황, 판례 및 처분사례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수시 배포하여 임직원의 자율 준수를 도모

추진성과

-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등 법령 등 위반행위 발생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준법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여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내재화와 對 국민 신뢰도 제고

1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선제적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진배경

- 新정부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공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추진
- 공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17.5월)에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 이에, 공사는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위험 노출 및 관리실태 현황 진단' 설문결과 이해충돌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통제활동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응체계 수립

추진내용

- 공사 이해충돌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공사의 이해충돌 유형		이해충돌관리기준 주요내용
잠재적 충돌	영업, 계약, 고객설비, 열수송 관련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5개 유형 (이해충돌관리기준 제3조2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이해충돌 관리대상의 범위) 제5조(이해충돌 관련 리스크 관리) 제6조(이해충돌 확인) 제7조(이해충돌 상담) 제8조(이해충돌 조치관리) 제9조(이해충돌 모니터링 등) 제10조(이해충돌 자가점검) 제11조(모니터링결과 환류)
실제 이해 충돌	수행 직무로 인해 부당하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전 등 재물을 얻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14개 유형 (이해충돌관리기준 제3조3호)	

- 임직원의 이해충돌 여부 진단 및 상담을 위해 4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구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수행목적
잠재적 이해충돌 확인	직무성격진단 (9개)	직원의 직무가 잠재적으로 어떠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
실제적 이해충돌 확인	개별 직무의 직무관련자 진단 (7개)	직무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개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진단 (20개)	공사직원이 개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
	제3자 또는 객관적 입장에 대한 진단 (5개)	-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을 객관적 파악

- 이해충돌 자가진단 후 상담 및 조치체계 마련

① 자가진단		② 상담신청		③ 상담 및 기록		④ 상담조치
체크리스트 활용한 직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 진단	➔	자가진단 결과 이해충돌이 발생 의심되는 경우 상담	➔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	➔	직무수행허용, 직무재배정, 인력재배치 등 조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전자계약시스템에 탑재하여 계약의뢰자, 계약담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 제고
  - 계약추진 결재 상신 전 해당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필수, 미확인 시 결재상신 불가

추진성과

-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저해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제도화 완료

- 이해충돌 관련, 2017년도 자체청렴도(외부) 측정 결과 전년대비 향상

  * (부당한 요구) 97.1점 → 98.5점, (비공식적인 만남, 절차요구) 98.35점 → 98.75점

- 이해충돌관리체계의 선제적 도입내용을 공유·전파
  - 이해충돌체계 미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지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자계약시스템 적용' 등의 공사의 선도적 도입내용을 적극 전파

퇴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접촉 제한제도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진배경

- 공직자와 수혜자(퇴직자)간의 부정적 유착 및 부패행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부패사례 지속 발생
  - 심사평가원의 경우도 퇴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익 제공 또는 퇴직자가 중개하는 부당이익 근절을 위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신고의무 접촉범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

관련기사

- '퇴직자업체 특혜…○○공단도 메피아 복사판'('17.2월, 노컷뉴스)
- '○○기관 퇴직 공무원 줄줄이 로펌행…전관예우 때문?'('17.5월, 한국일보)

- 부패 위험 분석

구 분	분 석 결 과
부패행위의 형태	•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등 특혜의 제공
부패행위 발생단계	• 공공기관 사업수행 전반
부패행위 발생경위	•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퇴직자 전관예우
부패방지시스템 존재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익명 신고제도 구축 · 운영
부패행위지속성	• 직무수행과정 및 직무와 관련 없이 지속 발생 가능
부패행위 피해규모	• 직접적 피해: 부당하게 집행한 재산상 손해 • 간접적 피해: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부패행위 발견경위	• 내 · 외부 익명신고,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보도 등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	• 내부조사 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감독기관 보고
문제해결절차	• 조사실시, 현황파악,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재발방지장치	• 퇴직자 접촉제한, 강력한 징계, 제도보완 등

추진내용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제도화
  -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제정을 통해 재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8.1.29.)

-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
  - **(직무상 기본윤리)** 3년 이내 퇴직자에게 적용, 퇴직임직원 기본윤리 명시
  - **(소속 기업에 대한 직무수행기준)** 직무수행의 기본기준, 재직 중 실질적으로 관여한 업무 자문 등 금지
  - **(심사평가원과 관련한 직무수행기준)**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금품 등 수수 및 사적 접촉 제한 등
  - **(윤리기준의 효력)** 윤리기준 미준수 퇴직자에게 출입금지, 소속기업에 비위행위 통보, 행위사실 대외공개 등 조치 근거 마련

- 직무관련자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
  - **(보고의무)** 심사평가원과 직무관련성이 높은 병의원 종사자,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자와 공개된 장소 이외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5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추진성과

-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등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설명자료 전 직원 안내를 통하여 기관의 확고한 청렴의지를 대내외 전파

- 퇴직자 사적 접촉에 대한 명시적 기준 설정, 신고의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통해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실질적 이행력 담보

12. 자가진단 등 자율적 개선제도 운영

감사이전 자체 치유 프로세스 도입·운영, 「비위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및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인천도시공사

추진배경

- 각종 감사 등에 대비하고 적발과 지적위주의 기존의 특정감사 또는 실질감사 보다는 비위 사전예방 위주로의 업무운영방향 전환 모색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취약분야 및 타 공사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발생 전 해당부서의 자체 치유 유도 ⇨ 호루라기 예보제
- 그 동안 조직 내 노출되지 않은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청렴한 신고문화 정착 ⇨ 자진신고자 처분감면제

추진내용

1 비위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 추진 프로세스 〉

1단계-감사실		2단계-치유대상 이행부서		3단계-감사실 등
예보·점검 대상 선정 (치유대상 부서통보)	⇨	호루라기 예보에 따른 자체점검·치유 및 개선·협조사항 통보	⇨	치유대상 점검회의 통한 성과 측정·결과 피드백

- 1단계 : 비위 발생위험 업무 모니터링(감사실)
  - 언론보도, 타 공사 사례분석,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하여 公社 업무관련 비위 발생위험 업무 모니터링
  - 외부(감사원, 행정안전부, 市 등) 감사 반복지적사례, 특정감사 및 일상감사 반복 지적사례를 대상으로 비위 발생위험 업무 선별

- 2단계 : 자체점검 및 치유대책 수립·시행(해당부서)
  - 비위 발생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추진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및 치유대책 수립·시행
  - 점검결과에 따라 타 부서 개선·협조사항 및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이 예상되는 사항 별도 송부

- 3단계 : 피드백 및 감경 등 적극 반영(감사실)
  - 자체점검·치유대책에 대한 피드백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반영하여 감경 적극 반영
  - 부서 청렴마일리지 평가에 반영
  - 부서 간 협조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조치(기획조정실)

2 업무절차·규정 위반 등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도입

- 업무추진 이후 절차·규정 위반, 사후 관리부실 등의 잘못을 발견(인지)할 경우 자진신고 후 치유방안을 마련하면 징계처분 감면 등

〈 추진체계 〉

온/오프라인 자진신고 및 관련사항 접수	⇨	신고내용과 관련된 해소·처리방안 마련, 필요 시 감사실 협의 등을 통한 방안 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한 치유 완료	⇨	치유내용 등에 특별한 하자 등이 없는 한 관련사항 '종결' 처리
(자진신고자)		(해당부서)		(치유결과 감사실 회신)		(감사실→자진신고자)

- 신분노출 동의여부에 따라 신고절차를 구분하여 운영
  - **(익명신고)**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旣 운영 중인 '부조리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또는 청렴소통반 창구를 활용한 의견 개진 또는 특정감사 실시 건의 등
  - **(실명신고)** 신고자가 처분 감면에 필요한 신분노출에 동의 할 경우 '상임감사와의 Hot-Line' 창구 개설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우편물신고

- 신고결과 사후 조치사항
  - 실명이 확인된 자진신고자에 限하여 관련신고사항에 대한 정상 참작, 징계처분양정 시 감경 또는 면제
  - 신고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인사·언어폭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서이동·전보조치 등 신고자 동의하에 필요한 조치 검토
  - 관련 처리결과 전사게시판 게시·공유 및 관련부서 교육실시 등 전 직원 대상 홍보 등

추진성과

- 반복적 내·외부 감사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 강화를 통하여 소극적 업무관행 등 불공정·불합리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사고 및 비리 발생 시 사규에 정한 징계처분 등 발생 시 인사 상 불이익 및 경영평가 등 대외 감점사항 발생 사전 방지
- 내재된 위험요인 사전 노출 및 적의 해소 등을 통한 조직신뢰 회복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호루라기 예보 실행 초기에 호루라기예보 발령을 감사지적으로 오해하고 반발이 있었으나, 호루라기예보 시행결과 부서 자체적으로 치유하고 개선함에 따라 직원들을 보호하고, 감사 지적으로 인한 개선보다 자주적인 대응으로 개선효과가 높음

12. 자가진단 등 자율적 개선제도 운영

POSA 청렴문화지수 개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추진배경

- 직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에 대한 지속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18년 권익위 청렴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청렴도 향상 최우선과제를 '고위직 솔선수범'으로 응답함에 따라 고위직 솔선 유도를 위한 부서별 측정 체계 도입 검토
- 기관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청렴 시책 및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 참여형 시책 발굴

추진내용

- **(청렴문화지수 개발)** 기관 청렴활동 현황 분석 및 직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청렴활동 계량화'를 통한 청렴문화지수 자체 개발

'청렴문화지수' 개발				측 정		결 과 활 용
의견수렴	심의	의결	▶	감사실	▶	우수부서: 포상 부진부서: 교육
청렴간담회	반부패·청렴 추진단	윤리경영 위원회				

〈 청렴문화지수 구성내역 – 4개 분야, 12개 항목 〉

분 야	항 목	가중치
참여	청렴 관련 제안, 경진대회 참여 등 4개 항목	20
조직문화	정시퇴근 준수 등 6개 항목	30
교육	청렴교육 이수율	25
감사	감사처분 결과	25
(가점)	청렴 관련 내외부 포상	5

* 항목별 세부 측정기준 붙임 참조

- **(측정실시)** 감사실이 주관하여 전부서의 청렴문화 측정(전년 11월~금년 10월)

- **(결과활용)** 측정 결과는 각 부서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11월 말 발표하고, 전사적 참여 동기부여 및 미흡부서 개선노력 병행
  - 우수부서(1등급)는 포상 및 다음 연도 측정 시 가점 적용
  - 부진부서(5등급)는 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감사실 청렴교육 이수
  - 다음 년도 반부패·청렴계획 및 감사계획 반영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배분율	10%	20%	40%	20%	10%	100%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개선
  - '17년도 5등급에서 '18년도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

- 고위직 청렴도 향상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감소

〈 2018년도 관리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

(단위: 점)

평 가 영 역	평 가 점 수		증 감	비 고
	'18년도	'17년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10점 만점]	9.67	9.58	0.09	전 항목 향상
조직환경 부패위험도[10점 만점]	6.84	6.35	0.49	
업무환경 부패위험도[10점 만점]	6.59	5.81	0.78	

※ 조직환경·업무환경 부패위험도: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위험도가 낮음
※ 개인별 청렴도: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음

- 전사적 참여형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
  - 청렴교육 이수 직원 증가('17년도 158명 → '18년도 430명)
  - 반부패·청렴 퀴즈대회 참가자 증가('14년도 최초시행시 11명 → '18년 58명)
  - 부패사건 0건 달성

[붙임]

〈 청렴문화지수 항목별 세부 측정기준 〉

<table>
<tr><th>분 야</th><th>항 목</th><th>가중치</th><th>측 정 기 준</th><th>비 고</th></tr>
<tr><td rowspan="4">참여</td><td>1) 청렴 관련 제안, 경진대회 참여</td><td>6</td><td>• 제안제도(청렴 관련), 청렴경진대회(청렴퀴즈 등) 참여자 수/수상과 무관<table><tr><td>4점</td><td>4.5점</td><td>5점</td><td>5.5점</td><td>6점</td></tr><tr><td>10%</td><td>20%</td><td>40%</td><td>20%</td><td>10%</td></tr></table></td><td rowspan="4">상대평가(팀별)</td></tr>
<tr><td>2) 청렴 관련 조직 및 회의체 참여</td><td>4</td><td>• 반부패청렴추진단, 윤리경영 자율점검반 등 청렴 관련 조직·회의체 참여자 수<table><tr><td>2.4점</td><td>2.8점</td><td>3.2점</td><td>3.6점</td><td>4점</td></tr><tr><td>10%</td><td>20%</td><td>40%</td><td>20%</td><td>10%</td></tr></table></td></tr>
<tr><td>3) 자체 청렴활동</td><td>6</td><td>• 자체 복무·보안점검, 청렴 또는 조직문화 관련 자체 교육·회의·워크숍 실시<table><tr><td>4점</td><td>4.5점</td><td>5점</td><td>5.5점</td><td>6점</td></tr><tr><td>10%</td><td>20%</td><td>40%</td><td>20%</td><td>10%</td></tr></table></td></tr>
<tr><td>4) 자진 신고</td><td>4</td><td>• 부패, 청탁, 공익, 외부강의, 금품등 감사실에 자진 신고한 건 수<table><tr><td>2.4점</td><td>2.8점</td><td>3.2점</td><td>3.6점</td><td>4점</td></tr><tr><td>10%</td><td>20%</td><td>40%</td><td>20%</td><td>10%</td></tr></table></td></tr>
<tr><td rowspan="5">조직 문화</td><td>5) 정시퇴근 준수</td><td>5</td><td>• 설문조사 해당항목 결과 반영</td><td rowspan="5">상대평가(실별)
- 설문조사: 매년 2분기 중 실시</td></tr>
<tr><td>6) 자율적 휴가사용</td><td>5</td><td>• 설문조사 해당항목 결과 반영</td></tr>
<tr><td>7) 호칭사용(인간존중)</td><td>5</td><td>• 설문조사 해당항목 결과 반영</td></tr>
<tr><td>8) 건전한 음주문화</td><td>5</td><td>• 설문조사 해당항목 결과 반영</td></tr>
<tr><td>9) 적법한 예산집행</td><td>5</td><td>• 설문조사 해당항목 결과 반영</td></tr>
<tr><td>10) 갑질문화 근절 (부당한 업무지시 등)</td><td>5</td><td>• 설문조사 해당항목 결과 반영</td><td></td></tr>
<tr><td>교육</td><td>11) 청렴교육 이수율</td><td>25</td><td>• 평가일 기준 현 소속부서 결과반영<table><tr><td>15점</td><td>18점</td><td>20점</td><td>22점</td><td>25점</td></tr><tr><td>85% 미만</td><td>85% 이상</td><td>90% 이상</td><td>95% 이상</td><td>100%</td></tr></table></td><td>절대평가(팀별)
-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준 적용</td></tr>
<tr><td>감사</td><td>12) 감사처분 결과</td><td>25</td><td>• 처분일 기준 소속부서 결과반영<table><tr><td>15점</td><td>18점</td><td>20점</td><td>22점</td><td>25점</td></tr><tr><td>징계 시정 변상</td><td>경고 (불문포함)</td><td>주의, 통보, 권고</td><td>구두주의, 현지조치</td><td>지적 없음</td></tr></table></td><td>절대평가(팀별)
- 다수처분 경우 그 중 하위점수
- 동일처분 2건 이상 경우 한단계 하위점수</td></tr>
<tr><td colspan="2">(가점) 청렴(윤리경영) 관련 내외부 포상</td><td>5</td><td>• 포상일 기준 소속부서 결과반영<table><tr><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r><tr><td>감사실</td><td>원장 (상장)</td><td>원장 (표창)</td><td>장관 (본부장)</td><td>총리 이상</td></tr></table></td><td>절대평가(팀별)
-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 반영</td></tr>
</table>

〈 조직문화 항목(5~10)별 배점기준 〉

구분	최하(1실)	하(1실)	중(1실)	상(1실)	최상(1실)	비고
배점	3점	3.5점	4점	4.5점	5점	

12. 자가진단 등 자율적 개선제도 운영

적극적 의미의 '청렴' 재정립 및 청렴성 진단 도구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청렴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반부패'로 청렴을 한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단의 각종 제도와 업무 및 직원 개개인의 의식에 청렴문화를 내재화하고 전사적 확산을 위한 적극적 의미의 새로운 청렴 정립 및 실천 요구

추진내용

- 내 · 외부 구성원 및 국민의견 수렴
  - **(국민토론방)** 친절하고 충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정의
  - **(직원인식도조사)** 공정성, 투명성, 업무충실, 반부패 등으로 정의
- 新청렴 개념 정립 및 청렴성 평가 지표 개발
  - 청렴이란, 공단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 · 투명하며 친절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
  - 청렴성 평가 지표 52개 도출(최초 46개에서 감사적용 등을 통해 재정비)
- 감사 수행에 청렴성평가 지표 적용 후 개선 · 권고 실시('20.11.~'21.4.)

구분	총계	개선	권고	통보
건수	94건	54건	30건	10건

- 청렴성 평가의 규정상 근거 마련
  - **(감사규정)** 공단의 업무 내 청렴성 평가 정착을 위한 감사규정 신설

감사 규정 제43조(청렴성 평가)

① 감사는 공단 업무의 청렴성 저해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후 각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제도 또는 업무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렴성 평가의 세부수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 **(청렴성평가 지침 제정)** 청렴성평가 대상 및 수행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청렴성 자가진단 실시(반기 1회)

- 공단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업무 중 경험할 수 있는 가상사례를 통해 개인별 진단 실시
- 자가진단 대상 총 13,992명 중 13,738명 참여(98.18%)
- 총 1,110건의 업무 중 접할 수 있는 청렴성 진단 사례 제출

추진성과

● 청렴 내재화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언론 보도 21건 등

건보공단,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확산 '맞손' (보건뉴스, '20.9.21.)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이태한)과 한국투명성 기구...(중략).. 또한, 청렴분야 전문가인 이상학 대표는 공단만의 적극적 청렴의미 재정립과 코로나 19와 관련해 공정 · 투명하게 추진된 공단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 청렴성 평가 및 자가진단 실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

구분	내용	결과
청렴 의미 재정립 인식	공단만의 청렴 의미 재정립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도	긍정 96.7%
청렴주요 키워드	새로운 청렴의미의 키워드에 대한 선호도	공정투명>신뢰>자긍심>친절
청렴성평가 필요성	청렴성 평가 실시 필요성	긍정 87.91%
공단 업무 제도 적용	감사수행 외 공단 업무 및 제도 적용 필요성	긍정 90.48%
청렴성 자가진단 필요성	직원 스스로 청렴성지표를 활용한 자가진단 실시 필요성	긍정 89.39%
대상자 및 적용 범위	청렴성 자가진단 대상자 소속 및 직급 범위	전직원 대상 필요 86.08%

13. 채용비리 근절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신뢰받는 채용시스템

국립공원공단

추진배경

- **(2018년 정부경영평가)** 외부감사에서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사항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향후 개선노력 요구

  ※ 채용실태 점검('17.11.)에 따른 지적사항 : 총 4건(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오적용,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등)

- **(2018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서류전형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미이행

추진내용

1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채용 원칙 확립

- 외부위원 구성 내실화
  - 퇴직자 및 비상임 이사 참여 제한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원칙
  - 동일인 2회 연속 참여 제한(동일채용 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참여 가능)
- 채용비위자 엄정 제재
  - 채용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및 징계감경 제한
  - 인사·감사부서 보직 제한
-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
  -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 매분기 홈페이지 공지
- 채용 외부 위탁업체 관리 강화
  - 부정개입 차단을 위한 정보유출방지방안 마련 의무화

- 중대한 채용오류 발생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

〈 인사제도 개선사항 〉

인사제도 개선조항	개선내용
인사규정 제6조(인사회원회 구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자 제외
인사규정 제23조(승진임용 제한)	채용비위 관련자 승진 제한
인사규정 제76조(징계의 양정기준)	채용비위 관련자 징계 감경 제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채용)	공공기관 채용 표준매뉴얼 반영 채용세칙 마련
	채용 공정성 관리,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위탁업체 관리 등

2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전형단계별 공정성 강화

전형단계	개선사항	
채용계획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全단계 감사부서 입회
서류전형	서류전형 검증위원회 도입	
필기·면접전형	블라인드 채용 강화 및 결과 공개 확대	

- 채용 全과정 감사부서 검증 실시
  - 채용계획(일상감사) → 서류전형(검증위원회) → 면접전형(입회)
  - 샘플 임의추출,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한 채용비위 원천봉쇄
  - 지방사무소 계약직 채용 시 청렴시민감사관, 예비감찰단 등 감사인력풀 활용
-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채용 방지
  - 신규채용 소요 발생 시 사업·예산·심사부서의 사전심사를 통한 채용적합성 검증 및 승인
  -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응시자격 강화 등 채용기준 관리 강화
-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서류전형(전원합격) → 필기전형(직무수행능력〉서류〉취업우대자) → 면접전형(면접〉필기〉취업우대자, 최종 동점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서류전형 검증위원회 도입
  - 총 3인(외부전문가 2명, 감사실 1명)으로 구성

- 평가기준 적정성 검토, 부적정 사항 발견 시 재평가 요청

● 표준화된 블라인드 채용 시행

- **(제도개선)** 평가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화
- **(편견정보 미기재)** 나이·성별 미기재, 면접 시 수험번호로 호명 등
- **(지원직 채용 가이드라인 개정)** 공단 특정직원과의 관계 언급 시 결격사유로 평가 제외 조치

● 결과 공개 기준 확대

- (기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 (확대)전형 결과 발표 시 전체 공개

추진성과

●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채용관련 외부기관 감사결과 채용 비리 위반사례 '0'건

● 채용제도 개선 및 검증절차 강화를 통한 채용 투명성 제고 및 직무역량중심의 우수인재 확보

2020년 신규 입사자 인터뷰: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21.5.26. 방영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신뢰받는 채용시스템 운영을 통한 직무 중심의 역량 있는 인재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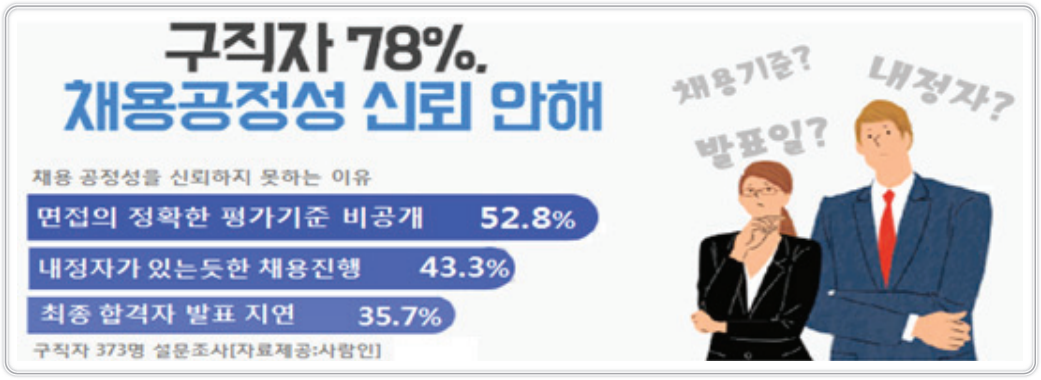
13. 채용비리 근절

인공지능을 활용한「Full 블라인드 채용」도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추진배경

- **(국민관점)** 최소한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달라는 청년들의 외침
  -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공공기관은 탈스펙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청년구직자 78%는 아직도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구직자 373명 대상 설문조사, 사람인)



- **(기관관점)** 직무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선발의 중요성 인식
  - 기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인재선발을 위해 기존 직무별 고성과자의 인재특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 편견요소(지역인재·고졸·경력단절 등)를 배제한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는 신기술을 활용한 채용 프로세스 혁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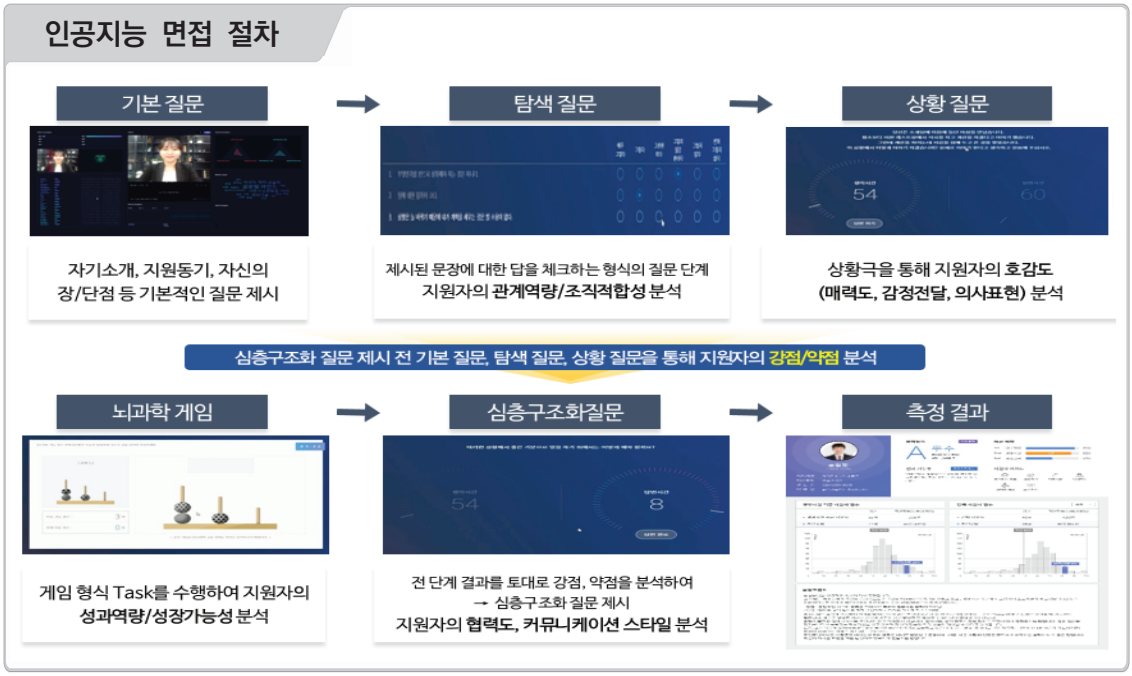
- **(사회관점)** 코로나19, 비대면 채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코로나19의 확산우려로 기업의 채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비대면·실무형 채용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음

    * '20년 상반기 채용인원 전년대비 5.1% 감소(고용부, 직종별노동력조사)
  - 특히, 비대면 면접은 기업과·구직자의 감염을 방지하는 안전한 채용운영 측면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추진내용

- 공공기관 최초 인공지능 면접도입으로 “채용에 혁신을 더하다”
  -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제의 일환으로 채용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면접 공공기관 최초 도입”결정
  - AI 채용솔루션 개발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검토,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직무별 인재특성 데이터 피드백을 통해 공공부문에 특화된 시스템 개선



- 인공지능 시스템 초기수요 창출 및 확산 촉매역할 수행
  - 혁신기술제품인 인공지능채용 솔루션 국내최초 구매, 채용업무에 적용하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 지상파생방송·뉴스·일자리박람회 등“적극홍보”, 타 공공기관 컨설팅 지원* 등“공공·민간 수요창출 및 초기판로 지원”

* 한국OO공사, OO시청 등 지자체, 공기업 군, 공공기관 등 컨설팅 지원

뉴스	지상파 생방송	일자리박람회 체험관

추진성과

- 균등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균등기회)** 고성과자의 서류전형 탈락가능성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편견요소를 제거, 지역인재·고졸·경력단절 차별 해소

    * 지역인재(31%), 비수도권(42%), 고졸(22%), 여성(19%) 신규채용 증가
  - **(공정채용)** 직무별 요구역량을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추천하여 우수인재 채용 비율 확대

    * AI추천 신규입사자 성과평가 결과 B등급 이상 72% 증가
- 채용기간 28일 단축! 취준생 편익과 기관 업무효율성도 함께 UP!
  -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면접전형으로 응시생의 시간·비용 절감, 서류(필수요건 판별)·AI 면접 통합시행으로 채용기간 단축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공공기관 채용에 첫 도입한다는 부담감
  - 인공지능면접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2018년 AI면접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 공공부문에 적용이 가능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이사회)과 내부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기에 현실적 어려움 존재
-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공공기관 최초의 성공사례를 만들다
  - 채용담당 직원들은 국내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소식을 전달하고, 상용화 전 직접 찾아가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
  - 공공부문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면접솔루션 개발을 위해 테스트베드 역할 자처, 보완사항 발굴 등 시스템 개선 기여
  - 기관 직무능력 발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면접 솔루션을 경영진 및 내부직원에 기술시연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 도입 성공

14. 청탁금지제도 운영 내실화

실제 금품수수 반환 및 신고를 이끌어낸 모의신고 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진배경

- 부패취약분야인 반입폐기물 검사업무에서 금품수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금품반환 및 신고 과정에서 미흡사항* 발생

  * 이해관계자 등에게 전달받은 금품을 사정상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사실을 해당부서장에게만 보고하고 감사실에 신고를 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알고 있어도 실제 청탁 또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금품수수 시 즉시반환 및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실에 '신고' 필요

- 다양한 모의상황을 부여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배양

추진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 교육훈련의 방향 재설정
  - **(기존)** 어떤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업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청탁금지법 위반 가상상황(메시지 부여)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및 청렴감사실 직접신고 훈련 실시

구분	훈련메시지 전파	위반사례 신고	신고사무처리	훈련평가/환류
담당	청렴감사실	메일 수신 직원	청렴감사실 (실무자)	청렴감사실
조치사항	청탁금지법 위반상황 전파 (개인 메일)	상황판단 및 신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내용 접수 및 취합	평가결과 개선 및 환류

- 훈련 전 사전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중 금품수수 관련 내용을 문서로 배포
  - 금지된 금품등 수수 시 지체 없이 반환 후 감사실로 서면신고토록 교육(모의신고 훈련 대비)
- 기관 특성을 고려한 총 6개 부패취약분야 중심으로 훈련 실시
  - 반입폐기물 검사업무, 계약업무, 용역감독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우선 훈련대상 선정
  - 기타 업무에서도 훈련대상 무작위 선정(매년 중복 없이 훈련대상 선정)
-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사항
  - 훈련 정례화(연 1회 이상)를 통한 모의상황 난이도 조정 등 체계적 훈련 실시
  - 명절 전후 훈련실시로 실제 금품수수 상황 발생 대비
  -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상황메시지 부여
  - 훈련결과(미흡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으로 훈련 효과 극대화
- 훈련 참여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공
  - 훈련참여자 중 신고절차 준수 및 신고내용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청렴캠페인용 기념품 활용) 제공
  - 훈련참여자 전원에게 청렴마일리지 부여
  - 직원들의 훈련참여 독려(직원교육, 대내협조문서, 그룹웨어 공지, 훈련대상자 개인 문자메시지 발송 등)

추진성과

- 실제 금품수수 사건 발생('20.4월, 10만 원 상품권), 즉시 반환 및 신고 완료
  -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의 대처 요령을 실천으로 옮김

    ※ 해당직원은 금품등 제공사실 확인 즉시 택배로 반환 조치 후 청렴감사실로 신고
- 훈련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훈련의 필요성 84점, 훈련의 효과성 81점으로 훈련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가 높은 수준

  ※ 만족도 조사(5단계) : 매우높음(100), 높음(80), 보통(60), 낮음(40), 매우낮음(20)
-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 2년차 즉시신고율 17%p 향상
  - '19년 모의훈련 신고율 65% → '20년 모의훈련 신고율 82%
  -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의 반복으로 금지된 금품등 수수시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실에 신고해야 함을 인지

-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의 영향으로 명절선물 수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직원 관심도 증가(상담건수 '18년 0건 → '19년 13건)
  -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으로 확대 실시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 도입('19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0건"
→ 훈련참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결과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애로사항)** 모의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의 긴장감이 낮음
  - 상황메시지를 개인메일로 수령하고도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음
  - 모의신고 훈련을 과외업무로 인식해서 관심도가 낮음

- **(극복방안)** 모의신고 훈련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안내 및 훈련 참여 인센티브 부여
  - 훈련에 대한 내부문서 시행, 반부패 시책(모의신고 훈련)에 대한 수시교육, 부서별 가온길잡이(청렴업무 담당자)를 통한 훈련 참여 독려 등
    * 훈련 대상자 휴대폰 메시지 발송, 메일 수신확인 등을 활용하여 참여 독려
  - 훈련 참여자에 대한 청렴마일리지(내부평가지표와 연계) 지급 및 훈련 우수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으로 동기 부여

14. 청탁금지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 지원 공무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및 관리체계 강화

한국마사회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준수)** 외부 지원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청탁금지법상지원에 해당하므로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소지 제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국민적 기대 부응)** 공공기관 등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라 관리 강화의 필요성 대두

* 해외출장 등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26만 명, '18.5월), 권익위 주관 점검 실시('18.5월~6월)

추진내용

- 외부지원 공무국외여행 금지
  -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①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계약 등에 포함된 국외공무여행 금지
  - 우리 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원칙적으로 금지로 법 위반 소지 제거

-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여행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과의 국외공무여행 금지

-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 위해 심사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하며, 여행의 필요성·목적의 타당성·여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 외부지원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경우, 감사부서의 장 및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
- 소집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출장자 본인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국외여행에 관한 심사에서 제외

●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철저

- 공무국외여행 후 1개월 이내 출장자에게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사내전산망,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 공유

추진성과

- 2011년 규정 제정 및 제도 도입 이래 '총 959건' 심사
- 임직원의 해외 출장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결과] '24건' 심사 불허 및 '71건' 요건을 강화하여 허용
  ⇒ 총 예산 236,398천원 절감

●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지원 시, 동 기준 적용을 통한 경각심 제고로 올바르고 청렴한 공무국외여행 시행문화 정착

● 부패 취약분야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부적정한 사례 근절

- 동 사례를 타 공공기관에 확산 및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전반적인 청렴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 검증이 엄격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안내 및 홍보

14. 청탁금지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강의등 신고 실태 전수조사 및 신고시스템 도입

한국수출입은행

추진배경

- 대외거래 전담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분야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당행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요청 쇄도('17년~'19년 연평균 신고건수 495건)

  * 해외건설·플랜트PF, 국제지역·산업경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해외경제연구소, 정부 위탁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경제협력기금) 관리 등

- 또한,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 5. 27자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변경내용 대한 신고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상담 및 과오신고 빈번

추진내용

1 외부강의등 신고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간* 신고누락내역(자진신고) 확인 및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상 기신고 내역(1,890건)의 규정 준수여부 확인

  * '16. 9월~'20. 7월 (청탁금지법 시행일 '16. 9. 28자 감안)

- **(조치사항)** 신고기한 초과 및 신고누락 등의 미준수 사항이 적발된 개별직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조사 결과 및 종합 후속조치 내용을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유

2 종합 후속조치 마련

- 외부강의등 신고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 **(체크리스트방식 도입)**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직무유착성, 월 횟수 제한 초과 여부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방식 최초 도입을 통해 자가검증기능 강화 및 규정 이해도 제고*

* 각 체크리스트 항목마다 자세한 설명 포함(예시)

(3) 외부강의등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소속기관 포함)에 해당하나요? (YES/NO)

* 국가, 정부부처 등의 소속기관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하기관은 신고대상 기관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기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윤리준법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신고 건은 직무유착성이 있나요?(YES/NO)

* 직무유착성이 있고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또는 기관에 대한 외부강의등은 사례금을 받고 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착성 관련 사례] B부서와 여신거래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직접적인 여신 상담 건의 유무와 무관) A고객사를 방문하여 당행 여신제도를 설명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 직무유착성 등이 인정되는 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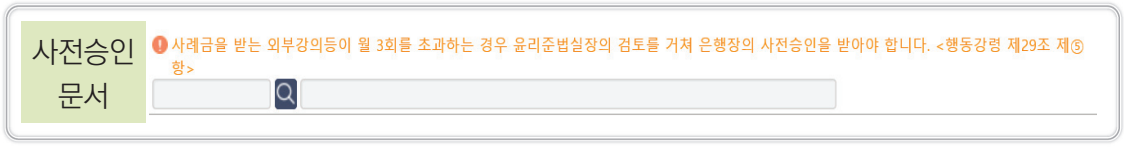
- **(자동산출 시스템)** 사례금 한도 초과 여부* 및 월 횟수제한 미준수 여부** 등 자동산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기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차단

* 체크리스트 정보 및 신고자 입력 강의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례금한도 자동산출 → 한도초과 시 팝업으로 안내

** 신고자가 강의일자 입력 시 해당 월의 총 강의횟수를 자동산출하여 안내

- **(편의성 제고)** 월 횟수제한 초과 시 은행장 사전승인 문서를 신고시스템에서 직접 검색·입력*

* 월 횟수제한 초과 시, 관련 은행장 사전승인 문서 입력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신고절차 진행 불가



●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직전연도 강의빈도 상위 10개 기관으로부터 당행 임직원의 강의내역을 징구받아 신고시스템 신고내역과 대사하는 등 점검 강화

● 맞춤형 교육 실시 등

- **(맞춤형 교육)**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외부강의등 횟수가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관련 일대일 맞춤형 교육 실시
- **(수시 상담)** 외부강의 관련 수시 상담 시스템 운영 및 Q&A 사례집 배포

추진성과

- 신고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모니터링 강화, 맞춤형 교육 등 종합 후속조치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전부점 대상 대대적인 실태 조사 및 결과 행내 공유(게시판 등),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전임직원의 경각심 및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계기
- 체크리스트 방식, 사례금 한도 자동산출 등을 통해 신고자와 점검자의 실수 방지가 가능한 외부강의등 신고시스템의 타기관 공유를 통한 우수 정책 확산 기대

05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1. 계약분야 비리예방
2. 내부 조직문화 개선
3. 민간협력 강화
4.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5. 청렴교육

1. 계약분야 비리예방

의약품 입찰 방식의 공정성·투명성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추진배경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연간 의약품 사용액은 약 250억 원 규모로, 기관 자체수입 재원으로 집행되는 품목에 대한 단일계약 중 최대 규모

- 그러나 단가계약 대상 품목이 많고(1,000개 이상),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계약의 난이도가 높고, 부패 가능성 상존
  - 신약 개발에 따른 신규 의약품 도입과 건강보험 수가 변화에 따른 보험-비보험 전환, 고시가와 보험급여액 변동, 제조사의 제조중단 등으로 연간 사용량 추정이 어렵고 계약 체결 전·후 단가 변동도 빈번할 뿐 아니라 약품품절과 품절약품에 대한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단가계약 품목 자체의 변동이 자주 발생
  - 따라서 계약부서와 약품 공급 업체(제약사, 도매상)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의사-제약 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 2018년 기관 자체감사에서도 의약품 단가계약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요구

  ⇨ 의약품 계약을 기관의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개선 추진

추진내용

- 입찰그룹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업체들 간 가격 경쟁 유도
  - 기존의 의약품 단가계약은 계약 규모가 크고 그룹결정 결과가 입찰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그룹배분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없이 구매부서 담당자와 부서장이 입찰그룹을 결정
  - 개인의 일탈·비위 또는 이해관계자의 외압 등에 의하여 입찰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음
  - 이에, 아래와 같이 입찰그룹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제약사-약품 도매업체 간의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품 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약품 입찰그룹 배분 기준 〉

1단계		2단계
의약품의 경합여부(경합/단독), 건강보험 적용 여부(보험/비보험), 약품 특성(수액, 마약류, 조영제 등) 등을 고려하여 1차 구분	⇨	연간사용금액 및 사용량이 각 그룹에 균등 배분되도록 입찰 그룹을 구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개선
  - 기존에는 입찰 "그룹별 비율총합, 단일예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의학원 의약품 납품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패 가능성 존재
  - 이에, 의약품 그룹별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복수예가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 담당자 및 특정 업체의 예정가격 정보 독점 방지

- 입찰 참가자격 확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 기존에는 마약류 입찰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찰 자격을 관내 업소로 제한하여, 다수의 마약류 도매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쟁에 의한 의약품비 절감 등의 이익 실현 기회를 상실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다수의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추진성과

- 의약품 입찰제도의 개선으로 입찰 · 계약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및 의약품비 절감을 통한 환자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
  - 의약품 입찰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한 결과 업체들의 경쟁이 활발*해 졌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약품비 절감 효과(2019년도 16.5억, 2020년도 38억/추정치) 발생

    * 입찰 참여 업체 수 : 13개('18년) → 24개('19년) → 33개('20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처방 ·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평가 결과, 2019년 하반기의 처방 · 조제 약품비 저가구매 장려금은 135,552천원으로 2018년 하반기(77,247천원) 대비 75% 증가

    * 「처방 ·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은 요양기관에서 처방 ·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는 기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기 단위(연 2회)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19년 하반기에 저가 구매에 대해 135,552천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음.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조직 내부적으로 의약품 선정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및 기관에 실익이 없다는 냉담한 반응
  - 의약품 선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인해 내부에서 의약품 선정 어려움 토로
  - 의약품은 대부분 고시가 물품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힘들여 개선을 하여도 기관에는 실익이 없다는 반응
-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쟁입찰을 통한 약가인하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그리고 기관 의약품 계약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설득 및 홍보

2. 내부 조직문화 개선

기관장 주도의 청렴교육 강화

국립암센터

추진배경

- 기관 내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패 유발적 의료 조직문화를 척결하고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관 주도 청렴교육 강화 정책' 추진 필요

- 이에 대하여 기관장 등 고위직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 청렴교육 직접 강의 등 '기관 주도 청렴교육 정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시

추진내용

- 청렴교육 기본강사 자격 취득과 청렴교육 강의
  - 기관장이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19.08.27.~08.30., 청렴연수원)을 이수하여 청렴교육 기본강사 자격을 취득
  - 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통한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청렴교육 주간('19.10.21~25)에 기관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청렴교육(2회)을 실시하였고 특히, 동 교육주간에 업무직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교육 참여율을 45.1%에서 84.2%까지 높여 업무직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음

    ※ 2019.7월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업무직(550명)에 대한 청렴교육 참여 제고 방안 강구 시급

- 청렴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및 청렴문화 확산 도모
  - 기관 확대간부회의, 그룹웨어 등을 통한 기관장의 의지를 담은 반부패·청렴 실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

- 계약업체 등 외부이해관계자 대상 청렴교육 시 기관의 청렴시책 실천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림

● 고위직의 청렴강사 자격 취득 추진

-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 사무국장 전문강사 자격 취득 추진,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수료('20.05.27.~05.29., 청렴연수원)

추진성과

●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직원의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유도

-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지속적 향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 (명, (%))
	이수자(명)	이수율(%)	이수자(명)	이수율(%)	이수자(명)	이수율(%)	
전체	1,109	52	2,160	78.3	2,333	83.2	173(4.9)
고위직	22	58	47	94	50	96.2	3(2.2)

●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고위직의 책임성 강화 및 반부패 추진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통하여 기관 청렴교육 내실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고위직의 청렴교육 정책 관심 제고 및 청렴 리더십 향상을 도모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기관 특성 상 직원 구성원 및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청렴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 교육시간과 근무시간의 중복 등 청렴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관장 및 경영진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을 독려

3. 민간협력 강화

민간 계약위탁업체와의 청렴파트너쉽 강화

서울대학교병원

추진배경

- (주)△△△△△은 병원의 구매 및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수많은 공급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
  - (주)△△△△△과의 구매경험 인식이 본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구매분야는 대표적인 부패취약 분야에 해당
- 이에 (주)△△△△△과의 청렴파트너쉽을 강화하여 민간의 청렴문화 확산 뿐 아니라 본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내용

- 청렴TF 활동에 계약사무 위탁업체가 함께 참여
  - **(청렴TF)** 원내 반부패 ·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감사실장을 TF팀장으로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조직문화 부문 등 7개 부문 총 2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 판매업체관리 부문에 (주)△△△△△을 참여시켜 본원의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에 도입될 수 있는 정책들을 협의
- 계약사무 위탁업체의 청렴성 강화 SNUH 반부패 정책의 (주)△△△△△ 활용사례
  - **(윤리실천서약)** △△△△△ 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윤리 실천조항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확보
  - **(사이버 신문고 홍보)** 공급업체 직원 200여명 대상 본원 Clean center 역할의 사이버 신문고 안내 및 홍보(2019.6.27.)
  - **(청렴메세지 발송)** 공급업체 2078처 SMS로 명절맞이 청렴메시지 발송(2019.9.4.)

- **(SNUH 청렴교육이수)** 조달대행 계약담당 직원(28명) 청렴교육 참여 및 이수(2019.6.4.~2019.7.19.)
- **(자체청렴도 조사실행)** 2019년 상반기 △△△△△과 계약, 견적접수, 응찰한 모든 공급업체 대상 설문조사진행(2019.7.5.~7.11.)

* 메일(4147개 업체) 및 SMS(6037개 업체) 발송, 412업체 응답

추진성과

● 계약사무 위탁업체와 청렴 파트너쉽 공고화

- 민간 기업의 청렴 수준 진단 및 개선활동 독려

● 본원의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에 대한 청렴도가 전년대비 한 개 항목을 제외한 전부분에서 개선됨을 확인

〈 조사결과 요약 〉

- 조사기간 : 2019.6.19.~2019.6.25.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본원 및 분당병원 거래업체 직원 약 1,250명
- 응답표본 : 256명(응답률 20.5%)

구분	설문내용	19년	18년
업무투명성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	85.3	72.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 적합성	81.6	68.1
업무책임성	업무처리의 적극성	85.3	71.4
	업무처리의 권한 남용	79.5	80.1
부패인식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	89.0	83.6
	지연·혈연·학연 관계 영향	89.2	84.8
	위법·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청탁	90.2	87.7
	위법·부당한 사익 추구	91.0	88.0

3. 민간협력 강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업체와 청렴동행 교육 시행

충북대학교병원

추진배경

- 청렴도 측정 결과 편의, 특혜, 공통경비 직 · 간접 경험률이 공공의료기관 평균점수 대비 낮은 점수 획득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4월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보건 · 의료분야 부패 관행 개선항목을 본원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 절감
- 전반적으로 기관의 청렴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활동 전개

추진내용

- 의약품이나 진료 재료 등 납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원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약 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청렴 동행' 교육 실시
  - 부패행위 정의, 부패행위 신고 필요성,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쉽게 풀어 설명하여 당해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
-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의 금품 · 향응 요구와 관련한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 내용을 알려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요청

추진성과

- 2개년 연속으로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여 시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통상적으로 청렴업무 담당자 외에는 적극적인 관심이 미비한 부패신고제도에 대하여 최소 본원 납품업체 관계자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부패척결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함으로써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신고의식 향상에 기여

- 외부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기관의 업무특성을 활용하여 민간부문과 접점을 발굴해 청렴교육 실시한 결과 상호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행력 확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의약품·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청렴시책임을 인지하여 차선책으로 이메일 및 유선 등을 통한 서면자료 배포
  - 서면자료 배포 시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향후 재계약 가능이 있는 업체까지 포함시키는 등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대면교육보다 약 34배 증가한 997개 업체에게 청렴동행 교육 시행
- 서면자료와 더불어 상임감사의 청렴서한문도 배포함으로써 본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도 전달하여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상당 부분 상쇄

4.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연구비 및 연구과제 관리 강화

인천대학교

추진배경

- 대학 구성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대나무 숲」에 연구비 공동관리 등 교원의 연구비 편취 제보에 따라 연구비 관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 자체감사 결과 연구비 미정산 및 제출기한이 종료되었으나 미제출된 연구과제가 다수 확인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리강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연구비 및 연구과제 관리 문제점

-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연구비 공동관리' 관행
- 제출기한이 종료된 연구과제 미제출 사례의 만연
- 자체연구비 연구과제 미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 미흡

추진내용

- 연구비 관련 자체감사 강화 및 엄중 조치
  - 연구비 부정관련 특정감사를 통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연구비를 편취한 교원에 대해 "중징계" 및 횡령혐의 고발 조치('21.6.15파면)
  - 연구비 관리 중점감사를 통한 연구과제 미제출 교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연구비 환수(7명/87,000천원)
  -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개정으로 연구비 관행 획기적 개선

주요 개정내용

-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공동관리 제재조항 신설('19. 2. 15)
- 실적물 미제출자에 대한 자체연구비 등 교내 연구지원 제한 제재조항 신설('19. 11. 11.)
- 실적물 제한기한 경과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 미인정 조항 신설('20. 7. 28)

  - 자체연구비로 취득한 연구기자재 법인대학 자산에 귀속 조치(492건/571,464천원)

● 자체연구비 미제출 연구과제 단계별 관리 강화 방안 마련('20. 8. 4.)

- 연구비 반환 불응 시 급여 원천징수, 내용증명 발송, 청구소송 및 가압류 신청 등 강력한 제재 이행

1단계	연구비 반환 통보	제출기한 종료 6개월 전과 1개월 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과제 실적물 미제출 통보 ⇨ 기한 종료 후 과제 연구비 전액 반환 통보
2단계	연구비 반환조치	1단계 연구비 반환 통보 후 30일 이내 반환 조치 반환대상액 일시납 또는 급여 원천징수(1년 이내)
3단계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한 경과 후 연구비 미반환 시 내용증명 발송
4단계	채무이행 청구소송 및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의 반환기한(1개월) 경과 후 연구비 미반환 시 채무이행 청구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 검토

〈 2020~2021년 미제출 연구실적물 관리 강화 추진실적 〉

급여 원천징수	내용증명 발송	연구비 반환 소송
23건, 299백만 원	10회(7명)	3명, 204백만 원

● 연구비 부정방지 대책 강화

- 연구비 부당수급 및 부당집행 예방 교육 확대 실시

※ 기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교육참석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실시(671명)

- 연구비 사전 감사 서비스 실시(458개 과제 중 264개 과제 보완)
- 학생인건비 지급 문자 발송 체제 구축(7,222건)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 시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20. 7. 28.)
- 연구비 부정방지 신고센터 운영(신설) : 연중(수시)

추진성과

● 연구실적물 미제출 자체연구비 환수로 법인회계 재정 획기적 확충

〈 실적물 미제출 연구과제 연구비 환수 현황 〉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7월 현재)
943백만 원	396백만 원	399백만 원	148백만 원

- 연구실적물 관리 강화로 연구비 집행관리 및 연구실적물 제출 등에 대한 교원의 경각심 제고
- 자체연구과제 제출기한 초과 미제출 실적물의 현저한 감소
- 연구분야 부정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 연구비 환수에 따른 교원 반발 등이 우려되었으나 학교측의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 등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간의 연구비 관리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연구비 부정 및 연구실적물 미제출 등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으로 연구비 관리의 내실화 도모

4.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한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전남대학교병원

추진배경

- 최근 국가R&D사업 투자 확대와 민간위탁 임상시험의 증가로 매년 연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전산시스템으로 국가연구비관리 규정 및 지침 등의 시스템 적용이 미흡하고 연구비 집행 시 사전 통제기능 부재로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상존하여 체계적이며 투명한 연구비 관리 어려움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정밀실사 지적 사항(2016년)
  *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지 감사 지적 사항(2019년 5월~6월)

- 전체 연구비의 50%를 차지하는 민간위탁 임상시험 등 국가연구비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비는 연구자가 간이영수증, 개인 신용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적사항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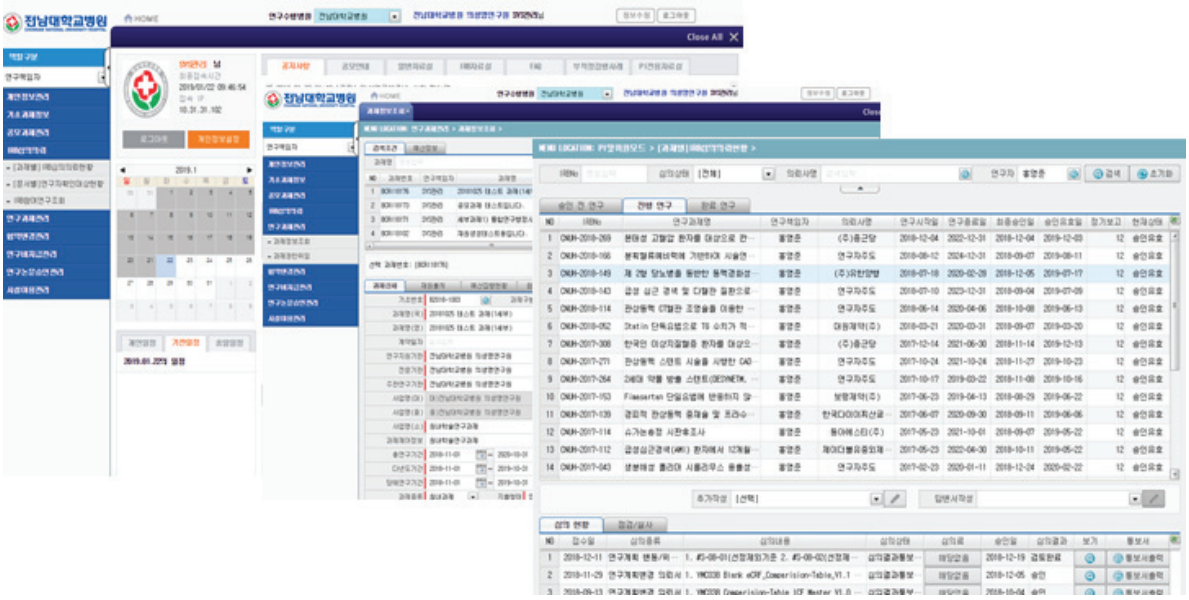
  * 병원 정기감사 지적사항(2016년) : 연구비 집행 증빙 부적절

- 국가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른 연구비 사전통제와 실시간 집행내역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새로운 연구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내용

- 전남대학교병원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 구축
  - 전 주기 연구지원업무를 하나의 화면에서 One-stop 수행가능한 시스템
  - 다병원 체계의 본·분원 연구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
  - 이지바로, RCMS 등 정부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연동
  - 금융기관 및 국세청 홈텍스 등과 연계로 연구비 증빙 서류 전산화
  -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 제도 시행 및 카드 승인내역 실시간 연동 관리

〈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현 화면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7.7월~2018.4월
- 구축업체 : (주)○○○○○○○
- 구축범위 : 연구자포털, 연구과제/연구비 관리, e-IRB, 임상시험센터, 연구실험부, 전임상실험부,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행정(인사 · 급여, 성과, 지식재산권 관리 등)
- 추진경과
  - 2016.12월 차세대 연구시스템인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 구축계획 수립
  - 2017.08월~2018.04월 시스템 개발사 선정 및 개발 착수
  - 2018.05월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면 오픈
  - 2018.06월 RCMS 및 이지바로 등 정부연구관리시스템과 연계 · 연동
  - 2018.08월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제도(클린카드) 전면 시행
  - 2018.12월 시스템 안정화 완료

추진성과

-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연구비 사전통제와 실시간 집행내역 모니터링으로 연구비 관리 투명성 확보
  - 통합이지바로, 통합RCMS 등 정부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지원기관별 연구비 정산관련 이중입력 제거

- 비목코드, 집행기준 등을 전문기관별 통제내역으로 설정하고, 기준정보에 의한 실행예산·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율 관리 및 연구비 청구 시 사전통제
- 연구자별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 발급 및 실시간 승인내역을 조회하고, 카드 집행에 대한 용도구분(비목구분) 및 사용내역을 수시 등록
- 금융기관 카드매입전표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 증빙 자료의 투명성 확보

● One-stop 통합시스템으로 연구자의 편리성 제고

- 전주기연구지원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구자는 연구과제공모 · 선정, e-IRB, 연구과제관리, 연구비신청, e-IACUC, 연구시설이용신청, 연구성과 등록 등의 업무를 하나의 화면에서 즉시 수행
- 전남대학교병원 본원과 분원(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병원 구분만으로 각 병원의 연구관련 업무 수행

● 병원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

-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사전통제와 연구비 증빙 서류 전산화, 각종 부가 증빙문서(회의록, 자문료, 출장신청서 등)의 자동생성 및 출력지원을 통해 연구관리 업무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관리인력 증가를 최소화
-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 전남대학교병원과 분원(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등)의 공용 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서 본원 및 분원에서 별도로 지출되던 개발비 및 연간 유지 보수비 절감

4. 기관 고유업무 부패취약분야 개선

학사관리 및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 대책

부경대학교

추진배경

- 성적부여 및 입시 관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대학의 대책방안을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추진내용

1 학사관리 공정성 강화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강 시 사전신고 및 성적 공정 여부 확인 규정 조항 신설
  - **(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강화)** 교수-자녀 간 수강회피 등을 수강편람 및 수강신청시스템 등에 해당내용 공지
  - **(사전신고제 도입)** 교수-자녀 간 수강할 경우 대학 본부(학사관리과)에 반드시 사전 신고
  - **(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자녀에 대한 최종성적 부여 시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과 제출
  - **(공정성 문제 발생 시)** 총장 주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인 출석 여부, 과제물 제출 여부,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평가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

2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 대학입학전형 평가 시 교직원의 사적인 개입으로 인한 특혜를 막기 위해 회피·배제 시스템 매뉴얼을 정비('20.8.)
  - **(대상 및 범위)**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모든 전임교원 및 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친족을 포함한 모든 지인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회피·배제

- **(절차)** 자진 신고, 시스템 검증, 재검증, 사후검증으로 이루어지며, 검증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후 조치

  * 「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19.10.31.)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

〈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단계 〉

자진신고		시스템 검증		재검증		사후검증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받는 단계	⇒	지원자 자료에 대한 교직원 자녀 및 친인척 검색	⇒	자진신고 자료와 시스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전형에 참가한 교직원을 확인하여 논의하는 단계	⇒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 실시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서류의 표절·대필·허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도검색시스템 매뉴얼 정비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서류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정비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대학 내, 대학 간 자료 및 당해연도, 과년도 지원자 자료를 포함해 자료의 유사 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표절 심의 대상자를 분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 이용

- 본인 확인, 심층 면접 등의 방법으로 표절확인 후 재확인을 통해 표절확정대상자로 분류하고, 이후 표절·대필·허위의 정도에 따라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 결정

〈 유사도 검색시스템 검증 절차 〉

검증대상		서류검증		표절확인		재확인		표절판정		재검증
검증 대상 서류 확인	⇨	유사도 검색 실시, 표절심의대상자 분류	⇨	내용의 진실성 고의성 확인	⇨	입학사정관 심의위원회 재확인 후 표절 확정 대상자 분류	⇨	최종 표절 확인 후 서류 평가 반영 방법 결정	⇨	전형종료 후 재검증

추진성과

-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7년 연속 선정('15년~)
  - 교육부 평가 결과 대입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전형구조 단순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에 높은 평가

5. 청렴교육

예비 사회인 단계의 재학생 대상 정규 교양 교과목에 청렴특강 편성·추진

서울대학교

추진배경

- 예비 사회인 단계인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과제 추진을 통하여 청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

추진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연수원과 협력하여 사범대학 학점강의(교과목명 : 국가와 시민)에 4주간에 걸친 청렴 특강 개설

1 대상강의 선정 ➜	2 특강 방법 선정 ➜	3 실행 및 피드백
• '청렴'이란 주제와 유관한 교양과목 선정	• 교수자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 추진	• 4회 교육 과정 실행 • 청렴특강 종료 후 학생들의 의견 피드백

- 대상 강의 선정

교과 구분	개설 학과	대상 강의	특강 개설시기	수강 인원	학점
교양	윤리교육과	국가와 시민	2019학년도 2학기 강의 중 청렴 특강 4차시 개설 (2019.10. 21. ~ 11. 11.)	25명	3학점

● 특강 방법(내용) 선정

1주차 (2시간) 청렴의 개념 파악 ➜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소개
- 윤리적 민감성 키우기(클린에듀넷 대표 정헌영)
- 청렴역량 4요소를 점검하고 일상사례를 통해 청렴민감성을 강화

2주차 (2시간) 제도의 이해 ➜

- 반부패 법령과 제도 (정부활동 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 양종삼)
- 청탁금지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3주차 (1.5시간) 가치관 토론Ⅰ ➜

- 청렴 배틀 토론Ⅰ(에듀웨이 대표 김성학)
-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찬성·반대그룹 대항 토론 전개

4주차 (1.5시간) 가치관 토론Ⅱ ➜

- 청렴 배틀 토론Ⅱ(에듀플랜 대표 박수정)
-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찬성·반대그룹 대항 토론 전개

● 실행 및 피드백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82.7점

구 분	교육구성 적절성	체계적인 내용 전달	강사 진행자자세
교육 전반	80.9점	80.0점	87.3점
평 균	82.7점		

-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 85.7점

구 분	강의 전문성	강의 기술	강의 태도
1주차	87.0점	85.0점	91.0점
2주차	81.1점	71.6점	81.1점
3주차	93.0점	92.0점	94.0점
4주차	84.0점	82.0점	87.0점
평 균	85.7점		

교육참가 소감

- 매우 만족합니다. 스스로의 청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 내가 그 동안 윤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 주제 자체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전달하셨다고 느꼈습니다.
- 실제 부패 상황과 국민들의 부패인식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음.
- 강의방식이 참신했고 스스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교육이 아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크게 공감했습니다.

추진성과

- 재학생 대상 청렴특강은 예비 사회인 단계에서 올바른 청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함

- 특히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념 파악 및 제도 이해를 기반으로 가치관 토론수업을 진행하여 자신의 청렴 가치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렴 의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공헌함

- 언론보도를 통하여 민간부문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실천함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와 반부패·청렴 강좌 개설"(2019.10.21., 이뉴스투데이)

부 록

색 인

(기관별 가나다순)

기관별 색인

(가나다순)

강원도교육청 ····· 99, 117
강원랜드 ····· 166, 1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34, 232
경기도 ····· 90, 94
경기도교육청 ····· 106, 119
경상남도교육청 ····· 109
경상북도교육청 ····· 112
경찰청 ····· 45
고용노동부 ····· 11, 26, 56
국가보훈처 ····· 34, 48
국가철도공단 ····· 207
국립공원공단 ····· 210, 243
국립암센터 ····· 264
국민건강보험공단 ····· 169, 241
국방부 ····· 51
국세청 ····· 36
근로복지공단 ····· 148, 176, 200
대구광역시 ····· 77
대전광역시교육청 ····· 1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92
문화재청 ····· 53
문화체육관광부 ····· 38
법무부 ····· 16, 32, 41
병무청 ····· 59
보건복지부 ····· 14
부경대학교 ····· 276
부산광역시 ····· 88

부산광역시교육청 ····· 104, 114
부산항만공사 ····· 178
서울교통공사 ····· 136, 225
서울대학교 ····· 279
서울대학교병원 ····· 266
서울특별시 강남구 ····· 70
서울특별시 강동구 ····· 73
서울특별시 도봉구 ····· 85
서울특별시 은평구 ····· 80
세종특별자치시 ····· 6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49
인사혁신처 ····· 19
인천대학교 ····· 270
인천도시공사 ····· 234
전남대학교병원 ····· 273
전라남도 ····· 6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59
제주특별자치도 ····· 75
중소벤처기업부 ····· 29, 42
충북대학교병원 ····· 268
충청남도 ····· 83
특허청 ····· 21
한국거래소 ····· 173
한국남부발전 ····· 180
한국도로공사 ····· 138
한국동서발전 ····· 197
한국마사회 ····· 252
한국무역보험공사 ····· 162, 2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15
한국서부발전 ····· 1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50

한국수력원자력 ····· 141, 189
한국수출입은행 ····· 165, 229, 255
한국에너지공단 ····· 15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82, 218
한국연구재단 ····· 221, 22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184, 237
한국원자력의학원 ····· 261
한국자산관리공사 ····· 1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6
한국전력공사 ····· 144, 146
한국전력기술 ····· 203
한국주택금융공사 ····· 205
한국지역난방공사 ····· 132, 2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194
환경부 ····· 24